

| | | | | | |
|------------------|----------------|-------------|--------|----------|------------------|
| 일련번호 | 1 | 감사자 | ☆급 ○○○ | | 공 개(○) 비공개() |
| 신분상 조치인원 | ○명 | 재정상 조치방법 | - | 재정상 조치금액 | - |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 가평군 가과 (나과) | 처분요구일자 | | 회신기일 | |

경 기 도

훈계 · 주의요구

제 목 계약 업무처리 부적정
소관기관(부서) 가평군 (가과)
조치기관(부서) 가평군 (나과)
내 용

1. 수의계약 업무처리 소홀

가. 업무 개요

가평군 가과(이하 “가과” 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이라 한다) 등에 따라 [표 1]과 같이 “○○○ 구입” 등 ○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1] 수의계약 체결 현황 “생략”

나. 판단 기준(관계 법령 등)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 계약 운영요령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G2B)에 일정기간(3일 이상) 수의계약 안내공고를 하고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공사는 87.745%(용역·물품은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수의계약 배제대상이 아닌 경우)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따르면 입찰의 참가자격은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이 필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시행령 제32조에는 수의계약 대상자의 자격에 관하여는 위 시행령 제13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가과는 수의계약 상대자를 결정할 때는 지정정보처리장치(G2B)에 작성·게시한 공고문에 명시한 견적제출 참가자격이 있는 자인지 면밀히 검토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가과는 [표 1]과 같이 202●. ▲. ■. 나라장터에 “○○○ 구입” 공고문(가평균 공고 제●호)을 작성·게시하면서 견적제출 참가자격을 ‘GPS수신기를 제조물품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로 제한하였으나 견적제출 업체의 자격요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위 물품의 제조업체로 등록되지 않은 □□기업과 39,578천 원에 수의계약을 체결하였고, 202▲. ●. ■. “□□□ 용역”을 추진하면서 공고문(가평균 공고 제▲호)에 참가자격을 ‘엔지니어링 사업자로서 건설부문(도로·공항, 상하수도, 구조, 토질·지질) 신고를 필한 업체’로 명시하였으나 이 중 토질·지질 분야만 신고한 △△기업과 54,357천 원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같은 해 ■. ▲. “△△△ 구입” 공고문(가평균 공고 제■호)을 나라장터에 게시하면서 참가자격을 ‘수중펌프 직접생산확인서를 소지한 자’로 제한하였으나 동 직접생산확인서를 소지하지 않은 ○○기업과 40,339천 원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결과 다수 업체에 공정한 입찰 참여기회를 제공하지 못하고 □□기업 등 ○개 업체에 수의계약 특혜를 주게 되었다.

2. 입찰참가자격 없는 업체와 용역계약 체결

가. 업무 개요

가과는 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 행사 개최 용역(협상에 의한 계약)”의 우선

협상대상자로 ●●기업(대표 A)을 선정하고 202●. ▲. ■. 용역 계약(계약금액 89,000천 원)을 체결하였다.

나. 판단 기준(관계 법령 등)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르면 입찰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하고, 입찰의 참가자격은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자격 요건에 적합한 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의 유무 및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202●. ■. ▲. 가과에서 나라장터에 작성·공고한 “○○○ 행사 개최 용역”(가평군 공고 제▲호) 공고문 입찰참가자격에 “공고일 현재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G2B)에 학술·연구용역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기관)로서 기타 자유업(행사대행업)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자”로 제한하였다.

따라서 가과는 입찰 참가업체가 입찰공고문에 명시한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업체인지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시 또는 계약체결 전이라도 반드시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업체인지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가과는 “○○○ 행사 개최 용역”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하면서 202●. ■. ▲. 사업부서인 다과로부터 ●●기업 등 ○개 참여업체에 대한 제안서 평가결과(정성, 정량)를 통보받고 같은 날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적으로 종합평가결과를 작성하면서 참가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유무를 확인하지 않은 채 [표 2]와 같이 학술·연구용역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은 ●●기업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그 결과를 다과에 통보하였으며 202●. ▲. ■. 위 업체와 89,000천 원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2] ‘○○○ 행사 개최 용역’ 참여업체 입찰참가자격 확인 결과 “생략”

그 결과 공공계약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3. 관련자 주장 및 판단

가. 수의계약 업무처리 소홀 관련

가과는 감사 결과를 수용하면서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나. 입찰참가자격 없는 업체와 용역계약 체결 관련

가과는 사업부서에서 정성 및 정량평가 시 입찰참가자의 자격유무 등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어 1차적으로 사업부서에서 입찰 참가업체의 자격유무 등을 검토하고 가과에 평가결과를 제출하여 이를 토대로 우선협상대상자를 결정하였던 사안으로 향후에는 사업부서에서 검토되었더라도 가과에서 최종적으로 재검토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정성 및 정량 평가항목에 입찰참가자의 자격유무에 대한 사항은 없으며, 사업부서에서 가과에 제출한 제안서 평가결과에도 참가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유무에 대한 검토내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주장대로 사업부서에서 1차 검토하였다고 하더라도 가과는 위 용역의 입찰 공고, 종합평가에 따른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최종 계약체결을 직접 수행한 계약 총괄부서로서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또는 계약체결 전 계약상대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유무 확인은 당연한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조치할 사항 가평균수는

- 계약 업무를 소홀히 한 아래 관련자를 「가평균 적극행정 면책과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 | | | | | |
|------------------|----------------|-------------|--------|----------|------------------|
| 일련번호 | 2 | 감사자 | ☆급 ○○○ | | 공 개(○) 비공개() |
| 신분상 조치인원 | ○명 | 재정상 조치방법 | - | 재정상 조치금액 | - |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 가평군 가과 (나과) | 처분요구일자 | | 회신기일 | |

경 기 도

훈계 · 주의요구 및 통보

제 목 직렬 불부합 승진 등 인사업무 처리 부적정
소관기관(부서) 가평군 (가과)
조치기관(부서) 가평군 (나과)
내 용

1. 업무 개요

가평군 가과(이하 “가과” 라 한다)는 「지방공무원법」, 「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가평군 정·현원 관리 및 인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6급 이하 직렬 불부합 승진임용

가. 판단 기준(관계 법령 등)

「지방공무원법」 제26조 및 제39조 제3항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공무원의 결원을 신규임용·승진임용·강임·전직 또는 전보의 방법으로 보충하되, 승진은 같은 직렬의 바로 하급 공무원 중에서 임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1개의 직위에는 1개의 직급을 부여하되, 업무의 성질상 일반관리업무가 전체업무의 100분의 50을 넘는 직위는 동일 계급 내에서 행정직과 다른 일반직의 복수의 직렬로 할 수 있으며, 업무의 성격이 특수하거나 1개의 직위에 2개 이상의 이질적인 업무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4개의 직렬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복수의 직렬(이하 “복수직위” 라 한다)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영 제30조 제

2항 및 제4항에 따르면 시·군·구의 6급 이하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 제청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47조 제1항 및 제3항은 근속승진을 하는 경우 근속승진된 직급의 정원은 증가된 것으로, 그 바로 하위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간주하되, 근속승진자가 승진, 전출, 퇴직 등 현원 소멸시 당초의 직급별 정원으로 환원 관리하여야 하고, 근속승진자가 아닌 직제상의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 중에서 통상적인 결원(승진, 전출, 퇴직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동 결원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직급으로의 신규임용이나 승진 등의 충원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가과는 결원 발생 등에 따라 승진임용을 하는 경우 「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이하 “정원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별표 5]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직렬별 정원표”(이하 “정원표”라 한다)의 범위 내에서 승진대상 계급 내 복수직위 설치 여부, 근속승진자 현황, 직제상 직렬별 정·현원 등을 모두 고려하여 승진대상 직렬 및 인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가과는 [표 1]과 같이 20■■■년 하반기 정기인사 당시 □ ○급의 경우 정원표 내 직위가 ‘■·◇·◆·□’(복수직위) 2명뿐으로 현원 1명을 고려하면 최대 결원이 1명인데도 불구하고, ○급 승진대상 전체인원 3명 중 2명을 □ 직렬로 결정하고 20■■■. ■■■. ■■■. 승진인사를 단행하였는데, □ ○급 2명 중 1명은 직제상 직렬에 부합하지 않은 승진임용에 해당한다.

[표 1] 가평군 20■■■년 하반기 정기인사 현황(□ ○급) “생략”

그리고 가과는 [표 2]와 같이 20■■■년 상반기 정기인사 당시에도 △ ●급의 경우 정원표 내 직위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근속승진자 2명을 제외하면 직제상의 정원이 없어 해당 직급에 결원이 있다 볼 수 없는데도 ●급 승진대상 인원 16명 중 1명을 △ 직렬로 결정하여 20■■■. ■■■. ■■■. 승진인사를 단행하였다.

[표 2] 가평군 20■■■년 상반기 정기인사 현황(△ ◎급) “생략”

그 결과 사전에 공표된 정원표에 따라 정·현원이 관리되고, 6급 이하 승진대상 직렬 및 인원이 결정될 것이라는 가평군 공무원의 신뢰를 저버리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다만, 가과는 20■■■. ■■■. ■■■. 정원규칙을 개정하면서 정원표의 ○급 직위 중 ‘■·◇·◆·□’을 3명으로 변경하여 □ ○급의 정·현원 불일치를 해소하였고, 20■■■. ■■■. ■■■. △ ◎급의 정·현원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정원 규칙을 개정하여 정원표의 ◎급 직위 중 ‘■·◇·◆’을 ‘■·◇·◆·△’으로 변경한 바 있다.

3. 20■■■년도 인사운영 기본계획(인력관리계획) 미수립

가. 판단 기준(관계 법령 등)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3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 목표의 달성에 필요한 효율적인 인적자원 관리를 위해 소속 공무원의 채용·승진·전보 및 경력 개발 등이 포함된 인력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1월 말까지 연간 인력관리계획을 작성,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후 공보·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소속 직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가과는 매년 1월 말까지 인력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하고, 그 내용을 가평군 소속 공무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가과는 [표 3]과 같이 매년 1월 말까지 수립하여야 할 가평군 인사운영 기본계획(인력관리계획)을 20■■■년에는 수립하지 않은 채 인사업무를 처리하였다.

[표 3] 가평군 인사운영 기본계획 수립 현황 “생략”

그 결과 매년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고 예측가능한 인사행정 구현을 위해 도

입된 인력관리계획 제도의 기본 취지를 훼손하는 초래하였다.

4. 가평군 도서관장 임용직렬 부적정

가. 판단 기준(관계 법령 등)

「도서관법」 제34조 제1항에 따르면 국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한다고 되어 있고, 「지방공무원법」 제26조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공무원의 결원을 신규 임용·승진임용·강임·전직 또는 전보의 방법으로 보충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가평군 도서관 운영 조례」 제2조 제5호에 따르면 도서관장¹⁾이란 도서관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6조 제1호는 다과장이 관장하는 사무로 도서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가과는 가평군 도서관장인 다과장을 임명하는 경우 직근 하위직급 사서직 공무원을 승진 임용하거나, 사서 자격을 갖춘 임기제 공무원을 외부에서 충원하는 등의 방법에 따라야 하고, 가평군 도서관장에 사서직만 임용될 수 있도록 「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등을 정비·관리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가과는 [표 4]와 같이 가평군 도서관장에 사서직이 아닌 직렬이 임용될 수 없는데도 「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에 다과장의 임용 직급으로 지방 사서사무관 이외에 지방■사무관 등 다른 직렬도 같이 규정하고 있다.

[표 4] 다과장(가평군 도서관장) 임용 직급 “생략”

그리고 가과는 1985년 가평군 중앙도서관(現 한석봉 도서관) 개원 이래 사서직 공무원을 도서관장으로 임용한 적이 한차례도 없던 것으로 확인되었고, 특히 [표 5]와 같이 20■■■년 상반기부터 20■■■년 하반기까지 승진후보자명부에 지방사서주사 1명이 등재되어 있었는데도 도서관장인 다과장에 승진 임용하지 않고 다른 직렬을 임명해 왔다.

1) 가평군은 한석봉도서관, 설악도서관, 청평도서관, 조종도서관 등 국립 도서관 4곳을 설치·운영하고 있고, 도서관장은 이 4곳을 모두 총괄한다.

[표 5] 지방사서사무관(승진직급) 승진후보자 명부 “생략”

그 결과 도서관장에 사서직이 아닌 직렬이 임용되어 「도서관법」의 목적과 취지에 반하고, 가평군 도서관 업무의 전문성이 의심받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5. 관련자 주장 및 판단

가. 6급 이하 직렬 불부합 승진임용에 대하여

가과는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를 인정하고, 직렬 불부합을 시정하기 위해 정원 규칙을 개정한 점을 고려하여 선처해 주기 바라며, 앞으로 관계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여 같은 사례가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나. 20■■■년도 인사운영 기본계획(인력관리계획) 미수립에 대하여

가과는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를 인정하고, 앞으로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매년 인력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등 인사운영을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 가평군 도서관장 임용직렬 부적정에 대하여

가과는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를 인정하고, 앞으로 관련 조례 개정 또는 해당 직렬 임용 등 적절한 방안을 조속히 강구하여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이 적정하게 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가평군수는

- 인사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아래 관련자를 「가평군 적극행정 면책과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 앞으로 위 감사결과 지적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공무원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승진대상 직렬 및 인원을 결정하고 매년 인력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등 인사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 「도서관법」에 따라 가평군 도서관장에 사서직이 임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 | | | | | |
|------------------|----------------|-------------|--------|----------|------------------|
| 일련번호 | 3 | 감사자 | ☆급 ○○○ | | 공 개(○) 비공개() |
| 신분상 조치인원 | - | 재정상 조치방법 | - | 재정상 조치금액 | - |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 가평군 가과 (나과) | 처분요구일자 | | 회신기일 | |

경 기 도 통보

제 목 기간제 근로자 채용업무 처리 부적정
소관기관(부서) 가평군 (가과)
조치기관(부서) 가평군 (나과)
내 용

1. 업무 개요

가평군 가과(이하 “가과” 라 한다)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평군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이하 “가평군기간제규정” 이라 한다)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가평군 기간제 근로자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²⁾하고 있다.

2. 기간제 근로자 채용공고 생략 규정 미정비

가. 판단 기준(관계 법령 등)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부패 방지를 위한 제도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는 2019. 12. 2. ‘공무직 등 근로자 채용절차의 공정성 강화’ 권고안(의안번호 제2019-552호)을 의결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기관별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훈령, 예규, 조례 등) 내 채용절차 규정을 개정하도록 하였는데, 채용공고 생략 단서 규정을 삭제하거나, 또는 단서 규정을 두는 경우

2) 2023. 12. 31. 「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총괄부서는 다과에서 가과로 변경되었다.

명시된 구체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채용공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따라서 가과는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가평군기간제규정 내 채용공고 생략 단서 규정을 삭제하거나, 또는 단서 규정을 두는 경우 명시된 구체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채용공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개정했어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가과는 [표 1]과 같이 가평군기간제규정 제8조 제3항 단서가 채용공고 생략 단서 규정에 해당하는데도 2019. 12. 2. 이후부터 감사일 현재(2024. 7. 16.)까지 이를 삭제하거나 개정하지 않은 채 그대로 존치하였다.

[표 1] 가평군 근로자 채용공고 생략 규정 및 내부지침 내용 “생략”

그 결과 공무원 등 근로자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의 목적과 취지를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다만, 가평군기간제규정에 근거하여 기간제 근로자 세부운영 지침으로 마련된 「비정규직(기간제 근로자) 운영 및 채용 관리 지침」(이하 “가평군기간제지침”이라 한다)에는 예외적 공고생략 사유로 정규직의 파견·휴직 등으로 인해 긴급하게 결원 보충이 필요한 경우, 일시 간헐적인 업무, 그 밖의 특수한 사정이 있는 사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를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 기간제 근로자 채용면접 미 실시

가. 판단 기준(관계 법령 등)

가평군기간제규정 제8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르면 사용부서의 장은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부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하고, 서류전형 및 면접으로 자격에 적합한 사람을 채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가평군기간제지침에 따르면 예외적으로 채용공고 생략이 가능한 경우에도 서류·면접시험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가과는 사업부서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서류·면접시험은 반

드시 실시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가과는 [표 2]과 같이 최근 ○년간(20■■■ ~ 20■■■년) 사업부서에서 서류·면접시험 실시 없이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 수가 ●건에 이르렀는데도,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하였다.

[표 2] 기간제 근로자 채용 서류·면접시험 미실시 현황 “생략”

그 결과 가평균 기간제 근로자 채용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대외적으로 의심받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4. 관련자 주장 및 판단

가. 기간제 근로자 채용공고 생략 규정 미정비에 대하여

가과는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를 인정하고, 문제의 해결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가평균기간제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 등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나. 기간제 근로자 채용면접 미실시에 대하여

가과는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를 인정하고, 문제의 재발 방지를 위해 월별 기간제 근로자 고용현황 조사 시 사업부서에서 채용절차 이행여부도 같이 확인하여 제출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향후 가평균기간제규정 개정 및 기간제 근로자 업무 담당자 교육 등을 통해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가평균수는

- 앞으로 위 감사결과 지적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평균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을 개정하고, 서류·면접시험 등 채용절차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조치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 | | | | | |
|------------------|----------------|-------------|--------|----------|------------------|
| 일련번호 | 4 | 감사자 | ☆급 ○○○ | | 공 개(○) 비공개() |
| 신분상 조치인원 | - | 재정상 조치방법 | - | 재정상 조치금액 | - |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 가평군 가과 (나과) | 처분요구일자 | | 회신기일 | |

경 기 도

주의요구

제 목 화물자동차 허가기준(차고지) 및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관리 소홀
소관기관(부서) 가평군 (가과)
조치기관(부서) 가평군 (나과)
내 용

1. 업무 개요

가평군 가과(이하 “가과” 라 한다)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자동차관리법」,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허가 및 관리, 자동차 등록 및 임시운행허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화물자동차 차고지 임차기간 경과 미확인

가. 판단 기준(관계 법령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1항 및 제7항 제2호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³⁾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 및 [별표 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기준(제13조 관련)”에 따르면 차고는 자기 소유이어야 하지만, 화물터미널 또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 안의 주차장소를 차고로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타인 소유 토지(차고지를 포함한다)를 1년 이상 장기 임대하여 차고지로 사용하는 경우 등에는 전용 사용 부분은 자기 소유로 본

3)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허가취소, 사업정지처분 및 감차 조치 명령에 관한 권한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경기도지사에게 위임되었고, 「경기도 사무위임 규칙」 제2조 등에 따라 가평군수에게 재위임되었다.

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규칙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운송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제13조에 따라 차고지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그 차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서에 차고지가 자기 소유가 아닌 경우에는 차고지의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서 차고지 설치에 관한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하거나 감차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가과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지도·점검 시 차고지설치확인서 등을 통해 차고지가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되었는지 우선 점검해야 하고, 자기 소유가 아닌 경우에는 임차기간 만료 여부 등을 확인하여 그 기간이 경과했는데도 임대차계약 갱신, 신규 계약 체결, 자기 소유 차고지 증빙 등이 별도로 없다면 사업전부 정지 또는 허가취소 등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가과는 [표 1]과 같이 최근 ○년간(20■■■~20■■■년) 차고지 임차기간이 경과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운송사업자가 총 ●곳에 이르렀는데도 이에 대해 지도·점검을 소홀히 하고 행정처분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표 1] 화물자동차 차고지 임차기간 경과 내역 “생략”

그 결과 관내 화물자동차 차고지 관리가 허술하고, 불법 밤샘주차 문제를 사실상 방치했다는 의심을 초래하였다.

다만, 가과는 감사기간(사전조사기간 포함) 중 적극적으로 위법을 시정하기 위해 운송사업자 ●곳 중 ◇곳에서 임차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차고지설치확인서를 제출받아 차고지 기준을 다시 충족한 것으로 확인하였고, 임차기간 연장 등을 증명하지

못한 나머지 ◇곳에 대해서는 사업전부정지(30일) 등의 처분을 한 바 있다.

3.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관리 소홀

가. 판단 기준(관계 법령 등)

「자동차관리법」 제27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르면 자동차를 등록하지 아니하고 일시 운행을 하려는 자는 시·도지사⁴⁾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아야 하고,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허가하고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 번호판을 발급하여야 하며,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는 그 허가 목적 및 기간의 범위에서 임시운행허가 번호판을 붙여 운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는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 번호판을 임시운행 허가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하고, 시·도지사는 반납받은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 번호판을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폐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4항 제12호는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 번호판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에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가과는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기간이 만료되면 5일 이내에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 번호판을 반납받아 다시 사용할 수 없도록 폐기하여야 하고,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 번호판을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가과는 [표 2]과 같이 20■■■년 이후 임시운행 허가기간이 만료되었지만 5일 이내에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 번호판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가 총 ◎건에 이르렀는데도 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4)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및 허가증·번호판 교부와 반납,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은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제9조 등에 따라 가평군수에게 위임되었다.

[표 2]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 번호판 미반납 현황 “생략”

그 결과 미등록 자동차의 운행을 엄격히 금지하고 연구·개발, 신규검사·등록 등의 제한된 사유가 있는 경우 한정된 기간에만 운행을 허용하는 임시운행허가 제도의 기본 취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다만, 가과는 감사기간(사전조사기간 포함) 중 적극적으로 위법을 시정하기 위해 임시운행허가 번호판을 제대로 반납하지 않은 ◎건 모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4. 관련자 주장 및 판단

가. 화물자동차 차고지 임차기간 경과 미확인에 대하여

가과는 화물자동차의 차고지 임차기간이 경과한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다가 이번 감사를 통해 알게 되었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정처분 등을 하였으며,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 등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나.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관리 소홀에 대하여

가과는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를 받은 기간 내에 신규등록 절차를 진행하고 접수 등록관청에 임시운행허가 번호판을 반납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임시운행허가 번호판이 반납되지 않았음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다가 이번 감사를 통해 알게 되었고, 현재 미반납으로 확인된 건은 모두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가평균수는

- 앞으로 위 감사결과 지적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자동차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허가 및 관리, 자동차 등록 및 임시운행허가 등의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 | | | | | |
|------------------|----------------|-------------|--------|----------|------------------|
| 일련번호 | 5 | 감사자 | ☆급 ○○○ | | 공 개(○) 비공개() |
| 신분상 조치인원 | ○명 | 재정상 조치방법 | 추징 | 재정상 조치금액 | 33,678,080원 |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 가평군 가과 (나과) | 처분요구일자 | | 회신기일 | |

경 기 도

훈계 · 시정요구

제 목 지방세 지도점검 결과 미이행 부적정
소관기관(부서) 가평군 (가과)
조치기관(부서) 가평군 (나과)
내 용

1. 업무 개요

가평군 가과(이하 “가과”라 한다)는 「지방세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경기도가 실시하는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지도점검(구 합동조사, 이하 “지도점검”이라 한다)을 수검하고, 지도점검 결과 확인된 지방세 추징 대상에 대해 조사, 검토하여 누락된 세액을 부과·징수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판단 기준(관계 법령 등)

「지방세기본법」 제150조 제1항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지방세의 부과·징수, 그 밖에 이 법이나 지방세 관계법에서 정한 사항의 원활한 운영 및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내에 있는 시·군·구에 대하여 지도·조언을 하거나 그 운영·집행에 위법 사항이 있는지 점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세법」 제7조 제1항 및 제21조에 따르면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 세액 또는 그 부족 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지방세법」 제107조 내지 제116조에 따르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재산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징수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 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한편, 「지방세기본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르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 외의 지방세는 해당 지방세의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5년의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가과는 경기도의 지도점검 결과 확인된 지방세 추징 대상에 대해 면밀히 조사, 검토하여 적기에 누락된 세액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경기도는 2021. 5. 10.부터 5. 14.까지 가과의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 전반에 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후, 2020. 6. 0. 지도점검 결과 확인된 별장, 고급주택 중과세율 누락 등 16개 분야(체납 분야 제외)의 지방세 추징 대상 000건⁵⁾에 대해 미추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작성하여 조치 결과를 제출하도록 가과에 통보⁶⁾하였다.

이에 가과는 2021. 7. 7. 약 두 달간(지도점검 기간 포함)의 조사, 검토를 통해 000건은 추징 조치하였고, 나머지 000건 중 000건은 부과 대상이 아닌 것으로, 추가 조사가 필요한 0건은 조사 중으로, 제출 기한 내 추징하지 못한 000건은 부과 예정으로 각각 미추징 사유를 기재하여 조치 결과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가과는 조사 중으로 조치 결과를 제출한 A 소유의 설악면 0000 □□□-00번지 주택(취득세 및 재산세 각각 1건)에 대해 2020. 7. 00. 해당 주택이 중과세율 추징 대상인 별장으로 판단된다는 조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⁷⁾하였는데도 2020.

5) 각 분야별 건수 합계 기준(취득세: 300건, 재산세: 100건, 등록면허세: 100건, 주민세/지방소득세: 00건)

6) 경기도 가과-00000호(2020. 6. 0.) “2021 가평군 지방세 합동조사 결과 알림”

7) 가평군 가과-00000호(2020. 7. 20.) “2021년도 경기도 주관 지방세 합동조사에 따른 별장 조사 결과 보고”

11. ○. 취득세만 부과하였고, 이에 대한 재산세 8,235,040원은 부과하지 않았다.

또한 가과는 [표 1]과 같이 부과 예정으로 조치 결과를 제출한 사전입주 주택 추정 대상 등 8건에 대한 취득세 합계 24,925,820원을 감사일 현재까지 부과하지 않았다.

[표 1] 사전입주 주택 추정 대상 등에 대한 취득세 미부과 내역 “생략”

특히 가과는 사전입주 주택⁸⁾ 추정 대상 ○건([표 1] 연번 1~4)에 대해 해당 주택의 전력 사용량 등이 확인⁹⁾되고, 202○. 6. ○. 현장 확인 결과 사전 입주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출장복명서¹⁰⁾를 작성하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하수도 사용량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검토 보고서 등도 작성하지 않은 채 부과 제외하였다.

한편 경기도는 지도점검 결과를 통보하면서 각 세목별 추정 대상 중 다른 세목의 추정 대상 여부도 확인한 후 철저히 추정하도록 하였고, 특히 감면 주택 취득세 추정 대상의 경우에는 재산세 추정 여부도 확인하도록 하였다¹¹⁾.

그런데 가과는 [표 2]와 같이 감면 주택 취득세 추정 대상 중 ○건은 재산세 또한 추정 대상인데도 이에 대한 재산세 합계 1,677,690원을 부과하지 않았고, 이 중에서 임대사업자 B에 대한 2017년~2019년분 재산세 1,160,470원은 감사일 현재 부과의 제척기간[납세의무 성립일(매년 6.1.)부터 5년]이 경과하여 부과할 수 없게 되었다.

[표 2] 감면 주택 취득세 추정 대상에 대한 재산세 미부과 내역 “생략”

그 결과 세입 예산을 확보하는 데 지장을 주었고, 이미 한 차례 취득세가 부과된 납세자에게 약 3년이 지난 후 같은 사유로 재산세를 재차 부과하게 되는 등 세무 행정의 신뢰가 훼손되었다.

4. 관련자 주장 및 판단

8)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기 전 사실상 사용하고 있는 주택으로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과세 대상임

9) ㉠리 □□□-○○, □□□-○, □□□-○○는 전력 사용량이 확인되며, ㉠리 □□□-○○은 하수도 사용량이 확인됨(20년 기준 가평군 다소-○○○호(202○. 5. ○○.) “재산세 부과 관련 과세자료(월별 (지하수)하수도 사용량) 협조 요청 회신” 한국전력공사 가평지(요금)-○○○호(202○. 5. ○○.) “재산세 부과 관련 과세자료(월별 전력 사용량) 회신”

10) 가평군 가과-○○○○○·○○○○○·○○○○○호(202○. 6. ○.) “출장복명서”

11) 붙임2 문서 “2021년 가평군 추정세액 집계표” 상에 해당 내용 기재

가과는 감사 결과를 받아들이면서 당시 재산세 정기분 부과, 취득세 신고 접수 및 민원 처리 등으로 해당 건에 대해 부과하지 않은 사실을 인지하거나 면밀히 검토하지 못하였고, [표 2] 재산세 미부과 내역의 경우에는 당초부터 취득세 관련 사항으로 생각하여 재산세 추징 여부를 확인하라는 내용을 인지하지 못해 부과 누락되었다며, 누락된 건에 대해 즉시 부과 조치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가평군수는

- 지도점검 결과에 따른 지방세 부과·징수 이행 업무를 소홀히 한 아래 관련자를 「가평군 적극행정 면책과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 결과 확인된 지방세 추징 대상에 대한 부과·징수 이행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누락된 11건에 대하여 지방세 33,678,080원(부과일 기준 재산정)을 부과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 | | | | | |
|------------------|----------------|-------------|--------|----------|------------------|
| 일련번호 | 6 | 감사자 | ☆급 ○○○ | | 공 개(○) 비공개() |
| 신분상 조치인원 | - | 재정상 조치방법 | 추정 | 재정상 조치금액 | 576,045,110원 |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 가평군 가과 (나과) | 처분요구일자 | | 회신기일 | |

경 기 도 시정요구

제 목 사치성 재산 등에 대한 취득세 부과 소홀
소관기관(부서) 가평군 (가과)
조치기관(부서) 가평군 (나과)
내 용

1. 업무 개요

가평군 가과(이하 “가과” 라 한다)는 「지방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동산 등을 취득한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취득세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신고납부 의무를 적법하게 이행하지 아니한 자로부터 누락된 세액을 부과·징수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고급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누락

가. 판단 기준(관계 법령 등)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3호에 따르면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이하 “일반세율” 이라 한다)과 중과기준세율(1천분의 20)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이하 “중과세율” 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며, 고급주택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세법 시행령」(2020. 12. 31. 대통령령 제3134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4항 제1호, 제2호에서는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6억 원을 초과하고 1구의 건축물 연면적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거나 1구의 건축물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가액이 9천만 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고급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세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르면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며,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산출 세액 또는 그 부족 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가과는 고급주택의 일부를 취득한 납세의무자가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과소신고·납부하였다면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누락된 세액을 부과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가과는 A가 2020. 12. 21. 상면 ◎◎리 □□□-○○번지 외 ○필지 소재 고급주택¹²⁾의 일부¹³⁾를 취득한 후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과소신고·납부하였는데도 이에 대한 취득세 등 43,289,850원(가산세 합계)을 부과하지 않았다.

3.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누락

가. 판단 기준(관계 법령 등)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2호에 따르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의 입목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12)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 616,000,000원, 건축물 연면적: 344.1㎡, 대지면적: 3,211㎡, 건축물 가액: 136,951,800원

13) 상면 ◎◎리 □□□-○○번지 외 ○필지 토지 및 건축물(건축물 연면적: 334.1㎡, 대지면적: 1,304㎡)

그리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3항에 따르면 체육 시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중 회원제 골프장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골프장의 토지 중 골프코스, 주차장 및 도로, 조정지,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정지, 관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 보수용 잔디 및 묘목·화훼 재배지 등 골프장의 유지·관리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와 골프장 안의 건축물을 구분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가과는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납세의무자가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과소신고·납부하였다면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누락된 세액을 부과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가과는 [표 1]과 같이 B 등 ○인이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후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과소신고·납부하였는데도 이에 대한 취득세 등 309,246,77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지 않았다.

[표 1]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취득세 중과 누락 내역 “생략”

4.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부과 누락

가. 판단 기준(관계 법령 등)

「지방세법」(2021. 12. 28. 법률 제1865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및 제10조 제4항에 따르면 법인¹⁴⁾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¹⁵⁾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고,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 등의 총 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

14) 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

15)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

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2항에 따르면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등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고,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 등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가과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었거나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가 추가로 주식을 취득하여 지분율이 증가하였는데도 기한 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면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의 총 가액에 지분(증가)율을 곱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누락된 세액을 부과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가과는 [표 2]와 같이 C 등 ○인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었거나 추가로 주식을 취득하여 지분율이 증가함에 따라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간주 취득한 후 기한 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는데도 이에 대한 취득세 등 105,762,17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지 않았다.

[표 2]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부과 누락 내역 “생략”

5. 임시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부과 누락

가. 판단 기준(관계 법령 등)

「지방세법」 제9조 제5항에 따르면 임시홍행장, 공사현장사무소 등 임시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다만,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가과는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을 취득한 납세의무자가 기

한 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면 누락된 세액을 부과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가과는 별지의 [별표 1] “임시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부과 누락 내역” 과 같이 D 등 262인이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을 취득한 후 기한 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는데도 이에 대한 취득세 등 80,590,57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지 않았다.

6. 불법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부과 누락

가. 판단 기준(관계 법령 등)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에 따르면 부동산 등의 취득은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 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에 따르면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따라서 가과는 건축부서로부터 적발된 불법건축물을 사실상 취득한 납세의무자가 기한 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면 누락된 세액을 부과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가과는 별지의 [별표 2] “불법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부과 누락 내역” 과 같이 E 등 ○○인이 불법건축물을 사실상 취득한 후 기한 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는데도 이에 대한 취득세 등 37,155,75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지 않았다.

그 결과 세입 예산을 확보하는 데 지장을 주었고, 적법한 절차와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납세의무자와의 형평성을 저해하는 등 세무 행정의 신뢰가 훼손되었다.

7. 관련자 주장 및 판단

가과는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의 경우에는 매년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조사 당시 전산 자료 미연계 및 법인의 자료 미제출 등의 사유로 부과하지 못한 것으로 즉시 부과할 예정이며, 앞으로 사치성 재산 정기조사, 임시·불법건축물에 대한 과세자료 수시 대사 등을 통해 누락 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가평군수는

-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취득세 부과·징수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지방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신고·납부 의무를 적법하게 이행하지 않은 A 등 ○○○인에게 누락된 취득세 등 576,045,11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별지]

[별표 1] 임시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부과 누락 내역 “생략”

[별표 2] 불법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부과 누락 내역 “생략”

| | | | | | |
|------------------|----------------|-------------|--------|----------|------------------|
| 일련번호 | 7 | 감사자 | ☆급 ○○○ | | 공 개(○) 비공개() |
| 신분상 조치인원 | - | 재정상 조치방법 | 추정 | 재정상 조치금액 | 334,245,610원 |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 가평군 가과 (나과) | 처분요구일자 | | 회신기일 | |

경 기 도 시정요구

제 목 체납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누락
소관기관(부서) 가평군 (가과)
조치기관(부서) 가평군 (나과)
내 용

1. 업무 개요

가평군 가과(이하 “가과” 라 한다)는 「지방세징수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하면 해당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채권을 확보하는 등의 지방세 채권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판단 기준(관계 법령 등)

「지방세징수법」 제33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3호에서는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자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6조에 따르면 법인¹⁶⁾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

16) 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

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¹⁷⁾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 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 주식 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세징수법」 제1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려면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납부장소와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근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한 납부통지서로 고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가과는 독촉장을 받고도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세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체납 법인으로부터 압류할 재산이 없거나 이미 압류한 재산의 가액이 그 체납액에 미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과점주주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할 금액 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한 납부통지서로 고지하여 지방세 채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가과는 [표]와 같이 지방세를 체납 중인 주식회사 A 등 ○개 법인이 체납액에 충당할 법인 소유의 재산이 없거나 이미 압류한 재산의 가액이 그 체납액에 미치지 아니하여 해당 법인의 과점주주인 B 등 ○○인이 체납액 334,245,610원 만큼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해야 하는데도 감사일 현재까지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를 하지 않았다.

[표] 체납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누락 내역 “생략”

그 결과 위 체납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지방세 채권을 적시에 확보하지 못하여 체납액 징수가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17)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

4. 관련자 주장 및 판단

가과는 감사 결과를 인정하면서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을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가평군수는

-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세 채권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주식회사 A 등 9개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 B 등 10인에게 지방세 체
납액 333,245,610원을 납부고지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 | | | | | |
|------------------|----------------|-------------|--------|----------|------------------|
| 일련번호 | 8 | 감사자 | ☆급 ○○○ | | 공 개(○) 비공개() |
| 신분상 조치인원 | ○명 | 재정상 조치방법 | 추징 | 재정상 조치금액 | 89,058,660원 |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 가평군 가과 (나과) | 처분요구일자 | | 회신기일 | |

경 기 도

훈계 · 시정요구

제 목 국유재산 정기분 사용료 부과 부적정
소관기관(부서) 가평군 (가과)
조치기관(부서) 가평군 (나과)
내 용

1. 업무 개요

가평군 가과(이하 “가과”라 한다)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과 「경기도 사무위임 규칙」에 따라 국가와 경기도로부터 국유재산의 관리·처분 등에 대한 사무를 위임받아 「국유재산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국유재산의 사용 허가 및 승인, 사용료 징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판단 기준(관계 법령 등)

「국유재산법」 제2조 제7호 및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국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하며, 행정재산을 국가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사용 허가”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30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및 제35조 제1항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등에서 5년 이내로 행정재산의 사용 허가를 할 수 있고, 행정재산을 사용 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산출 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하고, 사용료의 납부 기한은 사용 허가를 한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사용·수익을 시작하기 전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가과는 소관 국유재산을 사용 허가한 경우에는 해당 국유재산의 사용 허가를 받은 자에게 허가 기간 동안 매년 정기분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가과는 국유재산 정기분 사용료 부과 업무는 1년에 1회 주기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업무인데도 2022년도 정기분 사용료 부과 대상 총 〇〇〇건 중 〇〇〇건은 다음 해인 2023년에 지연 부과하였고, 나머지 〇〇건은 감사일 현재까지 부과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2023~2024년도 부과 대상도 부과하지 않는 등 별지의 [별표] “국유재산 정기분 사용료 부과 누락 내역” 과 같이 사용 허가 〇〇〇건에 대하여 2022년도부터 2024년도까지의 정기분 사용료 합계 89,058,660원을 부과하지 않았다.

특히 감사일 현재 허가 기간이 종료된 사용 허가 〇〇건([별표] 연번 1~30)의 경우에는 허가 기간이 종료되었는데도 지난 연도 정기분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았고, 2022년부터 2024년까지를 허가 기간으로 하는 사용 허가 25건([별표] 연번 31~55)의 경우에는 3년분의 정기분 사용료 전부를 부과하지 않았다.

그 결과 국유재산의 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매년 사용료를 부과받아 납부해야 하는데도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채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허가 기간이 이미 종료된 후 사용료를 부과받게 되거나 또는 최대 3년분의 사용료를 한꺼번에 부과받게 되어 행정의 신뢰가 훼손되었다.

4. 관련자 주장 및 판단

가과는 감사 결과를 모두 인정하면서 담당자가 가평군 전 지역의 사용 허가와 불법 민원 및 단속, 용도폐지 업무 등을 동시에 수행하여 어려움이 있었던 점을 참작해 주기를 바라며, 누락된 정기분 사용료에 대해 조속히 부과·징수하겠다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가평군수는

- 국유재산 정기분 사용료 부과 업무를 소홀히 한 아래 관련자를 「가평군 적극행정 면책과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유재산 정기분 사용료 부과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사용 허가 414건에 대하여 누락된 정기분 사용료 89,058,660 원을 부과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별지]

[별표] 국유재산 정기분 사용료 부과 누락 내역 “생략”

| | | | | | |
|------------------|----------------|-------------|--------|----------|------------------|
| 일련번호 | 9 | 감사자 | ☆급 ○○○ | | 공 개(○) 비공개() |
| 신분상 조치인원 | - | 재정상 조치방법 | 회수 | 재정상 조치금액 | 2,621,930원 |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 가평군 가과 (나과) | 처분요구일자 | | 회신기일 | |

경 기 도

시정요구 및 통보

제 목 시간외근무수당 부정 수령 등 복무관리 부적정
소관기관(부서) 가평군 (가과)
조치기관(부서) 가평군 (나과)
내 용

1. 업무 개요

가평군 가과(이하 “가과” 라 한다)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복무 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2. 소속 직원의 시간외근무수당 부정 수령

가. 판단 기준(관계 법령 등)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르면 근무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외에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제5장 VI. 7. 초과근무수당 지급방법에 따르면 ①초과근무에 대하여 다른 방법으로 금전적 보상을 하는 경우, ③당직명령에 의한 당직근무자, ⑦「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2에 따른 제1호~제3호 비상근무자 등은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제외 대상으로 되어 있다.

또한 같은 지침 제5장 VII. 9. 초과근무수당 관리강화대책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초과근무수당의 부정한 운영이 없도록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분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소속 공무원의 초과근무 현황을 철저히 관리하고 부정하게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되지 않도록 점검하는 등의 내용을 부서장에게 반드시 교육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가과는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 등 규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1) 선거사무 종사자의 시간외근무수당 수령

초과근무에 대해 다른 방법으로 금전적 보상(수당)을 받는 공직선거 투·개표 종사자의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초과근무수당 지급 제외 대상자에 해당하는데도 ○ ▲급 A 등 ○명은 [표 1]과 같이 투표 사무원 근무 시간과 중복된 시간에 초과근무명령을 신청하고 시간외근무수당을 수령하였다.

[표 1] 선거사무 종사자의 초과근무 명세 “생략”

2) 을지연습 비상근무자의 시간외근무수당 수령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2에 따른 제1호~제3호 비상근무자’는 시간외수당 지급 제외 대상에 해당하고, 또한 경기도는 2022년, 2023년에 각각 안내 공문¹⁸⁾을 통해 을지연습 비상근무자와 비상소집으로 인한 조기 출근은 초과근무로 인정되지 않음을 강조한 바 있는데도 ○ ☆급 B 등 ○○명은 [표 2]와 같이 을지연습 비상소집 또는 비상근무 시간과 중복하여 초과근무를 실시하고 시간외근무수당을 수령하였다.

[표 2] 2022년~2023년 을지연습 비상근무자의 초과근무 명세 “생략”

3) 당직근무자의 시간외근무수당 수령

당직명령에 의한 당직근무자(재택당직 포함)는 초과근무수당 지급 제외 대상으로 되어

18) 경기도 가과-○○○○○(2020. 8. 00.) “2022년 을지연습 기간 중 공무원 비상소집 훈련발령 및 결과보고 방법 알림”
경기도 가과-○○○○○(2020. 8. 00.) “을지훈련 기간 유연근무해제 등 복무관리 알림”
경기도 가과-○○○○○(2020. 8. 00.) “2023년 을지연습 기간 중 공무원 비상소집 훈련발령 및 결과보고 방법 알림”

있으며, ‘다른 방법으로 금전적 보상을 하는 경우’에도 해당하므로 초과근무를 인정할 수 없는데도 ◇ ■급 C 등 ○명은 [표 3]과 같이 당직 근무와 중복하여 초과근무를 실시하고 수당을 수령하였다.

[표 3] 당직근무자의 초과근무 명세 “생략”

3. 건강검진 목적의 공가 사용 부적정

가. 판단 기준(관계 법령 등)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6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건강검진등¹⁹⁾을 받을 때에는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간 또는 시간을 공가로 허가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조의2 및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근무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소속 공무원에 대한 연 1회 이상의 근무시간, 출퇴근, 유연근무, 당직, 휴가 등의 복무 실태 점검 조치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가평군 소속 공무원은 건강검진을 목적으로 공가를 사용하는 경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6에 따른 건강검진 수검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간 또는 시간에 한하여 공가를 사용하고, 공가를 사용한 날에 부득이하게 검진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근무지로 복귀하거나 공가를 취소하고 연가로 변경하는 등 근무상황부를 적절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가과는 가평군 소속 공무원의 공가 부정 사용 등 복무 실태점검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가평군 소속 공무원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6 제5호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는 경우에만 공가를 사용하여야 하는데도 ◆ ◎급 D는 [표 4]와 같이 실제 건강검진 수검일이 아닌 날짜에 건강검진 목적의 공가를 사용하였다.

19)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결핵예방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등

[표 4] 건강검진 목적의 공가 부적정 사용 명세 “생략”

4. 관련자 주장 및 판단

가과는 당직근무자 등의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 사례가 확인된 만큼 앞으로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소속 직원과 부서장을 대상으로 분기별 교육을 실시하는 등 초과근무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공가 부적정 사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올바른 사용 기준을 안내하고,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에 따라 근무기강 확립을 위한 복무 실태 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등 위반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복무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A 등 관련자 ○○명은 감사 결과를 인정하면서 초과근무 관련 규정과 안내 공문 등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으로 부당 지급된 수당을 반납하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D는 을지연습 비상소집일 당시 유연근무 기간이었으며, 근무 시간(08:00~17:00) 후 비상소집과 중복되지 않는 17:00~21:00 동안의 초과근무 시간을 산정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비상소집일 조기 출근은 초과근무로 인정되지 않으며, 유연근무가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는바, 정당한 초과근무 시작 시점은 17:00가 아닌 18:00부터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조치할 사항 가평균수는

- 앞으로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 공가 부적정 사용 등의 복무 규정 위반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지급 실태 점검, 소속 직원 및 부서장에 대한 교육 실시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복무실태 점검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근무시간과 중복하여 초과근무를 실

시하고 수당을 수령한 A 등 ○○명으로부터 부정수령액과 가산징수액 등 총 2,573,410원을, 실제 건강검진 수검일과 다른 날짜에 건강검진 목적의 공가를 사용한 D로부터 해당 연도에 지급한 연가보상비 총 48,520원을 [별지]와 같이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별지]

[별표 1] 시간외근무수당 환수금액 명세 “생략”

[별표 2] 연가보상비 환수금액 명세 “생략”

| | | | | | |
|------------------|----------------|----------|--------|----------|------------------|
| 일련번호 | 10 | 감사자 | ☆급 ○○○ | | 공 개(○) 비공개() |
| 신분상 조치인원 | ○명 | 재정상 조치방법 | - | 재정상 조치금액 | - |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 가평군 가과 (나과) | 처분요구일자 | | 회신기일 | |

경 기 도

징계 · 훈계 · 주의요구 및 통보

제 목 동력수상레저기구 관리 업무 부적정

소관기관(부서) 가평군 (가과)

조치기관(부서) 가평군 (나과)

징 계 대 상 자 가과 □급 A

징 계 종 류 경징계

1. 업무 개요

가평군 가과²⁰⁾(이하 “가과” 라 한다)는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이하 “수상레저기구등록법” 이라 한다) 등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²¹⁾의 신규·변경·말소 등록 및 법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동력수상레저기구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과태료 부과 제척기간 경과 등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이행관리 부적정

가. 판단 기준(관계 법령 등)

수상레저기구등록법 제15조에 따르면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제15조 제1항 각 호²²⁾의 구분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20) 동력수상레저기구 관리 업무는 다과 마팀('18. 7월~'22. 1월) → 라과 마팀('22. 1월~'22. 7월) → 가과 바팀('22. 7월~현재)에서 수행 중

21) 추진기관이 부착되어 있거나 부착·분리가 수시로 가능한 수상레저기구 (수상오토바이, 모터보트, 고무보트 등)

22) 1. 신규검사: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경우

2. 정기검사: 등록 이후 일정기간(5년/수상레저사업에 이용되는 경우 1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또한 수상레저기구등록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5조 제1항을 위반하여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수상레저사업자는 제외)에게는 50만 원, 수상레저사업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하고,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는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가과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신규 등록 시에는 안전검사증 사본 등을 통해 안전검사 합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기존에 등록된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정기검사 수검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소유자에게 통지하여 안전검사를 조속히 이행하도록 촉구하는 등 수상레저활동을 즐기는 군민과 관광객의 안전과 직결되는 수상레저기구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안전검사를 장기간 이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과태료 부과 제척기간(5년) 내에 법령에 따른 과태료²³⁾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가과는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안전검사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만료가 예정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수시로 확인하고 소유자에게 이를 안내하는 등 관내 등록된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 수검 여부를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는데도 [표]와 같이 2018년부터 감사일 현재(2024.6.20.)까지 안전검사 안내문을 2021. 10. 25. 단 1차례 발송한 것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등록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그리고 가과는 2021년 2월 경기도 다과의 요청에 따라 “안전검사 미수검에 따른 과태료 부과현황²⁴⁾” 자료를 제출하면서 안전검사를 이행하지 않은 동력수상레저기구

23) 개인: 위반 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5만 원, 이후 1일 초과할 때마다 1만 원 추가(최대 30만 원) / 수상레저사업자: 50만 원

24) 최근 5년간('16~'20) 과태료 부과 현황: 2017년 1건

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누락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는데도 위반자에 대하여 처분 사전통지 등 아무런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2022년 2월에도 전년도와 동일한 내용의 자료를 제출하면서 이와 같은 사실을 재차 인지할 수 있었는데도 감사일 현재까지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하여 법령에 따른 과태료를 한 차례도 부과하지 않았다.

[표] 등록된 수상레저기구의 유효기간 만료 현황 “생략”

그 결과 2019년 8월 이후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64,600,000원²⁵⁾이 현재까지 부과되지 않아 과태료 부과 적시성을 상실하게 되었으며, 특히 과태료 부과 제척기간을 경과하여 더 이상 부과가 불가하게 된 과태료는 최소 36,700,000원²⁶⁾에 달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또한 정기적인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성능과 기능을 유지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제정된 수상레저기구등록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였고, 2024. 6. 20. 기준으로 등록된 동력수상레저기구 총 909대 중 28.4%에 해당하는 259대가 안전검사 유효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확인되는 등 관내에 등록된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게 되었다.

3. 미등록 동력수상레저기구 방치 등 (말소)등록사항 관리 부적정

가. 판단 기준(관계 법령 등)

수상레저기구등록법 제6조는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취득한 자는 취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하고, 등록되지 아니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수상레저기구등록법 제13조에 따르면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잘 보이는 곳에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등록번호판

25) 부과 가능한 과태료 [(개인 ○○대×300,000원)+(사업자 ○○대×500,000원)] = 64,300,000원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부과 제척기간(5년) 이내로 종료시점이 2019. 8. 1.이후인 위반자로 계산

26) 부과 불가한 과태료 [(개인 79대×300,000원)+(사업자 26대×500,000원)] = 36,700,000원

※ 과태료 부과 대상이었으나 현재는 안전검사를 이행했거나 등록이 말소되어 확인이 불가한 대상을 제외한 최소치

을 부착하지 아니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수상레저기구등록법 제30조 및 제32조는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취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제13조 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한 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등록되지 아니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수상레저기구등록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소유자는 등록 동력수상레저기구가 멸실되거나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존재 여부가 3개월간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등록증 및 등록번호판을 반납하고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0조 제2항은 소유자가 말소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말소등록을 신청할 것을 최고하고, 그 기간 이내에 말소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그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가과는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수상레저기구를 적발한 경우에는 소유자가 조속히 등록 절차를 이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미등록 수상레저기구가 운행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멸실 또는 분실되었거나 존재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말소등록 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가 계속해서 등록 상태로 유지되지 않도록 직권으로 말소등록 조치하는 등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사항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가과는 [그림]과 같이 202○. ○. ○. 가평경찰서 ◎◎파출소로부터 수상레저사업장의 바지선에 정박 중인 미등록 수상오토바이 ○대의 발견 사실과 이에 대한 조치 결과를 회신해달라는 통보를 받고도 미등록 수상레저기구는 소유자가 등록되어 있지 않아 과태료 부과 등 처분 대상자를 특정하기 곤란하다는 내용으로 202○. ○. ○○. 회신하였다.

그런데 가평경찰서에 확인한 결과²⁷⁾ 등록번호판이 부착되지 않은 동력수상레저기구가 운행·영업에 사용되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해당 수상레저사업장의 이용객이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사항이었으며 가평경찰서에서 통보한 문서에 첨부된 사진상에서도 지속적인 사용 흔적(긁힘, 발자국 등)이 확인되므로, 현장 출장을 통해 사실을 확인하여 위반 사항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는 등 조속히 조치할 필요가 있었는데도 가과는 공문 회신 후 현장에 출장하여 정확한 경위를 확인하려는 노력 없이 그대로 방치하였다.

그 결과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 의무 위반자에 대하여 적절한 처분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 안전검사 수검 여부나 보험²⁸⁾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미등록 동력수상레저기구가 수상레저사업장에서 지속적으로 운행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었다.

[그림] 미등록 수상레저기구 발견 통보 “생략”

한편 가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확인한 결과 장기간 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하거나 수년간 안전검사를 받지 않는 등 그 존재·사용 여부가 불분명한 동력수상레저기구가 장기간 등록 상태로 유지되는 등 부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가과는 말소등록 대상으로 판단되는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하여 소유자에게 확인 후 말소를 신청할 것을 안내하거나, 최고 절차를 거쳐 직권으로 말소 조치하는 등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사항을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는데도 법령상 의무 규정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와 같이 말소등록 업무를 방치하였다.

그 결과 등록 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 관리 효율성을 저해하였으며 타 법령에 규정된 다른 불법 사항²⁹⁾을 방치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4. 업무 담당자 등의 부당한 업무 처리

가과 바팀 A는 2020. 7. 0.부터 2020. 4. 00.까지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관

27) 당시 미등록 수상오토바이를 현장에서 직접 적발한 가평경찰서 000 경위에게 유선으로 질의(2020. 8. 00.)

28) 「수상레저안전법」 제49조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에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등록기간 동안 계속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29) 등록기간 동안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수상레저안전법」 제64조에 따라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리 업무를 담당하였고, B는 201○. 7. ○.부터 202○. 1. ○.까지 라과 마팀장으로, 그리고 202○. 8. ○.부터 현재까지 가과 바팀장으로 팀 업무를 총괄하였다.

가. A의 경우

위 사람은 202○. 7. ○.부터 202○. 4. ○○.까지 장기간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항해사 및 조종면허를 취득하고 직접 관공선을 운행하는 등 수상레저기구등록법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등록 및 안전검사와 관련한 규정을 잘 알고 있었으며, 경기도 ○○과의 요청에 따라 안전검사 미수검에 따른 과태료 부과 현황 자료를 2회 제출하면서 그동안의 과태료 부과 누락 사실과 관리 필요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

그런데 유효기간이 만료된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과태료 제척기간이 경과되도록 하였고, 관내에서 발견된 미등록 수상레저기구에 대하여 행정처분이나 등록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말소등록 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장기간 등록상태로 방치하는 등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 이행 관리 및 등록사항 관리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그 결과 “2항”, “3항” 와 같은 결과를 초래하였다.

나. B의 경우

위 사람은 담당팀장으로서 경기도 ○○과의 요청에 따라 202○. 2. ○. A가 기안한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미수검에 따른 과태료 부과자료 제출” 을 결재하면서 그동안 과태료 부과를 누락해온 사실을 확인하였는데도 업무 담당자로 하여금 적절하게 조치하도록 지도·감독을 하지 않았다.

그 결과 “2항” 와 같은 결과를 초래하였다.

5. 관련자 주장 및 판단

가과는 감사 결과를 인정하면서 수도권 수상레저의 중심지인 가평군의 지역 특성상 다양한 파생 업무(선착장의 인허가, 도선사업자와 유선사업자의 지도·감독, 수상레저사업자의 등록과 관리 업무,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 및 관리 업무 등)를 수행함에 있어 과

중한 업무 부담과 잦은 인사이동에 따른 담당자 변경 등으로 어려움이 따랐으며, 그에 따라 직접적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 지도단속(무면허 조종, 주취운전 등)에 집중하면서 안전검사 사후조치 업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못한 부분이 발생하였으나 관련 규정을 성실하게 연찬하여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며 선처를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한편 A는 2020년 신규 임용 공무원으로서 업무 연찬이 미흡하였고, 가평군에서는 과거에도 안전검사 미수검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관련규정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여 안전검사 미수검 수상레저기구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관리를 누락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20. 10. 00. A가 직접 기안한 문서³⁰⁾를 살펴보면, 관련자는 ‘「수상레저안전법」³¹⁾ 제59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 법 제2항 제8호에 따라 안전검사 기간 종료에 따른 과태료 부과 예정’, ‘안전검사 미수검 등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집행’ 등 안전검사 미수검에 따른 과태료 부과 규정을 명시하여 소유자들에게 안내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관련자는 적어도 2021년 10월 이후에는 관련 규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징계요구 양정 수상레저기구 등록 및 관리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가과 A의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위배된 것으로 같은 법 제6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조치할 사항 가평군수는

○ 동력수상레저기구 관리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아래 관련자를 「지방공무원법」

30)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유효기간 만료(예정) 안내” (다과-000000호)

31)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검사에 관한 사항은 법률 이해도 제고 및 수상레저기구 안전사고 발생률의 저감을 위하여 내용이 방대하고 복잡했던 구 「수상레저안전법」에서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로 분리·제정되었으며, 안전검사 미수검에 따른 과태료 부과 관련 규정은 신설·개정된 내용 없이 현행과 동일함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경징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징계)

- 담당자의 업무 감독을 소홀히 한 아래 관련자를 「가평군 적극행정 면책과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 높아진 국민의 안전에 대한 관심도와 의식 수준에 맞추어 안전한 레저 환경 조성 및 동력수상레저기구 소유자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하여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 장기간 안전검사를 이행하지 않고 등록 상태로 방치된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한 전수조사 등을 통하여 이미 멸실되었거나 사용되지 않는 기구와 단순 안전검사 미이행 기구를 구분하여 각각 말소등록 또는 과태료 부과 조치하는 등 동력수상 레저기구 관리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 | | | | | |
|------------------|-----------------------------------|-------------|--------|----------|------------------|
| 일련번호 | 11 | 감사자 | ☆급 ○○○ | | 공 개(○) 비공개() |
| 신분상 조치인원 | ○명 | 재정상 조치방법 | - | 재정상 조치금액 | - |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 가평군 가과, 나과, 다과, 라과, 마과 (바과) | 처분요구일자 | | 회신기일 | |

경 기 도

훈계 · 주의요구 및 통보

제 목 위원회 수당 지급 부적정

소관기관(부서) 가평군 (가과, 나과, 다과, 라과, 마과)

조치기관(부서) 가평군 (바과)

내 용

1. 업무 개요

가평군 소속 부서는 각 소관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공정성의 확보, 전문지식의 도입 등을 위해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각종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가평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등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참석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2. 판단 기준(관계 법령 등)

「가평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이하 “실비변상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르면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위원회는 법령, 조례, 규칙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각종 위원회 위원의 수당과 여비에 대하여 법령,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실비변상 조례 제3조에 따르면 위원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가평군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와 군의회 의원이 의원의 자격으로 출석하는 경우에는 참석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으며, 위원회 참석수당의 지급 기준은 [표 1]과 같다.

[표 1] 수당의 지급 기준 “생략”

한편, 「가평군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제8조에 따르면 가평군 제안서평가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가평군 유물수집 및 관리 규정」에 따르면 군수는 유물수집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가평군 유물수집심의위원회를 두고, 위원회는 수집대상 유물의 진위여부, 구입대상 유물의 가격 및 구입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고 되어 있으며, 군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할 때에는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가평군 소속 각 부서는 제안서평가위원회 등 위원회를 구성하고 참석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법령 및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실비변상 조례를 적용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정해진 지급 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가평군 가과 등 5개 부서는 제안서평가위원회 참석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면서, 실비변상 조례 대신에 다른 기관의 지침³²⁾을 준용하여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내부 결재를 받거나 이를 지급 공문에 명시한 뒤 [표 2]와 같이 실비변상 조례에 규정된 1일 최대 지급액인 150,000원(개정 전 100,000원)을 초과하여 수당을 지급하였다.

[표 2] 제안서평가위원회 수당 지급 명세 “생략”

한편 가평군 나과는 건립 중인 ○○○○○○○○의 전시에 필요한 유물(전시품)의 수집을 추진하면서 [표 3]과 같이 202○년 3월부터 202○년 6월까지 총 ○차례에 걸쳐 유물의 분류·감정평가를 위해 참석한 외부 전문가에게 실비변상 조례, 「가평군 유물수집 및 관리 규정」 등에 명시된 근거가 없는데도 임의로 인당 300,000원의 평가수당을 책정하여 지급하였다.

32)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조달청지침 제134호)

[표 3] 유물수집심의위원회 수당 지급 명세 “생략”

그 결과 조례의 지급 기준을 준수하여 수당을 지급한 다른 부서 소관 위원회 위원들과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회계 질서를 어지럽히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4. 관련자 주장 및 판단

가과는 당초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지급(2시간 이상, 일 최대 150,000원)하고자 하였으나, 다수의 평가위원이 참석수당 지급 단가가 낮다는 이유로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당일 불참 의사를 통보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원활한 추진이 곤란하여 부득이하게 타 기관의 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지급하였으며, 향후에는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나과는 경기도 내에서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좋지 못한 가평군의 지리적 특성상 제안서평가위원 모집에 있어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으며, 관련 자치법규의 개정을 통해 참석수당의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가평군 유물수집 및 관리 규정」의 유물수집심의위원회 수당 지급 사항을 개정·보완하여 근거 없이 수당을 지급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과는 관련 조례 확인을 소홀히 한 점에 대해 반성하며 향후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라과는 관외 평가위원 모집에 어려움이 있어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을 적용한 타 시군 사례를 검토하여 추진하게 되었으며, 향후에는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의견과, 가평군 자치법규 개정을 건의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가평군수는

- 별도 근거 없이 「가평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한 지급 기준을 위반하여 수당을 지급한 아래 관련자를 「가평군 적극행정 면책과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 앞으로, 위원회 수당 지급 시 「가평균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등에 따른 지급 기준을 준수하여 과다하게 지급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주의)
- 현실과 맞지 않는 수당 지급 기준으로 인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각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련 자치법규를 조리에 맞게 정비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 | | | | | |
|------------------|----------------------------|-------------|--------|-------------|------------------|
| 일련번호 | 12 | 감사자 | ☆급 ○○○ | | 공 개(○) 비공개() |
| 신분상 조치인원 | - | 재정상 조치방법 | - | 재정상 조치금액 | - |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 가평군 가읍 등 5개 읍·면 (나과) | 처분요구일자 | | 회신기일 | |

경 기 도

주의요구

제 목 주말·체험영농 목적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업무 처리 부적정
소관기관(부서) 가평군 (가읍, 다면, 라면, 마면, 바면)
조치기관(부서) 가평군 (나과)
내 용

1. 업무개요

가평군 가읍 등 5개 읍·면은 「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신청을 받아 취득 요건과 농지 소유 상한 등을 검토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판단 기준(관계 법령 등)

「농지법」 제6조부터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고,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소유 상한에 따라 신청 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면적에 취득하려는 농지의 면적을 합하여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이 1,000㎡ 미만일 경우에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또한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농림축산식품부 예규 제59호) 제8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체험영농에 이용하고자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세대원 전부가 신청 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면적에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0㎡ 미만일 경우에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도

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농지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르면 시·군·구·읍·면의 장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임야)대장, 주민등록등본 등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가평군 가읍 등 5개 읍·면은 농업인이 아닌 개인으로부터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신청을 받았을 경우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농지의 면적이 1,000㎡ 미만인지를 확인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여야 했다.

3. 감사 결과 확인된 문제점

가읍은 민원인 A가 관내 ○○리 ×××-×번지 농지(1,693㎡)를 포함한 ○개 필지, 총 2,707㎡에 대하여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신청을 하자 2021. ×. ××. 이를 발급하였다.

그리고 나면은 2022. ×. ××. ○○군 ○○면 ○○리 ××××번지 농지 715.5㎡ 등 ○개 필지에 대하여 민원인 B가 818㎡, 민원인 C가 818㎡를 각각 제출한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를 검토하면서 같은 세대원 전부가 신청한 농지의 총면적이 1,000㎡ 이상임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발급하는 등 가평군 가읍 등 5개 읍·면은 [표 1]과 같이 총 ○○건 8,763㎡ 농지에 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부적절하게 발급하였다.

그 결과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소유 상한을 좁게는 68㎡에서 넓게는 2,977㎡까지 초과하여 농지를 취득하게 되었다.

[표 1]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취득자격증명 소유상한초과 발급 명세 “생략”

4. 관련부서 의견

가평군 가읍 등 5개 읍·면은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가평군수는

- 앞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업무 추진 시 「농지법」에 따른 농지소유 상한 제한 규정에 위배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 | | | | | |
|------------------|----------------|-------------|--------|-------------|------------------|
| 일련번호 | 13 | 감사자 | ☆급 ○○○ | | 공 개(○) 비공개() |
| 신분상 조치인원 | ○명 | 재정상 조치방법 | - | 재정상 조치금액 | - |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 가평군 가과 (나과) | 처분요구일자 | | 회신기일 | |

경 기 도

훈계 · 주의요구

제 목 생산 · 보전관리지역 내 농지전용허가 업무 처리 부적정
소관기관(부서) 가평군 (가과)
조치기관(부서) 가평군 (나과)
내 용

1. 업무개요

가평군 가과(이하, “가과” 라 한다)는 「농지법」에 따라 관할 지역 농지에 대한 농지 전용허가(협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판단 기준(관계 법령 등)

「농지법」 제34조,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르면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업진흥 지역 3,000㎡, 농업진흥지역 밖 30,000㎡ 미만의 농지전용에 대한 허가(변경허가 포함) 및 협의에 관한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도록 되어 있다.

「농지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농지전용 허가신청서 등을 제출받은 때에는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농지의 전용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에 흠이 있으면 지체 없이 보완 또는 보정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농지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산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에 있는 농지를

단독주택 또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및 제3호) 부지로 사용하려는 경우 1,000㎡를 초과하여 농지의 전용을 허가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가 매년 발간하는 「농지업무편람」에 따르면 2인 이상이 동일한 농지(1필지)에 같은 종류의 시설 부지로 전용하고자 각각 농지전용을 신청한 경우 1인이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그 면적을 합산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농지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농지전용허가(협의)³³⁾를 한 후 ‘지방자치단체 행정시스템’ (서울시스템)에 허가(협의)받은 자의 인적사항, 농지소재지, 전용목적·면적 등을 포함한 농지전용허가(협의) 대장을 작성하고 있으므로 농지전용허가(협의) 신청을 받은 경우 서울시스템에서 민원인 및 해당 농지지번을 통하여 과거 농지전용허가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가과는 민원인으로부터 생산 및 보전관리지역 농지에 단독주택이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등 부지조성을 위한 농지전용허가 신청서를 접수할 시 하나의 농지를 2인 이상이 같은 시설 부지로 전용할 때에도 신청면적의 합이 1,000㎡를 초과하면 전용을 허가하여서는 안 된다.

3. 감사 결과 확인된 문제점

가과는 [표 1] ①항과 같이 2022. ×. ×. 민원인 A가 제출한 가평균 다면 ○○리 ×××-×번지 농지 795㎡에 대한 건축허가 신청 건을 검토하면서 2022. ×. ××. 민원인 B에게 동일한 농지에 동일한 목적(사무소)으로 전용허가한 총 971㎡(482㎡, 489㎡)의 면적을 합산하여 전용제한면적을 계산하지 않고 2022. ×. ××. 건축부서에 농지전용허가 의견으로 통보하였다.

그리고 가과는 [표 1] ②항과 같이 가평균 라면 ○○리 ×××-×번지 생산관리, 계획관리지역 농지 5,910㎡에 대하여 민원인 C, D, E, F, G, H가 각각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단독주택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2023. ××. ×. 신청한 농지전용허가 건을 검토하면서 신청된 전용허가면적을 합산할 경우 제한면적(1,000㎡) 초과 사실을

33) 복합민원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민원을 접수받아 농지전용허가를 협의하는 것을 의미

쉽게 알 수 있었는데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허가³⁴⁾하였다.

그 결과 「농지법」 제37조 등에서 허용하고 있는 농지전용 제한면적(1,000㎡)를 초과하여 총 ○건을 허가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그중 ○건은 건축행위까지 이루어지게 되었다.

[표 1] 전용제한면적(1,000㎡) 초과 농지전용허가 부당명세 “생략”

4. 관련부서 의견

가과는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감사기간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지전용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가평균수는

- 농지전용 업무를 부적절하게 수행한 아래 관련자를 「가평균 적극행정 면책과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지전용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34) 2024. ×. ×. 민원인 C 등 6명의 취하요청에 따라 실제 개발까지 이루어지지 않음

| | | | | | |
|------------------|------------|-------------|--------|-------------|------------------|
| 일련번호 | 14 | 감사자 | ☆급 ○○○ | | 공 개(○) 비공개() |
| 신분상 조치인원 | ○명 | 재정상 조치방법 | - | 재정상 조치금액 | - |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 가과 (나과) | 처분요구일자 | | 회신기일 | |

경 기 도

훈계 · 주의요구

제 목 사방지 관리 및 사방사업 추진 부적정
소관기관(부서) 가평군 (가과)
조치기관(부서) 가평군 (나과)
내 용

1. 업무개요

가평군 가과(이하, “가과”라 한다)는 「사방사업법」에 따라 관할지역에 대한 사방지 관리 및 사방사업 추진 등 사방 업무를 수행하면서 2023년에는 [표 1]과 같이 사방사업을 추진하였다.

[표 1] 2023년 사방사업 추진 명세 “생략”

2. 사방지 관리 업무 소홀

가. 판단 기준(관계 법령 등)

「사방사업법」 제2조,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르면 사방사업을 시행하였거나 시행하기 위한 지역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토지소재지의 지번·지목·면적 등을 고시하여야 하고, 사방지를 지정·변경한 때에는 사방지지정대장, 사방지정구역도를 작성·보관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4조, 제15조에 따라 사방지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입목·죽의 벌채, 토석·나무뿌리 또는 풀뿌리의 채취, 가축의 방목, 그 밖에 사방시설을 훼손·변경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고, 사방시설의 안전성 확

보를 위하여 점검 및 안전진단 등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이용정보체계를 이용하여 필지별로 지역·지구 등의 지정 여부, 행위제한 내용을 일반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지역·지구 등의 지정 내용, 행위제한 내용 등을 확인하는 서류의 발급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가과는 사방사업을 시행하였거나 시행하기 위한 지역은 사방지로 지정고시하고, 국토이용정보체계를 이용하여 필지별 사방지 지정 여부, 행위제한 내용 등을 일반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했다.

나. 감사 결과 확인된 문제점

가과는 [표 2]와 같이 다음 ○○리 산×× 등 5개 필지 내 925㎡에 사방담 ○개소를 조성하고, 다음 ○○리 ×××번지 등 ○○필지 내 215㎡에 계류보전사업³⁵⁾을 시행하고도 2024년 7월 감사일 현재까지 사방지로 지정 고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국토이용정보체계에도 그 정보를 등재하지 않았다.

그 결과 사방지 관리업무의 투명성이 저해되었고, 국민들은 「사방사업법」 등에서 정한 행위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지역임을 알 수 없게 되었다.

[표 2] 2023년 사방사업 관련 사방지 지정 명세 “생략”

3. 사방사업 현장대리인 관리 소홀

가. 판단 기준(관계 법령 등)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기술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산림사업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산림사업 현장에 산림기술자 등을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하고, 「사방사업법」 제8조에 따르면 건당 5천만 원 이상의 사방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산림공학기술자를 배치하도

35) 계류보전사업 : 계류(溪流)의 유속을 줄이고 침식 및 토석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방사업

록 되어 있다.

그리고 「사방사업의 설계·시공 세부기준」에 따르면 사방사업의 시공자는 사방사업의 공사 관리 및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하기 위하여 공사 착수와 동시에 산림공학기술자 1인 이상을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하고, 감독관은 사업 착수 전 현장대리인의 인적사항과 자격정보를 산림기술정보통합관리시스템(이하, “전산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하여 중복 배치 여부 및 자격정보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가과는 사방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시행자가 공사 착수와 동시에 산림공학기술자를 배치하도록 조치하고 감독관은 사업 착수 전 현장대리인의 인적사항과 자격정보를 산림기술정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가평군을 포함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현장과 중복 배치가 되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적정하지 않을 시 현장대리인 변경 요청을 하여 산림사업의 품질을 관리하여야 했다.

나. 감사 결과 확인된 문제점

가과는 [표 1]과 같이 가평군 다음 ○○리 산×××번지 등 3건의 사업을 수행하면서 사업 착수 전 현장대리인의 인적사항과 자격정보를 전산시스템에 등록하여 중복 배치 여부 및 자격정보를 확인하고 난 후 사업대상지 별로 산림기술법에서 정하는 산림공학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하나 사업시행자 A가 [별표 2]와 같이 현장대리인을 중복하여 배치하였는데도 가평군 사업대상지에 대하여 현장대리인 중복 배치의 적정 여부를 검토·승인하거나 전산시스템의 등록 및 조회를 통하여 다른 현장과의 중복 배치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그 결과 현장대리인의 중복 배치로 인하여 사방사업의 품질을 담보할 수 없게 되었다.

[표 3] 2023년 사방사업 현장대리인 명세 “생략”

4. 사방사업 안전관리 소홀

가. 판단 기준(관계 법령 등)

산림기술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르면 발주청, 산림기술용역업자 및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산림사업의 안전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산림사업시행업자는 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산림사업을 착수하기 전에 발주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제4항에 따라 발주청은 산림사업시행업자로부터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산림사업을 준공한 경우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고, 발주청은 제출받은 종합보고서를 해당 산림사업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완료되는 날까지 보존·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가과는 사방사업을 시행할 경우, 산림기술법에 따라 착수 전 산림사업시행업자로부터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아 관련 법률에 따라 심사하여 승인서를 발급하고, 사업 준공 후에는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제출받아 보존·관리하여야 했다.

나. 감사 결과 확인된 문제점

가과는 [표 1]과 같이 2023. ×. ××.부터 2023. ×. ××.까지 가평균 다음 ○○리 산×××번지 등 ○건의 사업을 수행하면서 산림사업시행업자로부터 착공계 제출 시 첨부 서류로 만 접수하는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심사하여 승인 여부를 검토하지 않았고,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보존·관리업무를 누락하였다.

그 결과 사방사업장 내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5. 관련부서 의견

가과는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방지 관리 및 사업추진을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가평군수는

- 사방지 지정 및 사업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아래 관련자를 「가평군 적극행정 면책과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방지 지정 및 사업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 | | | | | |
|------------------|------------|-------------|--------|-------------|------------------|
| 일련번호 | 15 | 감사자 | ☆급 ○○○ | | 공 개(○) 비공개() |
| 신분상 조치인원 | - | 재정상 조치방법 | - | 재정상 조치금액 | - |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 가과 (나과) | 처분요구일자 | | 회신기일 | |

경 기 도 시정요구

제 목 농어촌민박 사후관리 부적정
소관기관(부서) 가평군 (가과)
조치기관(부서) 가평군 (나과)
내 용

1. 업무개요

가평군 가과(이하, “가과” 라 한다)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어촌민박 신고확인증 발급 및 지도·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판단 기준(관계 법령 등)

「농어촌정비법」 제2조 및 제86조에 따르면 ‘농어촌민박사업’이란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소유 및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취사시설·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군수는 신고인의 주민등록표 초본과 건축물대장 등 신고내용을 확인하여 적합한 경우 신고인에게 신고확인증을 발급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농어촌정비법」 제86조 제2항 등에 따르면 농어촌민박사업은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 주민이 직접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이면서 주택 연면적 230㎡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농어촌정비법」 제88조,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에 따르면 시장은 농어

촌민박사업자를 지도·감독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어촌민박사업자에게 그 시설 및 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등³⁶⁾에 해당하면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사업장 폐쇄 명령 등의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매년 시달하는 「농어촌민박 사업시행지침」(이하, “사업시행지침”이라 한다)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반기 1회 이상 농어촌민박의 규모, 위생·소방안전 및 시설기준 준수, 용도변경, 민박사업자 거주 여부 등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연 1회 이상 소방서, 위생담당기관 및 부서, 건축담당부서 등 관련기관(부서 포함)과 합동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가과는 농어촌민박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통하여 농어촌민박사업자의 거주 여부, 신고사항 이외에 불법 숙박운영 여부 등을 확인하여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부서에 통보하고 농어촌민박사업자에게 관련 규정에 따라 개선을 명령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폐쇄명령 등의 조치를 하여야 했다.

3. 감사 결과 확인된 문제점

1) 농어촌민박사업자 정기 점검 및 거주요건 관리

가과는 관내 농어촌민박의 관리대상이 과다하고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다는 사유로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는 정기점검을 하지 않고 있었다.

또한, 2024년 가평군 종합감사 기간 중 가과를 통해 농어촌민박 거주요건을 전수(○○○○개소) 확인한 결과, 2017. ×. ××. 가평군 다면 ○○로 ××××번길에 위치한 농어촌민박사업 신고확인증(민박명칭: ○○○ ○○○)을 발급받은 A가 2024. ×. ×. 제주도 ○○○시로 주소지를 옮겨 실제 위 주택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당해 주택을 민박으로 계속 운영하는 등 [별표 1] ‘농어촌민박사업자 미거주자 현황’과 같이 사

36) 농어촌정비법 제81조 제2항에 따른 규모나 시설 기준을 위반한 경우, 제88조에 따른 시설 및 운영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정지 기간에 사업을 한 경우

업자의 직접 거주 요건을 위반한 ○○○개소에 대하여 개선명령 또는 사업장 폐쇄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2) 농어촌민박 미신고 숙박 운영 관리

2024년 가평군 종합감사 기간 중 관내 농어촌민박 ○○○○개소 중 ○○개소를 표본 추출³⁷⁾하여 가과에 점검을 요청한 결과, 가과는 2018. ×. ××. 가평군 라면 ○○로 ×××번길에 위치한 농어촌민박사업 신고확인증(민박명칭: ○○○○)을 발급받은 B가 사업자가 직접 거주하여야 할 공간에서도 숙박영업을 하고 있는 등 [표 1]의 ①항에서 ⑰항과 같이 총 ○○건의 불법사항이 있는데도 위법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표 1] 농어촌민박 불법 운영 명세 “생략”

그리고 가과는 2017. ×. ××. 가평군 다면 ○○○길 ×××-××번길에 농어촌민박사업(민박명칭: ○○○○)을 신고하여 운영하는 C가 인근 부지 건축물 ○동(주택 연면적 656.97㎡)을 신고하지 않은 채 같은 상호명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을 인지하였음에도 미신고 숙박시설이라는 이유로 다과에 위법사항만 통보한 후 농어촌민박 지도·감독 부서로서 관련 법령에 따른 개선명령, 사업장 폐쇄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표 1]의 ⑨항부터 ⑳항까지 총 ○○건의 불법 운영사례에 대하여 적절한 지도·감독을 하지 않았다.

그 결과 농어촌지역에 상업화·대형화된 펜션 등 숙박시설이 농어촌민박을 표방하며 영업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농어촌민박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었고, 행정기관의 지도·점검 없이 운영되는 불법 시설로 인해 이용객 안전이 취약해질 우려가 있으며, 법령을 준수하며 소규모 농어촌민박을 운영하는 농어민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초래되었다.

4. 관련부서 의견

37) 민박사업자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예약 어플, 항공사진 등을 검토하여 선정함

1) 농어촌민박사업자 정기 점검 및 거주요건 관리

가과는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운영실태를 점검하고자 2020. ×. ××., 2024. ×. ××. 라과 및 읍·면사무소 주민등록 담당 부서에 농어촌민박 사업자 주민등록 자료 제공을 요청하였으나 근거법령이 미비하다는 사유로 각각 자료제공이 거부되었고, 이와 관련 2020. ×. ××. 행정안전부에 질의한 결과 「농어촌정비법」 제2조 및 제88 조는 주민등록 조회의 근거 규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회신되어 농어촌민박 사업자의 거주지의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여건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가과에서 사업지침에 따른 정기점검을 성실하게 이행하였다면 주민등록시스템으로 조회하지 않더라도 농어촌민박에 직접 거주하지 않은 채 거주공간까지 영업에 이용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고, 거주요건 위반 정황이 의심될 경우 사업자로 하여금 사실확인을 위한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할 수 있는데도 감사일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농어촌민박 미신고 숙박 운영 관리

가과는 숙박업종의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할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행정지도 및 형사고발 하는 등 법령 관련 부서인 다과에서 조치하여야 하며, 가평균 다면 ○○○길 ×××-××번길의 농어촌민박사업(○○○)의 인근 부지 내 미신고 숙박업 운영을 인지 후 다과에 통보하여 2023. ×. ××. 고발 조치되었으므로 적절하게 처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가과 미신고 숙박업소는 네이버 포털 등 예약사이트에 ○개 업소로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개 건물을 농어촌민박으로 신고한 후 인접한 건물을 증축해 대규모 리조트처럼 운영하는 방식은 농어촌민박에 대한 정부합동점검에서도 대표적인 적발 유형으로 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다과에 통보한 것만으로 농어촌민박의 지도·감독부서로서 책임을 다하였다 볼 수 없다.

또한 위 주장은 2024년 가평균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농어촌민박 불법 운영 명세 총 ○○개소 중 ○건에 대한 주장에 불과하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조치할 사항 가평균수는

- 농어촌민박에 직접 거주하지 않고 운영하고 있는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고,
- 「농어촌정비법」,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하여 농어촌민박 또는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 영업을 한 자에 대하여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별표 1] 농어촌민박사업자 미거주자 현황 “생략”

| | | | | | |
|------------------|----------------|-------------|--------|-------------|------------------|
| 일련번호 | 16 | 감사자 | ☆급 ○○○ | | 공 개(○) 비공개() |
| 신분상 조치인원 | ○명 | 재정상 조치방법 | - | 재정상 조치금액 | - |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 가평군 가과 (나관) | 처분요구일자 | | 회신기일 | |

경 기 도

훈계 · 주의요구

제 목 협상에 의한 계약 업무 처리 부적정

소관기관(부서) 가평군 (가과)

조치기관(부서) 가평군 (나관)

내 용

1. 업무 개요

가평군 가과(이하 “가과”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에 따라 [표 1]과 같이 “ㄱ 운영대행용역”(이하 “문화 재생사업 운영 용역”이라 한다)을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추진하였다.

[표 1] “ㄱ 운영 용역” 계약 현황 : “생략”

2. 판단 기준(관계 법령 등)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는 최저가 낙찰 원칙 등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용역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창의성·예술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2조에 불구하고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정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 제8항에 따르면 제1항의 평가를 위한 계약이행능력 심사는 해당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사업수행계획, 재무상태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다고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³⁸⁾(이하 “낙찰자 결정 기준”이라 한다) 제7장 제3절 1. 다.에 따르면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 시 제안서의 평가요소와 평가방법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낙찰자 결정 기준 제3절 4. 사.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제안서의 평가를 위하여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해야 하고, 제안서의 평가는 가격평가와 기술능력평가로 구분하며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하는데, 가격평가와 기술능력평가 중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는 계약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거나 필요시 사업담당자에게 위임하여 평가하고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들이 평가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낙찰자 결정기준 제3절 5. 및 9.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으로 하며,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가과는 제안서의 기술능력평가 중 정량평가를 할 때는 입찰 공고 시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평가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점수를 부여하고, 이를 정성평가점수 및 가격 평가점수와 합산하여 최고 득점한 입찰참가자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택한 후 협상을 거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가과는 2023. 2. XX. 문화재생사업 운영 용역에 대한 평가요소와 평가방법이 포함된 제안요청서를 작성하여 회계과에 입찰 공고를 의뢰하였다.

그리고 가과는 입찰업체들에 대한 정량평가를 실시한 후, 2023. 3. XX. [표 2]와 같

38) 행정안전부 예규 제232호(시행 2023. 1. 1.)

이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합산한 기술능력평가 결과를 회계과에 제출하였고, 회계과는 같은 해 3. XX. 가과로부터 통보받은 정량·정성 평가 점수에 가격평가 점수를 더하여 ‘(주)○○○’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후 문화재생산업운영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2] 문화재생산업 운영 용역 정량·정성 평가 결과표 : “생략”

그런데 가과는 입찰 공고 당시 정량평가 중 신인도의 경우 제안서 제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부정당업체 제재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표 3]과 같이 평가 기준을 제시하였으나 2023. 6. XX. ‘(주)○○○’에서 제출한 신인도 증명서는 2020. 3. XX.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부정당업체 여부만 조회한 결과이므로 평가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데도 최근 3년 부정당업체 제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4점을 잘못 부여하였다.

[표 3] 신인도(부정당업체 제재여부, 제안서 제출일 기준 최근 3년) : “생략”

그 결과 [표 4]와 같이 평가기준에 따라 정당하게 평가하였다면 ‘(주)☆☆’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야 하는데도 협상 후순위자인 ‘(주)○○○’와 협상을 진행하여 최종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계약행정의 객관성과 공정성 및 신뢰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 4] 기술능력평가 및 가격평가 총괄 : “생략”

4. 관련자 주장 및 판단

가과는 위 용역 정량평가 시 공고문에 따라 제출된 자료만을 기준으로 평가를 하였는데,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 중 (주)○○○만이 신인도 증빙을 제출하여 당시 나라장터 부정당업자 정보조회(2020. 1. XX.부터 2023. 7. XX.까지)를 통하여 집행정지 부정당업자 제재 사실이 없는 결과를 확인하고 처리하고 공고 기준에 따라 신인도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주)☆☆³⁹⁾의 1개 업체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할 필요성이 없다 판단하고, 평가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담당자 ●●은 2024. 7. XX. 감사관과의 문답에서 확인서의 주장과 다르게 위
용역 제안서 정량평가 시 나라장터를 통한 부정당업체 제재 여부 확인 방법을 알지 못하여
회계과에 신인도 조회 가능여부에 대하여 문의하였고, 회계과에서는 이에 대한 협조가
어렵다고 하여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내용처럼 평가업체에서 제출한 신인도 조회 결과
이미지 자료로만 평가하였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조치할 사항 가평균수는

- 협상에 의한 계약 업무를 소홀히 한 아래 관련자를 「가평균 적극행정 면책과 공
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 앞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 진행 시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
니다. (**주의**)

39) 감사기간 (㉸)☆ 부정당업체 제재여부에 대하여 (전체기간) 조회한 결과 해당사항 없음으로 확인됨

| | | | | | |
|------------------|----------------|-------------|--------|----------|------------------|
| 일련번호 | 17 | 감사자 | ☆급 ○○○ | | 공 개(○) 비공개() |
| 신분상 조치인원 | - | 재정상 조치방법 | - | 재정상 조치금액 | - |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 가평군 가과 (나관) | 처분요구일자 | | 회신기일 | |

경 기 도

주의요구 및 통보

제 목 ㄱ 보조사업 정산 부적정
소관기관(부서) 가평군 (가과)
조치기관(부서) 가평군 (나관)
내 용

1. 업무 개요

가평군 가과(이하 “가과”라 한다)는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에 따라 (사)■■■에 [표 1]과 같이 2021년~ 2023년 “ㄱ 사업”(이하 “ㄱ 보조사업”라 한다)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고 정산 업무를 수행하였다.

[표 1] 2021년~2023년 “ㄱ 보조사업” 현황 : “생략”

2. 판단 기준(관계 법령 등)

「지방보조금 관리기준」Ⅳ. 3항에 따르면 교부신청서가 제출되면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금액산정의 착오 유무, 자기자금의 부담 능력 유무(자부담이 있는 경우)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보조금 교부전에는 보조금 통장(계좌) 및 보조사업자와 일치 여부, 보조금 관련 서류구비 여부, 통장(계좌)에 자부담금을 예치한 통장사본 등 확인을 거쳐 교부하여야 하며 보조사업비 중 자부담을 조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교부결정 후에도 교부결정 취소 또는 환수될 수 있음을 고지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기준 Ⅴ. 4항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비에 포함된 자부담 집행 시 자부

담 예산에 대한 집행을 전제로 하여 보조금 지급이 결정된 것이므로 보조금의 집행 기준과 동일하게 집행하고, 자부담 사업비도 반드시 집행하여야 하며, 집행 비율이 낮을 경우 총 집행액을 기준으로 보조금과 자부담 비율로 나누어 정산 후 반환토록 조치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7조에 따르면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된 수입금에 관한 사항을 사업계획서에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조례 제19조 제2항에 따르면 군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의 완료로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군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위와 관련하여 가과는 보조사업자인 (사)■■■과 ㄱ 보조사업에서 발생하는 입장권 판매 수입금과 협찬금 및 그 밖의 수입(익)금 처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 협약을 체결⁴⁰⁾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표 2]와 같다.

[표 2] 22년~23년 “ㄱ 보조사업” 수입(익)금 운영협약서 주요 내용 : “생략”

따라서 가과는 보조금 교부시 보조사업자 통장(계좌)에 자부담금 예치여부를 확인 후 교부하여야 하며 보조사업비 중 자부담을 조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교부결정 후에도 교부 결정 취소 또는 환수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자부담 예산에 대한 집행을 전제로 하여 보조금 지급이 결정된 것이므로 정산 시 총 집행액을 기준으로 보조금과 자부담 비율로 나누어 정산 후 반환토록 조치하였어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가과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총 3회에 걸쳐 ㄱ 보조사업을 추진하면서 보조사업자인 (사)■■■에서 보조금 통장에 자부담 사업비⁴¹⁾를 예치하지 않았는데도 보조금을

40) 협약체결일 : 2022. 5. XX., 2023. 5. XX.

41) '21년 200백만 원, '22년 600백만 원, '23년 800백만 원

교부하였다.

또한 2021년 보조사업 정산 시 보조사업자의 자부담이 일부만 확보⁴²⁾되고, 총 사업비 집행액이 낮은데도(집행율 85.2%) 보조금과 자부담 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정산하였으며 2022년과 2023년에는 (사)■■■과 맺은 수입(익)금 협약에 따라 행사 수익금을 축제사업비⁴³⁾로 사용하지 않고 자부담으로 이행하였는데도 그대로 인정하였다.

그 결과 (사)■■■은 관계 법령을 위배하여 보조사업자의 자부담 비율대로 정산하지 않고, 자부담 일부를 자체재원으로 이행하지 않고도 정당하게 자부담을 이행한 것으로 정산처리하여 [표 3]과 같이 총 348,377,570원⁴⁴⁾을 환수받지 못하였다.

[표 3] ㄱ 보조사업 보조금 정산결과 : “생략”

4. 관련자 주장 및 판단

가과는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15조 제4항에 따라 민간지방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 확보가 불가피하게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년도 자기부담금 확보 및 지방보조사업의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자기부담금 확보 이전에도 지방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2021년~2023년 보조금을 교부 결정할 때 (사)■■■에서 제출한 보조금 자부담 및 집행계획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결재를 득함에 따라 축제 수익금 중 입장권 판매금, 후원금, 그 밖의 수익금을 자부담으로 인정하였고, 보조금 교부결정서에 따라 정산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자기부담금 확보 이전에 지방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는 경우는 전년도 자기부담금 확보 및 지방보조사업의 집행실적을 고려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사업의 보조사업자인 (사)■■■의 경우 2020년도에는 자부담 없이 군비 100%로 사업을 추진하였고, 2021년도와 2022년도에는 각각 자기부담금을 확보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을 수행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관련 규정에 맞지 않게 보조금을 교부한 것이므로

42) 당초 400,000,000원, 확보액 : 360,868,290원

43) 2022년 : 873,259,835원, 2023년 : 640,493,513원

- 관련 근거 : 협약서 제5조, 제6조) 가평55% 사용, 협약서 제7조) 그 외 수입의 경우 100% 축제 사업비로 사용

44) 2021년 20,017,790원, 2022년 177,141,966원 2023년 151,217,821원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2021년~2023년 보조금 교부 결정 시 (사)■■■에서 제출한 보조금 자부담 및 집행계획을 군수가 결재하였다고 주장하나 보조금 교부 결정 문서에는 보조사업자 자부담을 수익금으로 대체하여 정산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은 없으므로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조치할 사항 가평군수는

- 앞으로 보조사업 수행 시 자부담이 포함된 경우 자체재원이 이행되도록 조치 후 정산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 ㄱ 보조사업 자부담 불인정에 따른 보조금 환수 여부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는 등 조치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별첨] 22년~23년 ㄱ 보조사업 정산결과 : “생략”

| | | | | | |
|------------------|----------------|-------------|--------|----------|-------------------|
| 일련번호 | 18 | 감사자 | ☆급 ○○○ | | 공 개(○) 비 공개() |
| 신분상 조치인원 | - | 재정상 조치방법 | - | 재정상 조치금액 | - |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 가평군 가과 (나관) | 처분요구일자 | | 회신기일 | |

경 기 도

주의요구 및 통보

제 목 가평군 새마을회 관리 감독 소홀

소관기관(부서) 가평군 (가과)

조치기관(부서) 가평군 (나관)

내 용

1. 업무 개요

가평군 가과(이하 “가과” 라 한다)는 (사)△△(이하 “△△” 라 한다)에 보조금 46억 원을 지급하여 새마을회관을 건립(준공일: 2013. 7. 14.)하도록 한 후 회관 운영에 대하여 관리·감독하고 있다.

2. 판단 기준(관계 법령 등)

「가평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2010. 1. 8. 시행된 것)」 제14조 및 제17조에 따르면 사업비 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경우에는 그 감소율에 따라 보조금을 감액한다고 되어 있고,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한편, 2009. 8. XX. 나과(現 가과)에서 다실로 발송한 “2009년도 하반기 투융자심사 대상사업 제출”에 첨부된 심사의뢰서에는 단체의 재정자립을 위한 사업이라는 점, 민간 자부담액은 6억 원이라는 점 등이 기재되어 있고, 그 중 실무심사조서에는 새마을지회에서 부지매입을 조건으로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해 11. XX. 다실에서 나과로 회신한 “2009년도 하반기 투자심사위원회 심사결과 통보”에 따르면 부지확보를 자부담하는 조건으로 의결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나과(現 가과)에서 2014. 7. XX. “가평군 ㄱ 신축공사에 대한 정산결과”(나과-13776호)” 문서에 따르면 새마을회에서 부담한 실제 부지매입비가 6억 원이 아닌 약 3억 7천만 원이므로 자부담 비율에 따라 보조금을 재정산하고 932,705천 원을 군에 반납 조치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관련 나과(現 가과)는 2014. 12. XX. △△로부터 “가평군 ㄱ 신축공사 보조금 차액 반납 계획”⁴⁵⁾을 제출받고, 2014. 12. XX. [표 1]과 같이 2015년부터 2032년까지 18년간 새마을 보조금 반환금 상환 계획 수립 및 분할납부를 승인하였다.

[표 1] 새마을회 보조금 반환금 상환 계획 : “생략”

또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⁴⁶⁾(이하 “세출예산집행기준”이라 한다)에 따르면 민간자본보조로 취득한 자산의 매각, 대여, 교환, 담보제공 등에 대하여는 해당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도록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위와 관련하여 가과는 새마을회에서 새마을회관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승인하면서 채무 상환 계획대로 이행하고, 미이행 시 가평군에 새마을회관 소유권을 무상양여토록 하는 조건을 부여하였다.

따라서 가과는 새마을회의 보조금 반환금 상환과 새마을회관 담보에 따른 채무 상환 계획이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철저히 관리·감독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가과는 [표 2]와 같이 2020. 12. XX. 새마을회에서 보조금상환 시 회관 담보 대출금으로 388,700천 원을 일시 반납한 것 외에는 임대료⁴⁷⁾ 대비 반납금액이 저조한데도 당초 반납 계획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촉구하거나 이행이 어려운 경우 반납계획을 변경하도록 조치하는 등의 지도·감독을 하지 않았다.

45) 관련문서 : 가평군 ㄱ 신축공사 보조금차액 반납 계획 제출 (사)△△ 사업 400-111호(2014. 12. 19.)

46) 안전행정부 예규 2013. 8. 1.시행

47) 2024. 3. 25. 기준 새마을회관의 연간 임대료는 1억 4,796만 원

특히 △△는 2015년부터 2024년 7월까지 보조금 반환금 487,705천 원을 상환하였는데 이중 사무실 임대 수입과 토지보상금으로 51,649천 원, 새마을회관 담보 대출금으로 408,700천 원을 상환하는 등 당초 반환금 상환 계획(임대수입을 통한 상환)을 지키지 않고 있는데도 라과에서 체납액을 관리하고 있다는 사유로 이를 방치하고 있다.

[표 2] 새마을회 보조금 반환금 상환 현황 : “생략”

그리고 가과는 새마을회에서 [표 3]과 같이 새마을회관 건립 보조사업 환수금액(932,705천 원)⁴⁸⁾에 대한 상환과 회관 리모델링, 체납된 상하수도 요금 납부, 기대출금 상환 등의 사유로 대출을 요청하자 일부 승인하고 감사일 현재까지 채무 상환계획 이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다.

게다가 가과는 2020. 11. XX. 새마을회의 새마을회관에 대한 담보 대출 실행으로 선순위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8억 원)이 설정된 이후인 2020. 12. XX. 새마을회관에 대한 압류를 설정하여 보조금 반환 채권을 적시에 확보하지 못하였다.

[표 3] 새마을회 대출금 이행여부 : “생략”

그 결과 △△의 채무와 보조금 반환금 상환 등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새마을회 운영이 부실해질 우려가 있다.

4. 관련자 주장 및 판단

가과는 △△의 보조금 반환금 체납액 445,000천 원에 대한 “보조금 반환금 상환 변경 계획”을 제출받아 검토 및 변경 승인하는 등 반환금 환수에 철저를 기하고, △△의 대출금에 대한 금융사의 상환 자료 및 새마을회의 채무상환 계획 등을 제출 받는 등 채무 상환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을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도 2024. 7월 현재까지 △△ 보조금 반환금 상환 누계 금액이 487,705천 원이므로, 당초 계획(2024년까지 435,356천

48) 2014. 7. XX. 부정수급 및 자부담 부담률 조정에 따른 보조금 환수액

원) 보다 더 상환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가평군은 새마을회관 임대수익금으로 보조금 반환금을 상환하기로 한 △△의 당초 반납계획(△△ 400-111, 2014. 12. XX.)의 이행 관리 및 변경 승인 없이 새마을회관을 담보로 대출받아 388,000천 원의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대출계획을 승인함에 따라 보조금 반환금만큼 대출금과 이자가 증가하는 등 △△ 재정이 오히려 열악해지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당초 반납계획이 이행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조치할 사항 가평군수는

-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가평군 새마을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 가평군 △△에서 채무와 보조금 반환금 등이 정상 상환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 | | | | | |
|------------------|----------------|-------------|--------|----------|------------------|
| 일련번호 | 19 | 감사자 | ☆급 ○○○ | | 공 개(○) 비공개() |
| 신분상 조치인원 | - | 재정상 조치방법 | - | 재정상 조치금액 | - |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 가평군 가과 (나관) | 처분요구일자 | | 회신기일 | |

경 기 도

주의요구

제 목 ㄱ 보조사업 정산 소홀
소관기관(부서) 가평군 (가과)
조치기관(부서) 가평군 (나관)
내 용

1. 업무 개요

가평군 가과는(이하 “가과”라 한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보조금법”이라 한다),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등에 따라 (사)●●●(이하 “●●●”이라 한다)에 사랑의 ㄱ 보조사업(이하 “ㄱ 보조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표 1]과 같이 보조금을 교부하고 정산 업무를 수행하였다.

[표 1] “ㄱ 보조사업” 현황 : “생략”

2. 판단 기준(관계 법령 등)

지방보조금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 법령, 조례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 여부,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등을 조사하여 지체 없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받으면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하며 그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8조 제4항 및 제1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사업수행자를 선정하는 경우,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도록 이를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지방보조사업 관련 계약업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을 따르도록 되어 있다.

한편, 지방계약법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고, 예외적으로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및 제30조 제2항에 따르면 추정가격이 2천만 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에 한하여 수의계약을 진행하고, 2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가과는 동 사업의 보조사업자가 경비를 집행할 경우 지방계약법령 등에 맞게 계약을 체결하고 집행하는지를 지도·감독하여야 하고, 보조금의 정산 시에는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회계관련 서류 등 증빙서류와 실적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보조금 집행의 적합성을 판단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는 2022. 10. XX. “ㄱ 보조사업” 관련 수혜 대상인원(어려운 이웃)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없이⁴⁹⁾ 보조금을 신청하고, 이에 가과는 2022. 10. XX. 새마을회에 보조금을 교부하면서 보조금으로 집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 구매 등은 계약관련 법령을 준용하여야 하며, 보조금 집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의 진행내용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사업과 관련한 장부·서류 기타 재산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보조사업자는 사업 종료 시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준수

49) 사업기간 : 11월중, 사업량 : 1회/250명으로만 명시되어 있을 뿐 수혜대상자, 선정방법 등은 적시되어 있지 않음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통지하였다.

가과는 ●●에서 [표 2]와 같이 2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을 받아 공개적으로 계약업체를 선정하지 않고, 특정업체인 ▽▽와 1인 견적서만으로 임의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보조금을 부적절하게 집행하였는데도 정산검사 시 이를 지적하지 않았고, 보조사업 취지에 맞게 수행되었는지 검토할 수 있는 증빙자료⁵⁰⁾(◆◆◆◆ 배부 현황)가 없는데도 적정한 것으로 처리⁵¹⁾하였다.

[표 2] “ㄱ 사업” 물품구입 업체 계약 및 집행현황 : “생략”

그 결과 보조사업 수행시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을 관리하지 못하여 보조사업자가 특정업체에 특혜를 제공하였고, 취약계층 등 수혜자가 명확하지 않아 보조사업의 취지대로 이행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게 되었다.

4. 관련자 주장 및 판단

가과는 보조금 정산 관련하여 지방계약법 절차 이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보조사업 수혜자 현황 등(증빙자료) 실적 확인 및 정산 검사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가평군수는

-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조금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50) 가평군에서는 2022. 11. XX.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행사를 실시하면서 새마을회원 및 임직원 등 250여명이 참여하고, 관내 홀몸노인 및 취약계층 1천여 가구에 전달 예정이라고 홍보함(관련 : 가평군 홈페이지 포토뉴스)

51) 관련 문서 : 가과-39446(2023. 12. XX.)호

| | | | | | |
|------------------|----------------|-------------|---------|----------|------------------|
| 일련번호 | 20 | 감사자 | ☆급 ○○○○ | | 공 개(○) 비공개() |
| 신분상 조치인원 | ○명 | 재정상 조치방법 | - | 재정상 조치금액 | - |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 가평군 가과 (나관) | 처분요구일자 | | 회신기일 | |

경 기 도

기관경고, 훈계 · 시정요구

제 목 마약류 폐기 및 마약류 취급기관 점검 관리 등 부적정
소관기관(부서) 가평군 (가과)
조치기관(부서) 가평군 (나관)
내 용

1. 업무 개요

가평군 보건소 가과(이하 “가과” 라 한다)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 관리법” 이라 한다)에 따라 마약류 취급기관의 지도 · 점검을 통해 마약류를 관리하고, [표 1]과 같이 사고 마약류 등의 폐기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표 1] 사고 마약류 등 폐기 업무 처리 절차 : “생략”

2. 판단 기준(관계 법령 등)

마약류관리법 제12조에 따르면 마약류취급자는 소지하고 있는 마약류가 변질 · 부패 또는 파손,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의 경과,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이 지나지 아니 하였으나 재고관리 또는 보관하기에 곤란한 사유(이하 “사고 마약류 등” 이라 한다)로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 2]와 같이 폐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4항과 제5항은 사고 마약류의 폐기 신청을 받은 시장 · 군수는 해당 폐기 처분 대상 마약류가 사고 마약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관계 공무원 참관하에 확인한 후 폐기 처분해야 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표 2] 마약류의 폐기 방법 : “생략”

그리고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르면 마약류취급자가 제조·판매·구입·사용·조제·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품명, 수량, 취급연월일 등에 관한 사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규칙 제43조에 따라 행정처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2023년 의약품·마약류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 제3장-Ⅳ.-3. 지방자치단체 마약류 관리계획에 따르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하 “NIMS”라 한다)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위험도가 높은 취급자를 선별하여 집중적으로 감시하며 현장에서 취급 보고 의무위반 의심사례를 항시 병행하여 점검하도록 되어 있고, 유효기한이 경과하거나 경과하지는 않았지만 보관이 곤란한 사유로 마약류를 폐기할 때 허가 관청에 신고하고 관계 공무원의 입회하에 폐기하였는지 확인하는 부분을 마약류취급자 중점 점검사항으로 명시하고 있다.

한편,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제9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가과는 마약류취급자 등이 폐기 신청한 사고 마약류 등을 폐기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하여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여야 하고, 마약류를 취급하는 기관이 NIMS에 마약류의 구입부터 폐기까지 처방·투약 정보를 올바르게 입력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입력된 데이터 분석과 이를 활용한 상시 점검 및 감시를 함으로써 마약류가 유실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게 마약류 취급기관의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가과는 병원, 약국 등 마약류 취급기관에서 폐기 신청한 마약류를 희석 등 마약류가 아닌 것으로 성분을 변화한 후에 폐기하여야 하는데도 ●●실 내에 있는 배수구에 마약류 성분을 그대로 흘려보내면서 물을 틀어놓는 방법으로 [별표 1] “사고 마약류 등 부당 폐기 내역” 과 같이 마약류를 부적정하게 폐기하였다.

또한 사고 마약류 등의 폐기 결과를 살펴보면, [별표 2] “사고 마약류 등 폐기수량 불일치 내역” 과 같이 사고 마약류 등의 폐기결과 보고서 및 폐기 결과 통보 문서에 기재된 폐기수량과 사진상의 실제 폐기수량이 일치하지 않았으며, 202○년 1월부터 12월 중 벤조디아제핀 계열과 펜타닐 계열의 약품을 폐기한 자료는 수량을 알 수 없는 불명확한 사진을 증빙으로 남겨놓아 마약류의 수량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대다수로 실제 수량 만큼 마약류를 폐기하였는지 또는 분실·유실된 마약류가 있는지를 감사일 현재까지(2024. 7. 16., 이하생략) 알 수 없는 상태이다.

그리고 가과는 동물용 마약류를 취급하는 동물병원과 약국이 사용한 일부 마약류의 마지막 취급일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이 경과하거나 임박한 마약류를 최소 6개월에서 최대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취급하지 않고 한 번도 폐기 신청을 받지 않아 관리를 부실하게 하고 있는데도 매년 지도·점검 시에 확인하지 않았으며, 202○년부터 사고 마약류 등의 폐기 내역이 전혀 없는 기관에 대한 현장 지도·점검에서도 폐기와 관련된 어떠한 안내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점검결과를 적합(이상없음)으로 작성하여 마약류 취급기관이 실제로 소지하고 있는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재고량과 NIMS에 보고(확인)한 재고량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파악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마약류 취급기관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결과, [별표 3] “마약류 취급기관의 유효기간 경과 약품 부당관리 내역” 과 같이 동물병원과 동물약국에서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가 적절한 시기에 폐기되지 않았고, NIMS나 전자문서를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된 사항도 없기에 각 마약류의 실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게다가 관할관청은 마약류취급자가 마약류 구입, 사용(제조) 등의 취급내역을 NIMS에 입력하여 보고하게 되어 있는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마약류 취급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하는데도 [별표 4] “마약류 취급기관의 마약류 취급 보고 부적정 내역” 과 같이 NIMS에 재고량이 지속적으로 음수(-)로 입력되어 있고, 일부 마약류는 -○○○정까지 재고량이 누적되었는데도 이 사항을 발견하지 못해 이 역시 이상없음으로 점검을 마무리한 바, 상습적으로 마약류 취급을 미보고한 업체에 대해 2024년 감사일 현재까지 적정한 제재를 하지 않았다.

그 결과 병원·약국 등의 마약류 취급기관을 감독하고 마약류 관리에 솔선수범해야 할 책임이 있는 행정기관이 규정과 절차대로 마약류 관리 및 폐기 등의 모든 과정을 엄격하게 통제하지 않고 업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마약류 폐기의 투명성이 저하되고, 마약류의 실재고 확인 없이 형식적인 지도·점검으로 마약류 통합 정보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NIMS의 도입 취지까지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4. 관련자 주장 및 판단

가과는 향후 마약류 폐기의 모든 과정이 명확하게 파악되도록 약품의 수량·폐기 방법·폐기 전후의 사진 등을 정확히 포함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2021년과 2022년은 코로나바이러스-19 관련 업무로 현장점검을 하지 못하였으며 2023년 점검에서는 각 기관의 마약류 사용내역과 보고 등을 확인하지 않아 관리 실태를 점검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고 앞으로 놓치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 숙지한 후 지도관리를 엄격하게 수행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가평균수는

- 마약류 폐기 등과 관련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채 업무를 안일하게 한 부분에 대해 「경기도 경고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기관경고」 처분하오니,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관경고)

○ 마약류 폐기 및 취급기관 지도·관리 등의 업무를 소홀히 한 아래 관련자들을 「가평군 적극행정 면책과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라 「**훈계**」 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 앞으로, 마약류 관리 및 폐기·지도점검 등의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상의 재고량과 실제 재고량이 차이가 나는 기관, 취급보고 규정을 위반한 기관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기관에 대하여 적정한 행정 처분(과태료 포함) 및 고발 등을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2024 - 3호

기 관 경 고

기관명 : 가평군 보건소

가평군 보건소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류를 폐기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위반한 채 마약류의 성분을 변화하지 않고 배수구에 배출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에 대하여 엄중 「경고」 조치하오니,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 9. .

경 기 도 지 사

[별표 1] 사고 마약류 등 부당 폐기 내역 : “생략”

[별표 2] 사고 마약류 등 폐기수량 불일치 내역 : “생략”

[별표 3] 마약류 취급기관의 유효기한 경과 약품 부당관리 내역 : “생략”

[별표 4] 마약류 취급기관의 마약류 취급보고 부적정 내역 : “생략”

| | | | | | |
|------------------|----------------|-------------|--------|----------|------------------|
| 일련번호 | 21 | 감사자 | ☆급 ○○○ | | 공 개(○) 비공개() |
| 신분상 조치인원 | ○명 | 재정상 조치방법 | - | 재정상 조치금액 | - |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 가평군 가과 (나관) | 처분요구일자 | | 회신기일 | |

경 기 도

훈계 · 시정요구 및 통보

제 목 건강증진사업 물품 및 소모품 등 관리 부적정
소관기관(부서) 가평군 (가과)
조치기관(부서) 가평군 (나관)
내 용

1. 업무 개요

가평군 보건소 가과(이하 “가과” 라 한다)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계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하여 물품·소모품 등의 구입, 출납, 보관 관리에 필요한 예산편성 및 집행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 판단 기준(관계 법령 등)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소관 예산과 사무 또는 사업의 예정에 맞추어 물품의 취득·사용 및 처분에 관한 수급관리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94조의2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과 물품의 관리·처분·수입 및 지출을 통일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의 운영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행정안전부)」(이하 “운영기준” 이라 한다) II-2-다.에 따르면 주요 소모품은 소모품 대장에 수불상황을 기록·관리하고, 물품 출납공무원이 보관 중인 소모품은 물품출납공무원이, 운용부서에 불출하여 관리 중인

소모품에 대하여는 사용 공무원이 관리하여야 하며,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소모품의 경우 재고 운용수준을 정하여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총괄 안내(보건복지부)」 제3장-제2절 예산편성 및 유의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는 방만한 예산집행, 예산낭비요인 등이 없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하여야 하며, 예산편성 및 집행은 관련 법령 등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규칙」, 기타 개별 법령⁵²⁾에 따라 그 절차와 기준을 준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⁵³⁾ 사용 매뉴얼(한국사회보장정보원⁵⁴⁾)」에 따르면 각 사업별 업무 담당자가 서비스 대상군에게 배부·지급한 물품 및 소모품 등을 [표]와 같이 통합재고관리 탭을 통해 재고 기초자료 설정(물품코드, 소모품 추가 등), 물품의 입·출고 등을 단계별로 등록하여 물품현황(실적)을 조회하고 입고량, 출고량, 잔고량에 대해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표]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사용 화면 : “생략”

따라서 가과는 각 사업별로 물품 및 소모품을 구입할 때에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연간 소요량 등을 파악하여 물품구입계획을 수립하고, 구입한 물품·소모품을 분실하거나 방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이하 “PHIS” 라고 한다)에 구입·사용 현황을 등록함으로써 재고 수준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며 물품대장을 수기로 작성하는 등 이중으로 처리되지 않게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가과는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생활실천 및 만성질환 예방, 건강관리 프로그램 및 서비스 등을 추진하면서 물품, 소모품, 의료품 등의 입·출고 내역을 작성

52)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금연) 지침」 제2부-III-2 예산운영 기본원칙에는 관련 법령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도 포함되어 명시

53) 전국 약 3,600여개 보건기관(보건의료원, 보건소/지소, 보건진료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20개 분야 보건사업 및 행정업무를 통합 운영하기 위해 구축된 정보시스템

54) 「지역보건법」 제30조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은 공공기관

하지 않거나 일자와 수량을 허술하게 기록하는 등 전반적으로 부적정하게 관리하였고 그 내용은 [별표] “건강증진사업 수불대장 부적정 관리 현황”과 같다.

각 사업별로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①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은 금연스티커북 등 ○개 물품에 대해 수불대장을 작성하지 않았으며, 니코틴보조제 같은 의약품의 입고 수량을 잘못 기입하거나 출고·재고량이 일치하지 않았다.

또한 전년도 12월에서 다음연도 1월로 이월되는 수량은 물품대장과 실재고량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 연도말 실적을 정리·분석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전년도 11월의 잔고량을 이듬해 1월로 이월 수량을 입력함으로써 금연보조제 및 행동강화물품을 부정확하게 관리하였다.

②치매정책사업(치매안심센터)은 치매환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인지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사용하는 교재세트, 워크북 등의 구입 현황을 작성하지 않았으며, 그 외 홍보물품은 실제 입고일과 대장에 기입된 일자가 불일치하고, 구입합 등 ○개 품목은 구입한 날짜 또는 계약한 날짜보다 3일에서 10일이나 이전인 날짜로 작성하는 등 출납공무원으로서 물품 검수를 소홀히 하였다.

그리고 치매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1인당 1개씩 사용할 수 있는 소리증폭기를 총 ○개 배부한 뒤에 휴직·퇴직의 사유에 따라 ○개의 소리증폭기를 반납하였는데도 공용 물품의 관리자와 관리 장소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 제대로 보관하지 않고 방치하였다.

③모자보건사업은 임산부에게 제공하는 철분제와 출산 후 지급하는 유축기 및 수유패드를 대장에 기재하지 않은 채 매년 불출하였으며, 모빌세트, 배넷저고리세트 등 ○개의 용품은 계약업체에서 납품하지도 않았는데 입고된 것으로 기록하였다.

반면, 수유쿠션 등 ○개의 품목은 납품한 당일이 아닌 그 이후의 일자로 입고일을 작성하여 최소 1일에서 14일까지의 기간 차이가 발생하였으며, 수불 현황을 결재받지 않고 대장만 형식적으로 작성하여 잔고량이 일정하지 않은 내용을 감사기간 현재(2024. 7. 16.)까지 파악하지 못하였다.

④방문건강관리사업은 주로 전문 의료인력이 다루어야 하는 의료품을 구입하여 사용하는데 2020년에서 2021년으로 넘어가는 의약품(나비침, 마스크 등)의 잔고가 맞지 않고, 대부분 구입한 지 5년 이상 된 의료품 등으로 실제 입고된 날을 확인할 수 없으며 콜레스테롤 스틱을 포함한 ○○개 의약품도 대장상 입고일이 잡혀있지 않거나 납품받은 수량을 입고란에 입력하지 않은 채 전월 재고량에 단순히 더하여 기록한 결과 PHIS와 대장의 현황이 전혀 일치하지 않는 등 사업 물품의 관리 현황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었다.

게다가 202○년 6월에 ○○○○개의 영양제(○○○○)를 구입하였는데 ○○○○개만 납품받고 나머지 ○○○○개는 특별한 사유 없이 2회로 분할하여 202○년 9월에 납품받았으며 최초 입고된 달(202○. 6.)에 ○○○개가 초과되어 총 ○○○○개가 출고된 것으로 PHIS에 입력되어 있는데도 입·출고 현황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등 물품관리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⑤구강보건사업도 마찬가지로 PHIS와 수불대장을 이중으로 관리하고 있어 각 물품의 입·출고 일자를 무분별하게 입력하였고, 총 ○○개의 제품은 대장과 실제 납품일이 일치하지 않거나 과년도 잔고와 상이한 내역으로 남아있어 사업 물품을 정비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았다.

이와 같이 보건기관의 업무를 통합하여 운영하기 위해 구축한 PHIS를 활용하여 물품을 관리하는 방법이 있었는데도 별도 수기대장으로 관리하거나 임의로 그 내역을 입력함으로써 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물품을 투명하게 관리하지 않았다.

그 결과 물품·소모품 등의 관리를 부적정하게 함으로써 물품이 적정하게 보호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되지 않아 계획적인 수급관리가 필요한 건강증진사업의 공공 의료품을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방치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4. 관련자 주장 및 판단

가과는 코로나바이러스-19 발생에 따른 업무 과중과 잦은 인사이동으로 물품 운영 관리에 소홀하였음을 인정하고 향후 물품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가평균수는

- 건강증진사업 물품 및 소모품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아래 관련자들을 「가평균 적극행정 면책과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 앞으로, 건강증진사업 물품 및 소모품 관리 등의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지적된 물품을 포함한 가과 소관 물품의 입·출고, 재고 현황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 향후 사업별 구입 예정 품목과 수량에 대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별표] 건강증진사업 수불대장 부적정 관리 현황 : “생략”

| | | | | | |
|------------------|----------------|-------------|--------|----------|------------------|
| 일련번호 | 22 | 감사자 | ☆급 ○○○ | | 공 개(○) 비공개() |
| 신분상 조치인원 | - | 재정상 조치방법 | - | 재정상 조치금액 | - |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 가평군 가과 (나관) | 처분요구일자 | | 회신기일 | |

경 기 도

주의요구

제 목 장기요양기관 특정목적사업 예산 운용 지도·감독 소홀
소관기관(부서) 가평군 (가과)
조치기관(부서) 가평군 (나관)
내 용

1. 업무 개요

가평군 가과(이하 “가과” 라 한다)는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 및 「노인복지법」 제42조 등에 따라 관내 사회복지시설인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판단 기준(관계 법령 등)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8조 및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9조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특수한 사업을 위하여 2회계연도 이상에 걸쳐서 그 재원을 적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회계연도마다 일정액을 예산에 계상하여 특정목적사업을 위한 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고, 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 계획(변경된 계획을 포함)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적립금은 그 적립 목적에만 사용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의 재정 상태 등을 고려하여 적립금의 적립 여부, 규모 및 적립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2-7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의 특정목적사업 예산인

운영충당적립금⁵⁵⁾과 환경개선준비금⁵⁶⁾은 원금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저축을 목적으로 하는 상품이어야 하고 적립 시점으로부터 당초 적립목적에 해당되는 사유 발생시 적립금액 전체에 대해 상시 현금화가 가능하여야 하며, 시·군·구는 지도점검 시 운영충당적립금과 환경개선준비금의 관리에 대하여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2는 시설에서 회계 및 시설운영과 관련한 부당행위가 발생 된 때 그 시설의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가과는 관내 장기요양기관이 운영충당적립금과 환경개선준비금의 적립 및 사용 계획을 사전에 보고하도록 하고, 지도·점검 시 운영충당적립금과 환경개선준비금의 관리에 대하여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관계 규정에 적합하지 않게 관리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가과는 [표 1]과 같이 장기요양기관 ○개소에서 총 ○건의 운영충당적립금과 환경개선준비금 적립 계획을 사전에 보고하지 않았고, 중도 해지 또는 인출 시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보험상품으로 가입하였으며, 202○. 7. XX. 사후 보고한 ‘적립 및 사용 계획서’에 사용 목적과 용도, 예상 연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는데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승인하였다.

그 결과 감사일 현재 기준(2024년 5월) 장기요양기관에서 보험상품을 해지하는 경우 [표 2]와 같이 약 1,366천 원 가량 손실이 발생하게 되고, 해당 기관의 운영충당적립금과 환경개선준비금 적립 및 사용 계획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없게 되었다.

[표 1] 특정목적사업 예산 적립·보고 및 승인 현황 : “생략”

55) 설비관련 장비, 파손 및 내구연한 등으로 교체가 필요한 사무기기 등으로 사용

56) 시설 개·보수, 내·외부 도색 등 시설의 환경개선사업을 목적으로 사용

[표 2] 납입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예상 내역 : “생략”

4. **관련자 주장 및 판단**

가과는 관내 장기요양기관이 운영충당적립금과 환경개선준비금의 적립 및 사용계획을 사전에 보고하도록 하고, 장기요양기관 지도·감독 시 특정목적사업 예산인 운영충당적립금과 환경개선준비금의 관리에 대해 확인하여야 하나, 업무 숙지 미흡으로 인해 이번 감사 기간 중 관내 장기요양기관에 특정목적사업 예산 관리(적립·사용 계획 사전 보고 및 운영 규정 등)에 대해 안내 공문을 시행하여 [표 1]에 기재된 기관에서 사후 보고를 받았음. 향후 관련 업무를 숙지하여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가평군수는

- 앞으로, 관내 장기요양기관의 특정목적사업 예산인 운영충당적립금과 환경개선준비금 업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 | | | | | |
|------------------|----------------|-------------|--------|----------|------------------|
| 일련번호 | 23 | 감사자 | ☆급 ○○○ | | 공 개(○) 비공개() |
| 신분상 조치인원 | - | 재정상 조치방법 | - | 재정상 조치금액 | - |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 가평군 가과 (나관) | 처분요구일자 | | 회신기일 | |

경 기 도

시정요구

제 목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미 실시
소관기관(부서) 가평군 (가과)
조치기관(부서) 가평군 (나관)
내 용

1. 업무 개요

가평군 가과(이하 “가과” 라 한다)는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 사업을 운영하는 자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하고 있다.

2. 판단 기준(관계 법령 등)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 제2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19조 제1항 제1호⁵⁷⁾, 제1호의2

57)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 제1항

1. 미성년자

1의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1의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1의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1의5.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의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1의7. 제1호의5 및 제1호의6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지방재정법」 제97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2항제1호,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39조제1항제1호 또는 「형법」 제28장·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1의7과 관련하여 “그 직무” 에 사회복지사업과 관련 없는 직무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님(법제처 해석 19-0491)

1의8. 제1호의5부터 제1호의7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

부터 제1호의9까지 및 제2호의2⁵⁸⁾부터 제2호의4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설의 장이 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또한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제2항에 따르면 종사자는 같은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7부터 제1호의 9에 해당되는 사람(제1호),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제2호)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제4항 및 제6항에 따르면 노인관련기관의 설치 신고·인가·허가 등을 관할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로부터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직접 제출받거나 본인의 동의를 받아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하고,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이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노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4항 및 제6항에 따르면 장애인관련기관의 신고·허가 등을 관할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장애인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로부터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등 경력 조회 회신서를 직접 제출받거나 본인의 동의를 받아 장애인학대관

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의9. 제1호의5부터 제1호의8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8) 제2조에 따른 해임명령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의2. 제26조에 따라 설립허가가 취소된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었던 사람(그 허가의 취소사유 발생에 관하여 직접적인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그 설립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의3. 제40조에 따라 시설의 장에서 해임된 사람으로서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의4. 제40조에 따라 폐쇄 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련범죄 등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하고,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이 장애인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연 1회 이상 확인·점검하도록 되어 있다.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4항 및 제29조의4 제1항에 따르면 아동관련기관의 설치 또는 설립인가·허가·신고를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아동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하여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를 직접 제출받거나 본인의 동의를 받아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하고,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제29조의3 제1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아동관련기관⁵⁹⁾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보건복지부)의 II. 사회복지시설 공동적용사항의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 및 종사자의 자격 등”에 따르면 시설장 및 종사자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개별 법령 등에 명시된 시설장과 종사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고, 유형별 시설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 등을 갖추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제5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5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5항에 따르면 관련기관의 장은 취업자 등을 채용하기 전에 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를 제출받거나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련범죄 전력을 조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가과는 설치·운영하는 시설·기관 등이 취업제한 적용기관임을 확인하고

59) 아동관련기관(「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1항)

① 보장원, 지방자치단체,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다함께돌봄센터, 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복지시설, ② 긴급전화센터,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③ 건강가정지원센터, ④ 다문화가족지원센터, ⑤ 성매매피해상담소, ⑥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⑦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⑧ 유치원, ⑨ 의료기관, ⑩ 장애인복지시설, ⑪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⑫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⑬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⑭ 청소년활동시설, ⑮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 ⑯ 청소년보호·재활센터, ⑰ 체육시설, ⑱ 학교 및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⑲ 학원, 교습소, ⑳ 한부모가족복지시설, ㉑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운영하는 법인, ㉒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㉓ 아동인권, 아동복지 등 아동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㉔ 서비스제공기관, ㉕ 입양기관, ㉖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모집하거나 채용하는 기관

각 시설·기관 등의 장이 취업자 등에 대하여 취업 전 범죄경력(전력) 조회 결과에 따라 채용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지 관리하여야 하며, 연 1회 이상 운영·취업자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범죄경력을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가과는 [별표]와 같이 열린복지랜드웰빙요양원 등 19개 시설에서 시설장과 종사자 95명이 취업할 때 범죄경력 조회 등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해당 시설에 취업 또는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여부에 대한 확인 절차없이 채용하여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게 한 사실이 있다.

그 결과, 자격이 검증되지 않은 자가 사회복지시설에서 감사일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

4. 관련자 주장 및 판단

가과는 사회복지시설 관리 시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이 종사자를 채용하기 전 범죄경력(전력) 조회결과에 따라 채용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지 관리하여야 하나 업무 숙지 미흡으로 해당 내용을 점검·확인하지 못하고, 이번 감사 기간 중 채용 시 조회가 누락되었던 종사자에 대한 조회를 실시하도록 안내하여 종사자에 대한 자격 검증을 진행하고 있고, 향후 관련 업무를 숙지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후 채용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가평균수는

-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등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결격사유 및 학대 관련 범죄 경력 조회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등에 따라 사회복지

지시설 범죄조회 등을 미실시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결격사유 및 학대 관련 범죄조회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별표] 사회복지시설 범죄경력 미조회 내역 : “생략”

| | | | | | |
|------------------|----------------|-------------|--------|----------|------------------|
| 일련번호 | 24 | 감사자 | ☆급 ○○○ | | 공 개(○) 비공개() |
| 신분상 조치인원 | - | 재정상 조치방법 | - | 재정상 조치금액 | - |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 가평군 가과 (나관) | 처분요구일자 | | 회신기일 | |

경 기 도

주의요구

제 목 사회복지시설 공공요금 감면 미적용
소관기관(부서) 가평군 (가과)
조치기관(부서) 가평군 (나관)
내 용

1. 업무 개요

가평군 가과(이하 “가과” 라 한다)는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1항, 「노인복지법」 제47조, 「장애인복지법」 제81조, 「아동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에 운영비 등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고 있다.

2. 판단 기준(관계 법령 등)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4항에 따르면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하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재무회계는 그 설립목적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또한, 「한국전력공사 기본공급 약관」 제67조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이라 한다)는 2006년부터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2016년 12월까지의 공급가액의 20%, 2017년 1월 이후로는 공급가액의 30%, 심야전력의 경우에는 약 31.4%의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 제1항, 「노인복지법」 제42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61조, 「아동복지법」 제13조 제3항 및 제59조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가과는 사회복지시설이 한전의 전기요금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데도 규정을 알지 못하여 교부받은 법정 운영비에서 전기요금을 추가로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가과는 [표 1]과 같이 가평군○○○○○○○지원센터 등 ○○개 사회복지시설이 전기요금 감면을 신청하지 않아 30%에 해당하는 감면예상액 8,134,917원을 감면받지 못하고 납부하고 있는데도 공공요금 할인에 대한 안내 등을 철저히 하지 않았다.

[표 1] 사회복지시설 전기요금 납부현황 (2023. 1.~2024. 3.) : “생략”

4. 관련자 주장 및 판단

가과는 한전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제도 존재에 대한 인지 부족으로 제도에 대한 안내를 소홀히 하였고, 감사 기간 중에 감면 미적용 시설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감면제도와 신청을 하도록 안내하였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복지시설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가평군수는

- 앞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 규칙」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 | | | | | |
|------------------|----------------|-------------|--------|----------|------------------|
| 일련번호 | 25 | 감사자 | ☆급 ○○○ | | 공 개(○) 비공개() |
| 신분상 조치인원 | ○명 | 재정상 조치방법 | - | 재정상 조치금액 | - |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 가평군 가과 (나관) | 처분요구일자 | | 회신기일 | |

경 기 도

훈계 · 주의요구

제 목 민간 제안 도시개발구역 지정 업무 처리 부적정

소관기관(부서) 가평군 (가과)

조치기관(부서) 가평군 (나관)

내 용

1. 업무 개요

가평군수는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제9조에 따라 부지면적 10만㎡ 미만의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개발계획의 수립 등을 경기도지사로부터 위임받아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가평군 가과(이하 “가과”라 한다)는 「도시개발법」 제3조, 제4조, 제11조에 따라 부지면적 10만㎡ 미만의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개발계획의 수립과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의 처리 등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고 있다.

2. 판단 기준(관계 법령 등)

「도시개발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도지사는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11조 제6항

에 따르면 같은 조 제1항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⁶⁰⁾가 시장·군수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대상 구역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지상권자를 포함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자는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서를 관련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3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제안을 받은 시장·군수는 제안 내용의 수용 여부를 1개월 이내에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도시개발업무지침」 1-6-1.에 따르면 개발구역 안의 토지면적에 대한 동의면적을 산정함에 있어서 동의대상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부에 등재된 토지 소유자 및 지상권자로 한다고 되어 있고, 1-6-2.에 따르면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면적을 산정함에 있어서 국공유지를 포함하여 산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1-6-4.에 따르면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에 대한 동의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개발구역안의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또는 지상권을 가진 자의 동의는 각각 해당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면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한 동의로 산정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가과는 「도시개발법」 제11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하는 자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대상 구역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 및 지상권자의 동의를 받았는지 확인한 후 내부 검토를 거쳐 제안을 수용하고 「도시개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절차를 거쳐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이하 “구역 지정 등”이라 한다)을 하여야 했다.

60) 「도시개발법」 제11조 제1항 제7호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 제8호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자 중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9호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면허를 받는 등 개발계획에 맞게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9의2호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부동산개발업자, 제10호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제11호 「도시개발법」 제1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10호에 해당하는 자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8조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가과는 [표 1]과 같이 2020. 10. 0. ■■■과 ●●●가 제출한 ㄱ지구, ㄴ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서에 대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내부 검토를 거쳐 2020. 11. 0. 제안을 수용하였고, 「도시개발법」 제3조 내지 제9조에 따라 주민의견 청취, 관계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20××. ×. ×. ㄱ지구, ㄴ지구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 수립 및 지형도면(이하 “구역 지정 등” 이라 한다)을 가평군 고시 제20××-×××호로 고시하였다.

[표 1] 가평 ㄱ지구, ㄴ지구 도시개발사업 개요 “생략”

그런데 [표 2]와 같이 ■■■이 20××. ×. ×. 가과에 ㄱ지구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당시 대상 구역에 포함된 국공유지, 사유지의 소유자 및 지상권자(이하 “토지소유자 등” 이라 한다)의 동의율은 62.3%로 「도시개발법」 제11조 제6항에서 규정한 대상 구역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는데, 가과는 ■■■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제안을 수용하고 20××. ×. ×. ㄱ지구 구역 지정 등을 고시하는 등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표 2] 가평 ㄱ지구, ㄴ지구 도시개발사업 개요 “생략”

또한 가과는 20××. ×. ×. ㄴ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한 ●●●에 대한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율도 66.5%로 제안자가 「도시개발법」 제11조 제6항에서 규정한 토지 동의요건을 확보하지 아니하였는데도 ●●●의 제안을 수용하고 ㄴ지구 구역 지정 등을 고시하는 등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로서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그 결과 가과는 민간사업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의 법적 동의요건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기간을 단축시켜 조기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등의 행정효력이 발생하도록 민간사업자에게 편의를 제공하였으며, 도시개발구역 지정 등에 대한 사회적 형평성과 도시행정의 신뢰를 훼손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4. 관련자 주장 및 판단

가과는 해당 도시개발구역내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에 어떠한 건축물도 존재하지 않아 지상권을 설정한 재산권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고, 특수목적법인(SPC)으로 설립된 ■■■과 ●●●가 「도시개발법」 제1항 제11호에서 규정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는 시행자 자격요건의 부합 여부와 도시개발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 업무에 집중되어 지상권자 동의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였다면서 도시개발구역 지정 등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 시 지상권자의 의견이 없었고, 구역 지정 등을 고시하기 전에 지상권이 해제되어 ㄱ 및 ㄴ지구의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율이 충족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선처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지상권은 해당 토지에 동산을 부속시켜 이용할 수 있는 권원⁶¹⁾으로서 현재 건축물이 없다고 하더라도 지상권자가 그 토지에 동산을 부속시킬 수 있는 권원은 그대로 존재하므로, 해당 토지에 건축물이 없다는 사실로 인해 「도시개발법」 제11조 제6항에서 규정한 지상권자의 동의 절차가 불필요하거나 지상권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하나, 이는 그릇된 판단에서 비롯된 주장이라 하겠다.

다만 가과가 가평군 고시 제20××-×××호로 구역 지정 등을 고시하기 전에 지상권의 말소 등기로 인해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율이 충족된 점은 인정되나, 「도시개발법」 제11조 제6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기 위한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요건은 제안일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2018년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 회신 사례집」⁶²⁾에 수록된 바와 같이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에 있어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할 경우 구역 지정 제안서를 반려 처리하고 다시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요건을 갖추어 추진하도록 조치하였어야 하므로 관련자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61) [대법원 2023도11885 2023. 11. 16.] 민법 제256조에서 부동산에의 부합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권원’은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과 같이 타인의 부동산에 자기의 동산을 부속시켜서 그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고 판결한 사례

62)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에 있어 토지소유자 동의요건 미충족 시 보완 가능여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수용 또는 사용방식의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제안자는 법정 자격요건과 동의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 바,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에 필요한 동의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법률행위 위반으로 제안의 효력이 없으므로, 지정 제안에 대하여 반려 처리한 후 필요시 법정 요건을 갖추어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 된다고 기재되어 있음 (2018. 3., P.45)

조치할 사항 가평군수는

- ㄱ지구, ㄴ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등에 관한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아래 관련자를 「가평군 적극행정 면책과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 도시개발이 신뢰와 공정에 기초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도시개발구역 지정 등에 관한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 | | | | | |
|------------------|-----------------------|-------------|--------|----------|------------------|
| 일련번호 | 26 | 감사자 | ☆급 ○○○ | | 공 개(○) 비공개() |
| 신분상 조치인원 | ○명 | 재정상 조치방법 | - | 재정상 조치금액 | - |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 가평군 가과, 나과 (다관) | 처분요구일자 | | 회신기일 | |

경 기 도

훈계 · 시정요구

제 목 건설사업자의 직접 시공계획 준수 확인 등 관리 소홀
소관기관(부서) 가평군 (가과, 나과)
조치기관(부서) 가평군 (다관)
내 용

1. 업무 개요

가평군 가과, 나과(이하 “가과 등” 이라 한다)는 1공사 등 ○건의 건설공사를 발주하고 공사감독 업무를 수행하였다.

2. 판단 기준(관계 법령 등)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 제1항에 따르면 건설사업자는 1건 공사의 금액이 100억 원 이하로써 도급금액이 70억 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노무비 중 일정 비율에 따른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하게 되어 있고,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5에 따르면 직접시공계획의 통보는 별지 제22호의6서식에 의한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와 직접시공 및 하도급할 공사량·공사단가 및 공사금액이 분명하게 적힌 공사내역서, 예정공정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발주자는 건설사업자가 제2항에 따라 직

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나 직접시공계획에 따라 공사를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제4항에 따르면 공사의 발주자는 제2항에 따라 직접시공계획을 통보받은 경우 제1항 본문에 따른 직접 시공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감리가 있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감리를 수행하는 자로 하여금 그 준수 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99조 제4호에 따르면 건설사업자가 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해당 건설사업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가과 등은 「공사 등 ○건의 건설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건설사업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로부터 직접시공계획서를 제출받아 직접 시공 및 하도급할 공사량에 대한 공사내역서과 예정공정표를 검토하고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노무비 중 일정 비율 이상의 노무비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하는지 등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가과 등은 20××. ×. ××.부터 현재까지 「공사 등 ○건의 건설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건설사업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감독 업무를 [표]와 같이 수행하였다.

[표] 직접시공계획서 제출의무 위반 건설사업자 현황 “생략”

그런데 가과 등은 건설사업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30일이 지나도록 직접시공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건설공사의 준공일까지 직접시공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는데도 도급받은 건설사업자에게 직접시공계획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건설사업자가 직접시공계획을 준수하는지 확인하는 등의 공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 제2항에 따라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 제4호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하여야 하는데

도 행정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등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에게 편의를 제공하였다.

그 결과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건설산업기본법」의 제정 취지와 사회적 형평성을 훼손하였고, 행정처분 대상인 건설사업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모순된 행정 결과를 초래하였다.

4. 관련자 주장 및 판단

가과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에 따라 도급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건설사업자로부터 직접시공계획서를 제출받아야 하지만, 도급계약이 체결된 후에도 직접시공계획서를 제출받지 않거나 제출 기한이 지나 제출받았는데도 같은 법 제99조 제4호에 따라 건설사업자에게 과태료 처분을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면서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업무 연찬을 통해 공사감독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가평군수는

-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의 직접 시공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공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아래 관련자를 「가평군 적극행정 면책과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 앞으로, 건설공사 추진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통보기한을 위반한 건설사업자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 | | | | | |
|------------------|----------------|-------------|--------|----------|------------------|
| 일련번호 | 27 | 감사자 | ☆급 ○○○ | | 공 개(○) 비공개() |
| 신분상 조치인원 | ○명 | 재정상 조치방법 | - | 재정상 조치금액 | - |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 가평군 가과 (나관) | 처분요구일자 | | 회신기일 | |

경 기 도

훈계요구 및 권고 · 통보

제 목 개발행위허가 업무 소홀
소관기관(부서) 가평군 (가과)
조치기관(부서) 가평군 (나관)
내 용

1. 업무 개요

가평군 가과(이하 “가과”라 한다)는 난개발 방지와 토지의 계획적 관리를 위하여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 및 사후관리, 준공검사, 위법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등의 업무를 하고 있으며, 20××. ×. ×.부터 20××. ×. ×.까지 가평군 상면 ▲▲번지 외 ○필지에 단독주택 및 진입로 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이하 “▲▲ 개발행위”라 한다)를 ○차례(단순 기간연장 허가 제외)에 걸쳐 허가 및 변경 허가하였다.

2. 판단 기준(관계 법령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6조 제1항에 따르면 공작물의 설치, 절·성토, 정지,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제2항에 따르면 개발행위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으며, 국토계획법 제58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및 [별표 1의2] 개발행위허가 기준(2. 개발행위별 검토사항)에 따르면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절토 및 성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옹벽 또는 석축의 설치 등 군계획조례가 정하는 안전조치를 하도록 되

어 있다.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1375호, 2021. 3. 31.시행) 2-1-2 (1)항에 따르면 개발행위허가 신청서에는 기반시설의 설치, 용지 확보, 위해 방지 등에 관한 계획서와 설계도서 및 예산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2-1-3 (1)과 (2)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개발행위허가 신청내용이 허가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으며, 3-4-4 방재기준에 따르면 토지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절·성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 옹벽 또는 석축을 설치할 경우에는 관련법령⁶³⁾ 및 군 계획조례에서 정하는 안전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가평군 군계획조례」 제20조 제3호 및 제6호에 따르면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 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를 준용하고,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메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 하되 배수 및 땅의 압력 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가과는 단독주택 및 진입로 부지를 조성하고자 해당 토지의 형질변경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서에 첨부된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 방지 등에 관한 계획서와 설계도서, 예산내역서를 확인하고, 신청내용이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의2] 개발행위허가 기준과 「가평군 군계획조례」 제20조를 준수하고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가과는 20××. ×. ×. ●●●이 신청한 ▲▲ 개발행위 건을 최초 허가하였고, 20××. ×. ×. ●●●이 허가면적 증가(증가된 면적 21㎡), 진입로 변경, 비탈면에 설치하는 구조물을 당초 보강토 옹벽에서 석축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개발행위 변경허가 신청 건을 처리하였으며, 이후에도 수허가자인 ●●●으로부터 허가면적 증가, 진

63)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호에 따르면 옹벽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콘크리트 구조로 하되 [별표 6]의 옹벽에 관한 기술적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건설공사비탈면 설계기준」 제14장에 따르면 돌쌓기 옹벽은 옹벽의 전면·배면 경사, 뒷길이, 뒤채움, 기초 등 공법 적용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입로 변경을 원인으로 한 개발행위 변경허가 신청서를 접수받아 20××. ×. ×. 및 20××. ×. ×.에 이를 허가하였다.

[표 1] ▲▲번지 외 ○필지 개발행위허가 추진경과 “생략”

그러나, ▲▲ 개발행위의 수허가자인 ●●●이 20××. ×. ×.부터 20××. ×. ×.까지 가과에 신청한 개발행위허가(변경) 신청서에 첨부된 횡단면도를 살펴 보면, 절·성토 구간에 석축(찰쌓기)이 높이 4.0~4.5m로 계획되어 있으나 [표 2]와 같이 석축의 경사도, 돌의 뒷길이 및 뒷채움 두께, 기초의 크기, 배수시설 설치 등을 표시한 상세도면이 누락되어 있거나 위해 방지 계획서를 첨부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가과는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절·성토 사면에 대한 보호대책, 안전조치 등의 보완 요구나 이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아니하는 등 개발행위허가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표 2] 절·성토 구간에 설치하는 높이 5.0m이하의 석축(찰쌓기) 구조 기준 “생략”

그 결과 개발행위 허가권자로서 대상지 절·성토 비탈면이 잠재적 붕괴 위험에 처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4. 관련자 주장 및 판단

가과는 5.0m 미만의 석축의 설치에 일반적으로 표준화 되어 있다고 생각하여 세부적인 도면 검토는 없었으며, 공작물(석축 등)의 안전성 검토 등을 소홀히 한 것을 인정하고 이번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며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가평균수는

-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절·성토 사면에 대한 보호대책, 안전조치 등을 소홀히 하여 개발행위허가 한 아래 관련자를 「가평균 적극행정 면책과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 앞으로 개발행위허가 시 관계 법령과 조례를 준수하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가평군 상면 ▲▲번지 외 ○필지 개발행위허가 건은 준공 전까지 절·성토 사면의 보호와 석축의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 토지의 계획적인 관리, 개발행위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조치 및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력 및 기능 보강, 전담부서 신설 등 업무 개선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권고)

| | | | | | |
|------------------|----------------|-------------|--------|----------|------------------|
| 일련번호 | 28 | 감사자 | ☆급 ○○○ | | 공 개(○) 비공개() |
| 신분상 조치인원 | - | 재정상 조치방법 | - | 재정상 조치금액 | - |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 가평군 가과 (나관) | 처분요구일자 | | 회신기일 | |

경 기 도

주의요구

제 목 건설공사로 인한 손실 보상계획 수립 등 사전 행정조치 소홀
소관기관(부서) 가평군 (가과)
조치기관(부서) 가평군 (나관)
내 용

1. 업무 개요

가평군 가과(이하 “가과” 이라 한다)는 자라섬에 관광·레저 인프라를 구축하여 대표 관광지로 조성하고자 ‘●●●사업 보행교(1단계) 및 보도교(2단계) 설치공사(이하 ‘보도교 공사’ 라 한다)’를 추진하고 있다.

[표] ●●●사업 보행교, 보도교 설치공사 개요 “생략”

2. 판단 기준(관계 법령 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이라 한다) 제61조에 따르면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제62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해당 공익사업을 위한 공사에 착수하기 이전에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에게 보상액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76조 제1항에 따르면 광업권·어업권·양식업권 및 물(용수시설을 포함한다) 등의 사용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는 투자비용, 예상 수익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

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가과는 보도교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토지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이해 관계인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토지보상법의 손실보상 절차에 따라 적절한 행정조치를 이행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가과는 사업시행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하였거나 예측결과의 부적정 등으로 사업지역 또는 주변지역의 자연 및 생활환경이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에 대한 별도의 추가 환경영향 저감대책(민원 해소방안 포함)을 강구하여 시행하고 사업으로 발생하는 손실은 관련 법과 규정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며 20××. ×. ×. ■■■과 보행교 및 보도교 공사에 대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 협의하였고, 가평군 나과 및 다과가 20××년부터 20××년까지 보도교 공사 주변 지역에 치어, 다슬기 등을 방류하는 ‘▲▲▲사업’을 추진한 사실을 알 수 있었으며, ㄱ법인의 어업인들이 공사 주변 지역에서 어업을 하고 있어 건설공사로 인해 어획량이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가과는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민원 해소를 위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사업을 충분히 설명하거나 건설공사 시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의 보상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 또는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등 건설공사의 사전 행정조치를 소홀하게 처리하였다.

그 결과 공익사업으로 인한 주민들의 손실보상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행정신뢰가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4. 관련자 주장 및 판단

가과는 당면 업무처리로 인해 보도교 공사에 대한 주민설명 및 손실보상 계획을 수립하는데 소홀했던 점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면서 빠른 시일 내에 관계 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실시하고, 어업 피해조사를 거쳐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보상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가평균수는

- 건설공사로 인해 불필요한 민원이 발생하거나 피해받은 주민들이 보상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건설공사 사전 행정조치를 철저히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 | | | | | |
|------------------|----------------|-------------|--------|----------|------------------|
| 일련번호 | 29 | 감사자 | ☆급 ○○○ | | 공 개(○) 비공개() |
| 신분상 조치인원 | ○명 | 재정상 조치방법 | - | 재정상 조치금액 | - |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 가평군 가과 (나관) | 처분요구일자 | | 회신기일 | |

경 기 도

훈계 · 주의요구 및 통보

제 목 ■■■사업 설계변경 부적정

소관기관(부서) 가평군 (가과)

조치기관(부서) 가평군 (나관)

내 용

1. 업무 개요

가평군 가과(이하 ‘가과’ 라고 한다)는 ■■■사업을 하면서 ▲▲설치를 위해 20××. ×. ×. ㄱ과 공사 도급계약을, 20××. ×. ×. ㄴ과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시행하였다.

[표] ■■■사업 ▲▲설치공사 개요 “생략”

2. 판단 기준(관계 법령 등)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발주청은 건설공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시공 관리의 난이도가 높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건설공사, 발주청의 기술인력이 부족하여 원활한 공사 관리가 어려운 건설공사, 그 외 건설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발주청이 인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건설사업관리의 업무

범위는 설계 전 단계, 기본설계 단계, 실시설계 단계, 시공 단계 등 단계별로 구분하고, 단계별 업무내용은 건설공사의 사업비 관리,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등으로 구분하게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7항에 따르면 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건설사업관리의 업무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되어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은 2020. 12. 16. 국토부 고시 제2020-987호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이하 “건설공사 업무지침”이라 한다)을 고시하여 발주청, 건설사업자,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업무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세부기준을 규정하였다.

건설공사 업무지침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공사감독자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6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청이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으로 해당 공사 전반에 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건설공사 업무지침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발주청은 공사 착공 즉시 암판정위원회를 상시 구성·운영하고 암반선 노출 즉시 암판정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직접 육안으로 확인하고, 정확한 판정을 위해 필요한 추가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제2항 제3호에 따르면 암판정위원회는 암판정 대상 공종의 중요성, 수량, 시공현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토질 및 기초분야 기술지원기술인, 공사감독자, 외부전문가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으로 구성하고 시공회사의 현장대리인은 반드시 입회하게 되어 있다.

건설공사 업무지침 제67조 제8항에 따르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현지 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설계변경사유서, 설계변경도면, 개략적인 수량 증감내역 및 공사비 증감내역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이를 검토하여 필요시

기술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발주청의 방침을 득한 후 시공하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제11항에 따르면 발주청은 제8항에 따라 설계변경 방침 결정 요구를 받은 경우에 설계변경에 대한 기술검토를 위하여 발주청의 소속 직원으로 기술검토팀(T/F)을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단순한 사항은 7일 이내, 그 외의 사항은 14일 이내에 방침을 확정하여 공사감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가과는 건설공사 업무지침 제68조에 따라 건설공사 착공과 동시에 안전위원회 상시 구성·운영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실시하고, 정확한 판정을 위해 필요한 추가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같은 지침 제67조 제11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부터 설계변경 방침 결정 요구를 받은 경우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제출한 설계변경 사유서, 수량 증감내역, 설계변경 도서 등을 면밀하게 검토·확인하고 기술검토를 거쳐 방침을 확정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가과는 ■■■사업의 일환으로 ▲▲설치공사(이하 ‘▲▲설치공사’라고 한다)를 시행하고자 ㄱ을 시공자로, ㄴ을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이하 “시공관리자”라 한다)로 선정하고, 가과 소속 ●●●을 공사감독자로 선임하여 20××.×.×.부터 20××.×.×.까지 공사를 감독하였다.

시공자는 20××.×.×. 교량의 교대가 설치되는 BH1, BH2 지점에서 실시한 지반조사보고서를 근거로 BH2 구간의 교대 구조물과 진입도로(이하 “설계변경 구간”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토사 및 암종별 수량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실정보고서를 20××.×.×. 시공관리자에게 제출하였고, 시공관리자는 20××.×.×. 설계 당시 지반지질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현장의 지질이 설계서와 상이하고 연암과 발파암이 많이 늘었다는 내용의 감리보고서를 가과에 제출하였다.

그런데 가과는 안전위원회를 구성·운영하지 아니하여 건설공사 업무지침 제68조 제1항을 위반하였고, 별도의 기술검토 없이 공사감독자, 시공자와 시공관리자의

의견을 토대로 설계변경 구간의 암종별 수량을 산정하는 등 감리보고서, 설계변경 도서 등에 대한 검토·확인을 소홀히 하여 20××. ×. ×. 발주청 방침을 확정하였다.

그리고 시공자가 제출한 지반조사보고서의 제2장 지층분류 기준에 따르면 건교부 표준품셈은 탄성파속도에 따라 화강암류의 암편내압강도가 70~100MPa이면 연암으로 분류하고 있고, 국토해양부 및 서울시 표준지반분류와 한국토지공사 암반분류기준은 강도만을 분류기준으로 고려하는 경우 해당 기준을 적용할 수 없고 자연함수비 상태에서의 일축압축강도, 코어회수율(TCR), 암질표시율(RQD), 시편상태 및 형상, 균열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류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지반조사업체인 ○○○○이 실시한 지반조사결과는 BH2 지점의 시추 깊이 -1.5m에서 채취한 코어의 일축압축강도(85.7MPa)만을 암종의 결정적 판단 근거로 삼고 있다.

또한 아래의 [그림]과 같이 설계변경 구간의 지층이 담황색 화강암류로 균열과 절리가 발달해 있고 코어회수율이 저조하였으며 0.0m ~ -3.0m까지 연암과 보통암이 섞여 있는 지반이라면서 암반선의 위치 및 수량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는 등 지반조사보고서가 부실하게 작성되었는데도, 가과는 건설공사 업무지침 제68조 제1항에 따라 정확한 암판정을 위해 필요한 추가적인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등 공사 감독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그림] 설계변경 구간(BH2 지점)의 시추 주상도 및 지층설명 “생략”

그 결과 가과는 ▲▲설치공사의 암판정을 위한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감리보고서, 설계변경 도서 등에 대한 기술검토와 확인을 소홀히 하는 등 설계변경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여 발주청으로서 사회적 형평성과 건설행정의 신뢰를 훼손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4. 관련자 주장 및 판단

가과는 공사감독자가 공무원 임용(202○. 1. ○○.) 후 업무 경험이 적어 건설공사 업무

지침 제68조 제1항에 따른 암판정 관련 규정을 인지하지 못하였지만, 현장을 확인하고 시공자와 시공감리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설계변경 구간의 암종을 대부분 보통암으로 판정하였으며, 건설공사 업무지침 제68조 제1항에 따라 현장에서 육안 혹은 정성적인 기준에 따라 결정하는 암판정위원회의 암판정보다 공사감독자가 지반조사 보고서의 일축압축강도를 토대로 시공자와 시공감리자의 의견을 종합하여 암종을 판단하는 것이 더욱 객관적인 근거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건설공사 업무지침 제6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토질 및 기초분야 기술지원기술인, 외부전문가, 공사감독자, 시공감리자 등으로 구성된 암판정위원회가 시공회사의 현장대리인을 입회시키고 지반조사를 통해 획득한 시편의 일축압축강도, 코어회수율(TCR), 암질표시율(RQD), 시편상태 및 형상, 균열상태, 시공현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암종류를 판단하는 것이 공사감독자 1인이 암종을 판단하는 것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공사감독자가 시공자와 시공감리자의 의견을 종합하여 암종류를 판단하는 것이 암판정위원회의 암판정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고 하는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조치할 사항 가평균수는

- ■■■■사업 ▲▲설치공사의 설계변경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아래 관련자를 「가평균 적극행정 면책과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 앞으로, 건설공사의 설계변경 시 관계 법령, 규정 등을 준수하고, 판단 근거, 산정 기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 설계 변경사항의 검토·확인을 소홀히 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건설사업관

리기술인을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별점 부과
를 검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 | | | | | |
|------------------|----------------|-------------|--------|----------|------------------|
| 일련번호 | 30 | 감사자 | ☆급 ○○○ | | 공 개(○) 비공개() |
| 신분상 조치인원 | ○명 | 재정상 조치방법 | - | 재정상 조치금액 | - |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 가평군 가과 (나관) | 처분요구일자 | | 회신기일 | |

경 기 도

훈계 · 주의요구

제 목 생활숙박시설 건축물대장 분리 신청 처리 부적정
소관기관(부서) 가평군 (가과)
조치기관(부서) 가평군 (나관)
내 용

1. 업무 개요

가평군 가과(이하 “가과” 라 한다)는 「건축법」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물대장규칙” 이라 한다)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분리·결합신청 처리 등 건축물대장 관리업무를 하고 있다.

2. 판단 기준(관계 법령 등)

「건축법」 제2조 제2항,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1 제15호 가목,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⁶⁴⁾ 제3조에 따르면 세부 용도가 생활숙박시설인 건축물은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그 내용은 [표 1]과 같다.

[표 1]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 제3조

1.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활숙박업 설비기준에 적합할 것
2. 프런트데스크, 로비(공용 화장실을 포함한다)를 설치할 것
3. 린넨실(침구, 시트, 수건 등 천 종류를 수납하는 방을 말한다)을 30객실당 1개소 이상을 설치할 것
4. 관광객을 위한 식음료시설(레스토랑 등)을 설치할 것
5. 객실의 출입제어, 보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실관리(제어)시스템을 도입하여 설계도서에 포함할 것
6. 각 구획별 발코니를 설치할 경우 외기에 개방된 노대 형태로 설치하여야 하며, 발코니 설치 시 「건축물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 제4항에 따른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할 것

자료: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 제3조 발췌

그리고 건축물대장규칙 제12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

64) [시행 2021. 11. 2.]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04호, 2021. 11. 2., 제정]

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 등”이라 한다)은 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하는 경우는 사용승인된 내용에 따라 건축물대장을 생성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건축물대장규칙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건축물의 소유자가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이나 합병에 따라 건축물대장을 나누거나 합치려는 경우 또는 대지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미 분할이나 합병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건축물대장의 분리·결합신청서에 건축물현황도⁶⁵⁾, 현황측량성과도⁶⁶⁾, 토지 등기사항증명서⁶⁷⁾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등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시장·군수 등은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한 때에만 제1항에 따라 건축물대장을 나누거나 합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아울러, 「건축법」 및 건축물대장규칙의 유권해석권자인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전자민원처리공개)을 통하여 건축물대장의 분리 관련 질의 민원에 공통적으로 건축물대장규칙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안내하고 있고, ‘건축행위는 대지 단위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하나의 대지를 둘 이상의 대지로 나누거나 여러 대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는 등 대지변동이 생기는 경우에는 새로이 건축행위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대지변동이 있는 경우 건축물 및 대지는 현재 시점(민원처리를 신청한 시점)의 관계 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덧붙여 답변한 민원⁶⁸⁾ 처리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

따라서 가과는 사용승인된 내용에 따라 생성된 건축물대장에 관하여 건축물의 소유자로부터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둘 이상의 대지로 분할 하려고 건축물대장의 분리 신청을 받은 경우는 이에 따라 대지변동이 있는 건축물 및 대지가 신청 시점의 「건

65) 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함

6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에 따라 지적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경계 복원측량도로 갈음할 수 있음

67) 등기필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음

68) 민원제목: 건축물대장 분리와 관련해서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접수번호: 1AA-1709-073509

축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한 때에만 건축물대장을 나눌 수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가과는 [표 2]와 같이 상면 ■■■ ㄱ, ㄴ, ㄷ의 생활숙박시설 신축신고(건축주: □□□) ●건을 20××. ××. ××. 각각 사용승인 하면서 [표 1]과 같은 생활숙박시설의 구조를 갖추기 위하여 각 대지에 관리동을 포함하여 건축물대장 총 ●부를 생성하였지만, [표 3]과 같이 20××. ×. ××. 건축물의 소유자인 □□□이 제출한 건축물대장의 분리 신청서 ●건을 처리하면서 분할 하려는 각 대지의 건축물이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 제3조에 적합한 구조인지에 대한 검토 없이 20××. ×. ×. 총 ●부의 건축물대장을 총 ●●부로 분리한 사실이 있다.

그 결과 생활숙박시설의 프런트데스크, 로비의 역할을 하는 관리동과 숙박시설이 분리되어 숙박시설의 구조와 형태를 갖추지 못하게 됨으로써 적절한 숙박시설이 제공되도록 규제하고 있는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취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 2] 생활숙박시설 사용승인 및 건축물대장 생성 현황 “생략”

[표 3] 건축물대장 분리 신청 처리 현황 “생략”

4. 관련자 주장 및 판단

가과는 이번 감사 결과를 인정하며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생활숙박시설의 건축물대장 분리 신청 처리 업무를 철저히 하겠고, 「행정기본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감사 기간인 20××. ×. ××. 해당 건축물대장 분리 신청 처리를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며, 건축물대장을 복원한 점 등을 고려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가평균수는

- 생활숙박시설의 건축물대장 분리 신청 처리 업무를 소홀히 한 아래 관련자를 「가평균 적극행정 면책과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라 「훈계」 처분하

시기 바랍니다. (훈계)

- 앞으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에 따라 생활숙박시설의 건축물대장 분리 신청 처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 | | | | | |
|------------------|----------------|-------------|--------|----------|------------------|
| 일련번호 | 31 | 감사자 | ☆급 ○○○ | | 공 개(○) 비공개() |
| 신분상 조치인원 | - | 재정상 조치방법 | - | 재정상 조치금액 | - |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 가평군 가과 (나관) | 처분요구일자 | | 회신기일 | |

경 기 도

주의요구

제 목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업무처리 소홀
 소관기관(부서) 가평군 (가과)
 조치기관(부서) 가평군 (나관)
 내 용

1. 업무 개요

가평군 가과(이하 “가과”라 한다)는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에 따라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건축물(이하 “위반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건축주등⁶⁹⁾에게 시정명령⁷⁰⁾을 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2. 판단 기준(관계 법령 등)

「건축법」 제79조 제1항 및 제80조 제1항에 따르면 시장·군수 등 허가권자는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주등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해체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건축법」 제80조 제5항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⁷¹⁾

69)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

70) 해체·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

71) 「가평군 건축 조례」 제36조 제3항에 따라 1년에 1회로 규정함

만큼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국토교통부는 해당 조문은 1년에 부과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횟수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대 2회 이내로 제한하기 위하여 규정하는 것으로 시정명령 이후의 이행강제금 부과 및 최초의 시정명령 이후의 반복 부과는 허가권자의 재량행위가 아니라고 유권해석⁷²⁾ 하고 있다.

따라서 가과는 위반건축물 건축주등에게 시정명령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연 1회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가과는 [표 1]과 같이 20××. ×. ×.부터 20××. ×. ××.까지 총 ●●●개소의 위반건축물의 건축주등에게 시정명령을 하였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개소 중 ●●개소의 위반건축물의 건축주등에게 이행강제금을 연 1회 반복 부과하지 않았다.

[표 1]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현황 “생략”

이로 인해 [표 2]와 같이 ×년 ×개월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하지 않은 ●●개소의 위반건축물이 방치되었고, 반복 부과하지 않은 이행강제금 추정액 누계가 234,729,370원에 달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 2]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반복 미부과 현황 “생략”

아울러 가과 A 등 ▲▲명은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업무를 담당하면서 [표 3]과 같이 ●●개소의 위반건축물에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하지 않은 건이 총 ●●●건에 달하였다.

[표 3] 업무 담당자별 이행강제금 반복 미부과 현황 “생략”

4. 관련자 주장 및 판단

72)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2998(2022. 4. 1.)호

가과는 이번 감사 결과를 인정하며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가평군수는

- 앞으로,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위반건축물의 건축주등에게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업무를 철저히 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 | | | | | |
|------------------|----------------|-------------|--------|----------|------------------|
| 일련번호 | 32 | 감사자 | ☆급 ○○○ | | 공 개(○) 비공개() |
| 신분상 조치인원 | - | 재정상 조치방법 | - | 재정상 조치금액 | - |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 가평군 가과 (나관) | 처분요구일자 | | 회신기일 | |

경 기 도 시정요구

제 목 임시사용승인 기간 만료 건축물 관리 소홀
소관기관(부서) 가평군 (가과)
조치기관(부서) 가평군 (나관)
내 용

1. 업무 개요

가평군 가과(이하 “가과” 라 한다)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를 받은 건축물의 사용승인과 임시사용승인 업무를 하고 있다.

2. 판단 기준(관계 법령 등)

「건축법」 제22조 제3항에 따르면 건축주는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다만, 제2호로 건축주가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견폐율, 용적률, 설비, 피난·방화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⁷³⁾로서 기간을 정하여 임시로 사용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에 따르면 임시사용승인의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다. 다만, 허가권자는 대형 건축물 또는 암반공사 등으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긴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건축법」 제79조 제1항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

73) 허가권자는 건축물 및 대지의 일부가 법 제40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8조까지,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제64조, 제67조, 제68조 및 제77조를 위반하여 건축된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임시사용을 승인하여서는 아니 됨

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해체·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가과는 건축물의 임시사용승인 기간이 만료되고도 임시사용승인 기간을 연장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있는 건축주등에게 사용금지 명령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가과는 [표]와 같이 상면 ■■■■ ㄱ 상에 신축 신고한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등 ●건의 건축신고 건축물의 임시사용승인 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임시사용승인 기간을 연장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있는 건축주등에게 사용금지 명령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하지 않았고, 이번 종합감사로 인하여 감사 기간인 20××. ×. ××. 이 되어서야 건축주에게 임시사용승인 기간 만료 통보 및 건축물 사용중지 명령을 한 사실이 있다.

[표] 임시사용승인 기간 만료 건축물 현황 “생략”

그 결과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축물이 사용되고 있는 등 임시사용승인 기간 만료 건축물이 관리되지 않고 있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4. 관련자 주장 및 판단

가과는 감사 결과를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임시사용승인 기간 만료 건축물 관리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조치할 사항 가평군수는

○ 앞으로, 임시사용승인 기간 만료 건축물 관리업무를 철저히 하고,

-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임시사용승인 기간 만료 건축신고 2건의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받은 후 건축물을 사용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 | | | | | |
|------------------|----------------------|-------------|--------|----------|------------------|
| 일련번호 | 33 | 감사자 | ☆급 ○○○ | | 공 개(○) 비공개() |
| 신분상 조치인원 | - | 재정상 조치방법 | - | 재정상 조치금액 | - |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 가평군 가과,나과 (다관) | 처분요구일자 | | 회신기일 | |

경 기 도

주의요구

제 목 정기 하자 검사업무 소홀
 소관기관(부서) 가평군 (가과, 나과)
 조치기관(부서) 가평군 (다관)
 내 용

1. 업무 개요

가평군 가과 및 나과(이하 “가과 및 나과” 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이라 한다)에 따라 “ㄱ 건립공사” 및 “ㄴ 증축 공사” 계약을 시행하였고 목적물의 하자 검사 등 사후관리 업무를 하고 있다.

2. 판단 기준(관계 법령 등)

지방계약법 제20조 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⁷⁴⁾ 중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요구하거나 보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제71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에 하자가 발생하면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하자보수기간을 정하여 하자보수를 이행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74)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별표 4에 따라 1년부터 10년으로 정함

또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9조 제1항 및 제3항은 영 제70조에 따라 하자검사를 하는 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 검사를 하여야 하고, 하자 검사의 결과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가과 및 나과는 공사계약 목적물의 하자 발생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 검사를 하여야 하고, 하자 검사 결과 하자가 발견된다면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하자보수기간을 정하여 하자보수를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가과 및 나과는 [표]와 같이 “ㄱ 건립공사” 및 “ㄴ 증축 공사” 계약 목적물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고, 가과의 경우 2023년도 공사 준공 시점에 부설시공 등의 민원으로 가평균 자체 감사기구로부터 공사감독 업무 처리 소홀로 지적된 사례가 있었던 만큼 정기 하자 검사업무를 철저히 하여야 했는데도 감사 기간인 20××. ×. ×.이 되어서야 첫 하자 검사를 시행하였으며, 나과의 경우 20××. ×. ××. 정기 하자 검사 시행 이후 약 1년간 정기 하자 검사를 시행하고 있지 않다가 이번 종합감사로 인하여 하자검사를 시행하였다.

[표] 공사계약 목적물 정기 하자 검사 시행 현황 “생략”

그 결과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관리되어야 할 공사계약 목적물의 사후관리가 부실하게 운영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4. 관련자 주장 및 판단

가과 및 나과는 이번 감사 결과를 인정하며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 하자 검사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가평균수는

-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공사계약 목적물에 관한 정기 하자 검사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 | | | | | |
|------------------|----------------|-------------|--------|----------|------------------|
| 일련번호 | 34 | 감사자 | ☆급 ○○○ | | 공 개(○) 비공개() |
| 신분상 조치인원 | ○명 | 재정상 조치방법 | - | 재정상 조치금액 | - |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 가평군 가과 (나관) | 처분요구일자 | | 회신기일 | |

경 기 도

훈계 · 시정요구

제 목 ○○○○ 배출시설 행정처분 지연 및 인허가 업무 부적정 등
소관기관(부서) 가평군 (가과)
조치기관(부서) 가평군 (나관)
내 용

1. 업무 개요

가평군 가과(이하 “가과” 라 한다)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소음진동배출시설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가과는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및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 운영사항을 20××. ××. ×. 확인하여 [표 1]과 같이 행정처분(사용중지) 및 사법기관에 고발하였으며, 20××. ×. ××. 사업자가 제출한 대기배출시설 및 소음배출시설 설치 신고서를 수리하였고, 같은 해 ×. ××. 사업자가 제출한 대기배출시설 가동개시 신고서를 수리⁷⁵⁾하였다.

[표 1] 대기배출시설 및 소음진동배출시설 행정처분 및 신고 수리 현황 “생략”

2. 행정처분 지연 처리 및 현장점검 부실 등

가. 판단 기준(관계 법령 등)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및 제38조에 따르면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시·도지사⁷⁶⁾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자에게는 그 배출시설의 사용중지를

75) 대기배출시설 가동개시일자 : 20××. ×. ××., 소음진동배출시설 : 가동개시 신고 의무 없음

76)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제9조 제2항에 따라 대기배출시설 허가·신고,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 권한 시장·군수 위임

명하여야 하며, 그 설치장소가 다른 법률에 따라 그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 및 제18조에 따르면 배출시설 설치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자에게 그 배출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여야 하며, 다른 법률에 따라 그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되는 장소이면 그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거나 배출시설의 변경을 완료하여 그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가동하려면 미리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⁷⁷⁾에게 가동개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제21조에 따르면 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결과 법령 위반사항을 확인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필요한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제8조 제6항에 따르면 자치단체의 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4조 내지 제35조에 따라 가동개시 신고 또는 시운전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가동개시신고를 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이 허가사항과의 일치여부 등을 현장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가과는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및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 운영사항을 확인한 날로부터 5일 이내 필요한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여야 했고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일부터 15일 이내 가동개시신고를 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이 신고사항과 일치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가과는 20××. ××. ×. 대기배출시설 및 소음진동배출시설 미신고 설치 운영을

77)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제9조 제2항에 따라 대기배출시설 가동개시 및 현지확인 권한 시장·군수 위임

확인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데도 ×××일 지연한 20××. ×. ××. 대기배출시설 및 소음진동배출시설 행정처분(사용중지) 사전통지를 하였다.

그리고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 현장확인하여야 하는데도 ×××일 지연한 20××. ×. ××. 현장점검하면서 대기배출시설(건조시설) 누락 등 배출시설 신고사항과 현장 설치·운영 상황이 일치하지 않는데도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적정하게 설치 운영 중이며 점검결과 이상이 없다고 출장복명하면서 가동개시 현장확인 업무를 부실하게 처리하였다.

한편, 2024년 경기도 종합감사 관련 20××. ×.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신고사항 적정성 현장확인을 하면서 기 신고한 배출시설 외 연료를 사용하는 대기배출시설(건조시설⁷⁸⁾ 5대 총 18m³)이 무허가 건축물(비가림시설) 내 설치 운영 중임을 확인하였음에도 전기만을 사용하여 연료사용으로 인한 오염물질 발생이 없고 수증기만 발생하는 비배출시설이라고 판단함에 따라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 운영에 따른 위반확인서 징구 등 필요한 조치 취하지 않았고,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에 따른 행정처분 및 같은 법 제89조에 따른 고발 등 조치를 감사일 현재(20××. ×. ××.)까지 취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가과는 환경법규 위반사업장에 불이익을 주시기 위한 행정처분 절차를 지연처리하면서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저해하였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일치여부를 부실하게 현장 점검하면서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 운영사항을 확인하였는데도 비배출시설로 판단하여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을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3. 불법 용도변경 건축물 발생 초래

가. 판단 기준(관계 법령 등)

「건축법」 제19조, 제79조, 제110조에 따르면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

78)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르면 건조시설 용적이 5m³이상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 (건조시설 5대는 최초 민원 현장확인일 20××. ××. ××. 이전부터 설치 운영 중이며, 사업자가 대기배출시설 신고를 하지 않았고 가과도 위법 건축물에 설치한 건조시설이 비배출시설이라고 판단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음)

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하고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군(제조업소)에서 상위군인 산업 등의 시설군(공장)으로 변경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지 않고 용도를 변경한 경우 허가권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르면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너. 제조업소의 제조·가공·수리 등을 위한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이라고 되어 있다.

따라서 가과는 건축물 용도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에서 대기배출시설 및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할 경우 건축물 용도를 공장으로 허가를 받았는지 확인한 이후에 대기배출시설 가동개시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가과는 20××년 ×월 대기배출시설 및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 신고에 따른 배출시설 입지 가능여부 「건축법」 검토의견 “건축물 대장상 용도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4호 너의 제조업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필요용도에 따라 관련 건축 인허가(용도변경)를 득하시기 바랍니다.” 를 회신받아 대기배출시설 및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수리하면서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 용도 변경(제조업소 → 공장)허가를 반드시 이행해야 된다고 사업자에게 안내하였는데도 사업자가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사업자가 제출한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가동일자 : 20××. ×. ××.) 신고서에 대해서 보완 또는 반려 처리하여야 하는데도 별다른 검토 없이 그대로 수리하였다.

[표 2] 도정공장 건축물대장 및 건축법 위반 현황 “생략”

그 결과 가과는 건축물 용도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에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수리하여 불법 용도변경 건축물 발생을 초래하였다.

4. 관련자 주장 및 판단

가과는 사업자가 배출시설 인허가 수리 조건인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를 받지 않았으나 해당 소재지의 위반건축물 원상복구 이행 및 토지 소유관련 법적 소송진행으로 「건축법」 허가기간이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내부방침을 받아 방지시설의 설치 후 정상적인 운영으로 오염물질을 저감을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보호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대기배출시설 가동개시 신고를 수리하였으며, 가동개시 신고에 따른 현장확인 지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신고사항 일치여부,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 이행 여부 등의 확인이 미흡하였던 것에 대해서는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조속한 시일 내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 운영여부를 현장확인하여 적정 관리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가평군수는

- 대기배출시설 및 소음진동배출시설 행정처분 및 인허가 업무를 소홀히 한 아래 관련자를 「가평군 적극행정 면책과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 운영사항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 | | | | | |
|------------------|----------------|-------------|--------|----------|------------------|
| 일련번호 | 35 | 감사자 | ☆급 ○○○ | | 공 개(○) 비공개() |
| 신분상 조치인원 | ○명 | 재정상 조치방법 | - | 재정상 조치금액 | - |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 가평군 가과 (나관) | 처분요구일자 | | 회신기일 | |

경 기 도

훈계 · 시정요구

제 목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 운영 사업장 소극 대응

소관기관(부서) 가평군 (가과)

조치기관(부서) 가평군 (나관)

내 용

1. 업무 개요

가평군 가과⁷⁹⁾(이하 “가과” 라 한다)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폐수배출시설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가과는 20××. ×. ×. □□기업에서 돌가루를 포함한 물이 하천에 유입된다는 공익 제보 신고에 따라 같은 해 ×. ××. 현장확인 결과 토석채취 허가받은 사업장에서 화강암을 절단하는 작업을 위해 냉각수로 사용하는 물이 1일 0.1m³이상으로 폐수가 발생한다고 확인하여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 운영사항을 [표 1]과 같이 행정처분 및 사법기관에 고발을 하였다.

[표 1]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 운영 사업장 행정처분 현황 “생략”

가과는 20××. ××. ××. 행정처분(사용중지) 이행실태 1차 현장 확인한 후 같은 해 ××. ××. 행정처분(사용중지) 이행실태 2차 현장 확인결과 채석장에서 발생 폐수를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 재이용하는 방법으로 외부로 유출하지 아니 하고 조업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비금속 광물 광업시설의 폐수배출시설 제외 규정⁸⁰⁾

79) 가평군 조직개편(20××. ×. ××.) : 나과 → 가과

80)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 폐수배출시설 : 3)비금속 광물 광업시설, 제외시설 : 토사석 광업(채취·가공)시설로서

을 근거로 행정처분(사용중지)을 종료하였다.

2. 판단 기준(관계 법령 등)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제44조에 따르면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의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해당 배출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그 설치장소가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장소인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 점검 규정」 제22조에 따르면 행정처분한 사업장에 대하여 행정처분 이행 완료 시까지 처분내용에 대한 이행여부를 관리하여야 하며, 이행상태가 부실하거나 처분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가과는 토사석 광업시설에서 발생 폐수를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 재이용하는 방법으로 외부로 유출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하여 폐수배출시설에서 제외 조치하였다면 추후 해당 사업장에서 폐수가 채취지점 또는 가공시설의 외부로 유출되는 경우를 확인하였을 때와 폐수배출시설(세륜시설) 설치 운영한 사실을 알았을 때 지체 없이 「물환경보전법」 제44조 및 제76조에 따라 행정처분(사용중지) 및 고발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폐수배출시설(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 대상⁸¹⁾)로 엄격히 관리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가과는 [표 2]와 같이 채석장에서 뿌연 물이 내려와 하천이 오염되었다는 민원에 대하여 20××. ×. ×.(1차) 돌가루가 하천에 유입된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민원 발생 최소화를 행정지도하였고, 같은 해 ×. ××.(2차) □□기업에서 공정 중 토사가 조종천에 배출됨을 확인하였는데도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 운영으로 행정처

폐수를 해당 채취지점 또는 가공시설의 외부로 유출하지 아니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81)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득할 경우 : 「물환경보전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비점오염원의 신고대상 사업 및 시설에 해당(비금속광물 광업, 부지면적 : 1만㎡ 이상), ※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관리기관 : 한강유역환경청

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표 2] □□기업 관련 하천오염 민원에 따른 출장복명 결과 “생략”

한편, 가과는 20××. ×. ××. “의회 요구자료 제출 요청” 가평군 다관에서 발송한 문서를 접수하고 같은 해 ×. ××. 비산먼지 업무 담당자 외 ○명이 현장 출장하여 석재 가공 작업으로 인한 소음, 먼지 피해여부를 조사하였고 사업장 입구에 설치된 수조식 세륜시설⁸²⁾(28m³/일)을 사진 촬영하여 같은 해 ×. ××. 출장복명서에 첨부하였다.

또한 2024년 경기도 종합감사 관련 20××. ×. ××. 토석 채취 사업장의 폐수배출시설 설치 운영여부를 확인을 위해 현장 확인하면서 사업장 입구에 20××년부터 설치 운영하고 있는 덤프트럭 바퀴 등 세척을 위한 폐수배출시설(세륜시설 28m³/일)을 확인하였는데도 폐수배출시설 해당여부에 대해 검토하지 않았고 이 사실을 누락하여 출장복명하면서 「물환경보전법」 제44조 및 제76조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감사일 현재(20××. ×. ××.)까지 취하지 않았다.

[그림] □□기업 폐수 유출 및 미신고 세륜시설 “생략”

4. 관련자 주장 및 판단

가과는 행정처분(사용중지) 종료 후 2차례의 □□기업 관련 민원현장 사업장에 대해 ①우천시 돌가루가 섞인 탁수 발생, ②사업장 인근 구거에 설치된 사방댐 준설 작업 중 탁수 발생으로 각 민원의 유출 오염수가 채석작업 중 발생한 폐수가 아니거나 폐수가 유출된 상황이 확인되지 않아 미신고 폐수배출시설로 조치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①우천시 돌가루가 섞인 탁수 발생 대해 채취지점(돌가루)에서 발생한 폐수가 사업장 밖으로 유출된다면 폐수배출시설에 해당될 것이라고 환경부가 유권해석하였고, ②□□기업 인근 사방댐 준설 작업 중 탁수 발생으로 주장하나 출장복명서에 공정

82) 폐수배출시설 : 81)운수장비 수선 및 세차 또는 세척시설, 항공사진 확인 결과 20××년부터 설치 운영 중

중 발생한 토사가 조종천으로 배출됨을 확인하였다고 출장복명한 점, 출장복명서에 현장사진을 첨부하지 않은 점, 위 주장에 대한 증거자료 및 현장사진을 감사기간에 제출하지 못한 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면 민원의 유출 오염수가 채석작업 중 발생한 폐수가 아니거나 폐수가 유출 또는 폐수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가과는 □□기업에 설치되어 있는 폐수배출시설(세륜시설)에 대해 재확인 후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으며, 향후 배출시설 인허가 및 지도점검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가평군수는

-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 운영 사업장을 확인하고도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고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아래 관련자들을 「가평군 적극행정 면책과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 미신고 폐수배출시설(세륜시설) 설치 운영 사업장에 대하여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고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 | | | | | |
|------------------|----------------|-------------|--------|----------|------------------|
| 일련번호 | 36 | 감사자 | ☆급 ○○○ | | 공 개(○) 비공개() |
| 신분상 조치인원 | ○명 | 재정상 조치방법 | - | 재정상 조치금액 | - |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 가평군 가과 (나관) | 처분요구일자 | | 회신기일 | |

경 기 도

훈계 · 주의요구

제 목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가동시작 업무 처리 부적정
 소관기관(부서) 가평군 (가과)
 조치기관(부서) 가평군 (나관)
 내 용

1. 업무 개요

가평군 가과⁸³⁾(이하 “가과” 라 한다)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가동시작 신고 및 이에 따른 오염도 검사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2. 판단 기준(관계 법령 등)

「물환경보전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배출 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설치를 완료하여 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가동하려면 미리 환경 부장관⁸⁴⁾에게 가동시작 신고를 하여야 하며, 가동시작신고를 받은 시·도지사⁸⁵⁾는 시운전 기간이 지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가동상태를 점검하고 수질오염물질을 채취한 후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하도록 하여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폐수처리방법이 생물화학적 처리방법인 경우 가동시작일로부터 50일(다만, 가동 시작일이 11월 1일부터 다음 연도 1월 31일에 해당하는 경우: 70일),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방

83) 가평군 조직개편(20××. ×. ××.) : 다과 → 가과

84) 「물환경보전법」 제74조 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

85)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제9조 제2항에 따라 1,2종 배출시설 및 산업단지 내 설치된 배출시설 등을 제외하고 배출시설 등의 가동시작 신고 업무가 시장·군수에게 재위임

법인 경우 가동시작일로부터 30일을 시운전 기간으로 부여⁸⁶⁾하도록 되어 있고 이 경우 시운전기간에는 「물환경보전법」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가과는 폐수배출시설 가동시작 신고 수리 후 시운전 기간이 지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가동상태를 점검하고 수질오염물질을 채취한 후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하여야 했고, 시운전 기간 부여 근거 규정이 없는 폐수처리방법이 전량 재이용 또는 위탁처리할 경우에는 시운전 기간을 부여하지 말아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경기도 종합감사 자료 작성범위(20××. ×. ×. ~ 20××. ×. ××.) 내 폐수배출시설 가동시작 현지확인 업무의 적정성 등을 조사한 결과 가과는 [표]의 내용과 같이 폐수배출시설 가동시작 신고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가동상태 점검을 하면서 □□기업 등 ○개소에 대해 최장 ×××일에서 최단 ×일까지 현장확인을 지연하여 처리하였고, ○○기업은 감사일 현재(20××. ×. ××.)까지 수질오염도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기업 등 ○개소는 폐수처리방법이 재이용 또는 위탁처리이므로 시운전기간 부여대상이 아닌데도 시운전일수 30일을 부여한 사실이 있다.

[표] 폐수배출시설 가동시작에 따른 업무 부적정 처리 현황 “생략”

그 결과 가동시작 신고를 한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가동 상태 점검 지연 처리 및 시운전 대상 잘못 부여, 오염도검사 누락하면서 수질오염방지시설 시운전 기간 종료 후 적기에 오염도검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4. 관련자 주장 및 판단

가과는 지적된 사항을 수용하면서 관련 법령과 규정을 명확하게 숙지하여 향후 폐

86) 폐수처리방법이 재이용, 위탁처리 등은 공공수역에 방류수를 배출하지 않아 시운전 기간 부여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수배출 사업장을 관리함에 있어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가평군수는

-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시작 현장확인 업무를 소홀히 한 아래 관련자들을 「가평군 적극행정 면책과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 앞으로,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가동시작 관련 업무를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 | | | | | |
|------------------|----------------|-------------|--------|----------|------------------|
| 일련번호 | 37 | 감사자 | ☆급 ○○○ | | 공 개(○) 비공개() |
| 신분상 조치인원 | ○명 | 재정상 조치방법 | - | 재정상 조치금액 | - |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 가평군 가과 (나관) | 처분요구일자 | | 회신기일 | |

경 기 도

훈계 · 주의요구

제 목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가동개시 현장확인 업무 소홀

소관기관(부서) 가평군 (가과)

조치기관(부서) 가평군 (나관)

내 용

1. 업무 개요

가평군 가과⁸⁷⁾(이하 “가과” 라 한다)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대기 오염 물질 배출 시설의 인허가 및 가동개시 신고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 판단 기준(관계 법령 등)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거나 변경을 완료하여 그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가동하려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서에 배출시설 설치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⁸⁸⁾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제8조 제6항에 따르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4조 내지 제35조에 따라 가동개시신고 또는 시운전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5일 이내 가동개시신고를 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이 허가(신고)사항과 일치한지 여부 등을 현장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87) 가평군 조직개편(20××. ×. ××.) : 다과 → 가과

88)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제9조 제2항에 따라 1,2종 배출시설 및 산업단지 내 설치된 배출시설 등을 제외하고 배출시설 등의 가동개시 신고 업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가과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신고 수리 후 15일 이내에 현장에 출장하여 허가사항과 일치하게 설치 운영하는지 등을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경기도 종합감사 자료 작성범위(20××. ×. ×.~20××. ×. ××.) 내 대기배출시설 가동개시 현지확인 업무의 적정성 등을 조사한 결과 가과는 [표]와 같이 □□기업 등 26개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신고 업무를 처리하면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이 허가(신고)사항과 일치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최장 ×××일에서 최단 ×일까지 현장확인을 지연하여 처리하였다.

[표] 가동개시 신고수리 후 현장확인 지연 사업장 내역 “생략”

그 결과 가동개시 신고를 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이 허가사항과 일치하게 설치 운영하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데도 지연 확인하면서 적기에 적정한 조치를 못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4. 관련자 주장 및 판단

가과는 지적된 사항을 수용하면서 관련 법령과 규정을 명확하게 숙지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가평균수는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 현장확인 업무를 소홀히 한 아래 관련자들을 「가평균 적극행정 면책과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 앞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한 가동개시 관련 적기에 현장확인 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 | | | | | |
|------------------|----------------|-------------|--------|----------|------------------|
| 일련번호 | 38 | 감사자 | ☆급 ○○○ | | 공 개(○) 비공개() |
| 신분상 조치인원 | ○명 | 재정상 조치방법 | - | 재정상 조치금액 | - |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 가평군 가과 (나관) | 처분요구일자 | | 회신기일 | |

경 기 도

훈계 · 주의요구

제 목 쓰레기 종량제봉투 검수 절차 이행 소홀
소관기관(부서) 가평군 (가과)
조치기관(부서) 가평군 (나관)
내 용

1. 업무 개요

가평군 가과⁸⁹⁾(이하 “가과” 라 한다)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 및 「가평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처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 판단 기준(관계 법령 등)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5항에 따르면 군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종량제 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에는 배출양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가평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8조 제4항에 따르면 군수는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 봉투의 규격, 인장강도(引張強度) 및 접합 상태 등 단체표준규격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검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붙임 3] 6. 시험의뢰 및 결과 확인에

⁸⁹⁾ 가평군 조직개편(20××. ×. ××.) : 다과 → 가과

따르면 검수공무원은 시료를 개봉이 불가능한 봉투 등에 담아 봉인한 후 공인 시험기관에 겉모양, 찢수, 인장장도, 신장율, 노치후 인열강도, 함량 및 접합상태 등에 관하여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⁹⁰⁾의 단체표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관한 시험을 의뢰한 후 그 결과를 직접 통보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가과는 쓰레기 종량제봉투 검수 전 제작된 봉투가 표준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공인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그 결과를 직접 통보 받은 후 시험결과가 적합할 경우에만 검수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가과는 [표]와 같이 계약일 기준 20××. ×. ××.부터 20××. ××. ××.까지 쓰레기 종량제봉투 ■,■■■■,■■■■매(계약건수: ●건) 납품받을 때 공인시험기관에 단체표준규격 시험을 의뢰하지 않아 단체표준규격 준수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검수하였고, 20××. ×. ××.부터 20××. ×. ××.까지 쓰레기 종량제봉투 ■,■■■■,■■■■매(계약건수: ●건)를 납품받으면서 공인시험기관에 단체표준규격 시험을 의뢰하였는데도 시험성적서 결과를 받기 전에 검수하였다.

[표] 쓰레기 종량제봉투 단체표준규격 준수여부 미확인 검수 내역 “생략”

그 결과 제작된 쓰레기 종량제봉투의 단체표준규격 준수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종량제봉투를 납품받아 배부하면서 기준에 부적합한 봉투가 유통될 수 있는 우려를 낳게 하였다.

4. 관련자 주장 및 판단

가과는 지적된 사항을 수용하면서 향후 쓰레기 종량제봉투의 제작 관련 법규와 규정을 철저하게 숙지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가평균수는

90) 한국프라스틱시험원(KPTI) : 국제공인 시험기관(서울시 중구 마른내로 138 (쌍림동) ※ 방문, 우편, 택배를 통해 시험 접수 가능)

- 쓰레기 종량제봉투 검수 절차 이행을 소홀히 한 아래 관련자들을 「가평군 적극행정 면책과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 앞으로,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단체표준규격 준수 여부를 확인한 후 검수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 | | | | | |
|------------------|----------------|-------------|--------|----------|------------------|
| 일련번호 | 39 | 감사자 | ☆급 ○○○ | | 공 개(○) 비공개() |
| 신분상 조치인원 | - | 재정상 조치방법 | 추징 | 재정상 조치금액 | 58,110,720원 |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 가평군 가소 (나관) | 처분요구일자 | | 회신기일 | |

경 기 도 시정요구

제 목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업무 처리 부적정
소관기관(부서) 가평군 (가소)
조치기관(부서) 가평군 (나관)
내 용

1. 업무 개요

가평군 가소(이하 “가소” 라 한다)는 「하수도법」 제61조 및 「가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20조에 따라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2. 판단 기준(관계 법령 등)

「하수도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르면 건축물 등을 신축·증축하거나 용도변경하여 오수가 하루에 10m³이상 증가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공공 하수도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이라 한다)를 부담시킬 수 있으며,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가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20조에 따르면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대한 인허가 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며 가평군이 공고한 원인자부담금 단가⁹¹⁾에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⁹²⁾을 곱하여 산정하며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91) 오수 1m³/일 원인자부담금 부과액 : (개별건축물) 2,029,020원/m³/일, (타행위) 4,544,993원/m³/일(가평군공고 제2011-639호)

92)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에 따라 오수발생량 산정(환경부고시 제2009-197호)

건축물 소유자별로 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가소는 원인자부담금 부과를 위한 오수발생량 산정 시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에 따라 오수발생량을 산정하되 해당 건축물 전체의 연면적을 합산하여 오수발생량을 산정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가소의 20××년부터 20××년 ×월 ××일까지 총 ○○○건의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사항에 적정여부 조사한 결과 주 건축물이 오수발생시설이고 부속 용도(계단실, 기계실, 전기실 등)의 시설이 있는 경우 부속 용도에서 오수 발생여부와 관계없이 건축물 연면적으로 합산하여 오수발생량을 산정하여야 하는데도 [표]와 같이 가평균수 등 ●건에 대해 부속용도 면적을 누락 오수발생량을 산정하여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총 58,110,720원을 과소 부과하였다.

[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과소 부과 내역 “생략”

그 결과 가소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업무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4. 관련자 주장 및 판단

가소는 지적된 사항을 수용하면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관련 법령해석을 착오하여 처리한 사항으로 부과한 원인자부담금이 완납되었고 건축인허가 등 행정절차가 완료된 사안으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추가 부과에 대한 부작용과 관련 법령이 개정된 점을 참작하여 달라고 하였고 향후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가평균수는

○ 건축물 부속용도 면적을 누락하여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과소 부과한 총 58,110,720원을 「하수도법」 제61조 등에 따라 부과·징수하고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 | | | | | |
|------------------|----------------|-------------|--------|----------|------------------|
| 일련번호 | 40 | 감사자 | ☆급 ○○○ | | 공 개(○) 비공개() |
| 신문상 조치인원 | ○명 | 재정상 조치방법 | - | 재정상 조치금액 | - |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 가평군 가소 (나관) | 처분요구일자 | | 회신기일 | |

경 기 도

훈계 · 시정요구

제 목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위반 과태료 부과 업무 부적정
소관기관(부서) 가평군 (가소)
조치기관(부서) 가평군 (나관)
내 용

1. 업무 개요

가평군 가소(이하 “가소” 라 한다)는 「하수도법」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 판단 기준(관계 법령 등)

「하수도법」 제34조에 따르면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시설 등을 설치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7조 및 제80조 제2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에서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방류한 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33조에 따르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운영·관리할 때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하수 처리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오수처리시설은 그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침전 찌꺼기와 부유 물질 제거 등 내부청소를 연 1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고, 부득한 사유로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방류하게 되는 때에는 군수에게 미리 개인하수 처리시설의 비정상

운영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질서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르면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사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르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43조에 따르면 검사는 과태료를 최초 부과한 행정청에 대하여 과태료 재판의 집행을 위탁할 수 있고 위탁받은 행정청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집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가소는 과태료 부과에 대한 당사자의 제출의견이 “상당한 이유”에 해당하는지 임의로 확대 적용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업무의 실행력을 약화시키거나 성실하게 과태료를 납부한 군민과 형평성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상당한 이유를 적용할 때 형평성과 일관성이 있도록 업무처리하여야 한다.

또한 과태료 재판 결과에 따라 집행을 위탁받았을 때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집행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가. 방류수수질기준 위반 과태료 부과 제외 부적정

가소의 20××. ×. ×.부터 20××. ×. ××.까지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위반 과태료 부과 업무에 대하여 적정성 등을 조사한 결과 □□기업 등 ●개소에 대한 과태료 부과 처분사전통지에 따른 처분당사자 제출의견이 방류수수질기준 위반 사실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제외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는데도 [표 1]과 같이 개선 채수기한(15일) 장기간 경과 후 시료채취, 정화조 청소 등으로 인한 시료교란의 사유로

과태료 부과를 제외⁹³⁾하였다.

특히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방류수수질기준을 항시 준수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고 부득이한 사유로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방류하게 되는 때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비정상 운영 신고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였으며, 처분당사자의 제출의견인 시료교란에 대하여 의견을 수용하여 과태료 부과를 제외하기도 하고, 의견을 불수용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일관성 없는 업무를 처리하였다.

[표 1] 방류수수질기준 위반 과태료 부과 제외 사업장 현황 “생략”

나. 과태료 재판 결과에 따른 과태료 부과 누락

가소의 20××. ××. ××.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위반 과태료 부과 처분사전통지”에 대하여 처분당사자가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자 가소는 20××. ××. ××. 의정부지방법원에 “하수도법 위반 과태료 부과에 따른 과태료 재판 청구”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은 20××. ×. ××. “과태료 재판 집행의 위탁” 공문을 가소에 송부하였는데도 가소는 [표 2]와 같이 과태료 집행을 감사일 현재(20××. ×. ××.)까지 별다른 이유없이 하지 않았다.

[표 2] 과태료 재판결과에 따른 과태료 부과 미집행 내역 “생략”

그 결과 가소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의 실행력을 약화시켰고 성실하게 과태료를 납부하는 군민과의 형평성 및 공정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4. 관련자 주장 및 판단

가소는 「하수도법」 및 관련 규정에는 시료 채취장소, 시료확인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특수한 경우의 현장여건까지 반영되어 있지 않아 업무처리 절차 과정에서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하여 과태료 부과 제외하였다고 주장한다.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르면 시료를 채취할 때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시료의 교란이 일어나서는 안 되며 가능한 한 공기와 접촉하는 시간을 짧게하여 채취하도록

93) 방류수수질기준 위반 과태료 부과 제외 관련 환경부 질의회신, 타 시군 사례를 조사한 결과 개선채수 장기간 이행 지연, 시료교란으로 과태료 제외 사례 없음

규정하고 있고 시료교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방류하게 되는 때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비정상 운영 신고하도록 사업자에게 안내하는 것이 바람직했다. 그러므로 가소의 특수한 현장여건으로 관련 규정이 없어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가소는 향후 상부기관 질의 회신 등을 통해 관련법 검토에 신중을 기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가평균수는

-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위반 과태료 부과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아래 관련자들을 「가평균 적극행정 면책과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 과태료 재판 결과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집행하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및 과태료 부과 업무를 「하수도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 | | | | | |
|------------------|----------------|-------------|--------|----------|------------------|
| 일련번호 | 41 | 감사자 | ☆급 ○○○ | | 공 개(○) 비공개() |
| 신분상 조치인원 | - | 재정상 조치방법 | - | 재정상 조치금액 | - |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 가평군 가과 (나관) | 처분요구일자 | | 회신기일 | |

경 기 도

주의요구

제 목 개발부담금 부과 부적정
소관기관(부서) 가평군 (가과)
조치기관(부서) 가평군 (나관)
내 용

1. 업무 개요

가평군 가과(이하 “가과”라 한다)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개발이익 환수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 사업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업무를 처리하였다.

2. 판단 기준(관계 법령 등)

개발이익환수법 제5조에 따르면 해당하는 개발사업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8조 및 제13조는 개발부담금의 부과 종료 시점의 부과 대상 토지의 가액(이하 “종료시점지가”라 한다)에서 부과 개시 시점의 부과 대상 토지의 가액(이하 “개시시점지가”라 한다)과 부과 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개발비용의 합을 뺀 금액에 부담률을 곱한 금액으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개발이익환수법 제11조 제2항은 면적 2,700㎡ 이하의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개발비용을 산정할 때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가과는 개발이익환수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면적 2,700㎡ 이하의 대상사업

개발비용을 산정할 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을 적용하고,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해당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 종료시점지가에 개시시점지가와 정상지가상승분,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개발비용의 합을 뺀 금액을 부과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가과는 개발이익환수법 제11조에 따라 면적 2,700㎡ 이하의 개발사업의 경우에만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을 적용하여야 했지만, [표 1]과 같이 면적 2,700㎡ 이상의 사업 ○건에 표준비용을 적용하여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표 1] 표준비용 부적정 적용 사항 “생략”

결과적으로 표준비용 적용 대상사업이 아닌 사업에 표준비용을 적용하여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였고, 그 결과 법 취지인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하는 취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4. 관련자 주장 및 판단

가과 개발부담금 담당자 이미나는 업무가 과도하여 개발부담금 산정 시 표준비용 적용에 대해 착오하여 산정였다고 인정하였다.

하지만 해당 사업이 표준비용을 적용하지 않고 허가 시 제출된 자료만으로 개발부담금을 산정하더라도 개발부담금이 발생되지 않을 점을 고려해달라고 하였고, 앞으로는 개발부담금 부과업무 시 관계법령 및 기준, 매뉴얼 등의 업무연찬을 철저히 이행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가평균수는

- 개발부담금 부과 업무 처리 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등의 관련법령과 기준 등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 | | | | | |
|------------------|----------------|-------------|--------|----------|------------------|
| 일련번호 | 42 | 감사자 | ☆급 ○○○ | | 공 개(○) 비공개() |
| 신분상 조치인원 | - | 재정상 조치방법 | - | 재정상 조치금액 | - |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 가평군 가과 (나관) | 처분요구일자 | | 회신기일 | |

경 기 도 시정요구

제 목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 소홀
소관기관(부서) 가평군 (가과)
조치기관(부서) 가평군 (나관)
내 용

1. 업무 개요

가평군 가과(이하 “가과”라 한다)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 공시법”이라 한다) 제10조와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국토교통부)(이하 “공시지가 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 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을 결정·공시하는 업무를 처리하였다.

2. 판단 기준(관계 법령 등)

부동산공시법 제10조 제1항은 국세·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같은법 제25조에 따른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 구역 안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동산공시법 제10조 제4항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가를 산정하되, 해당 토지의

가격과 표준지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공시지가지침에는 개별공시지가 산정 시 토지이용상황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고 실공사(착공신고 등 적법한 절차에 따른 실공사를 의미)를 착공한 시점 또는 개발행위 허가 등을 받고 실공사를 착공한 시점을 기준으로 건축용도 또는 부지 조성의 용도에 맞추어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민원지적과는 부동산공시법과 공시지가지침에 따라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이용상황을 건축용도 또는 부지조성의 용도에 맞추어 조사하고 토지가격 비준표를 사용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 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가과는 부동산공시법과 공시지가지침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산정 시 [표 1]과 같이 ●●필지에 대하여 20××. ×. ×.부터 20××. ×. ×.까지 단독주택 등의 용도로 실제 공사가 진행중인 토지지만 토지이용상황을 반영하지 않고 토지특성을 조사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잘못 결정하였다.

[표 1]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건축물착공등) 불일치 현황 “생략”

그 결과 부동산공시법 취지인 부동산의 가격형성과 각종 조세·부담금 등의 형평성 및 국민경제의 발전을 훼손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4. 관련자 주장 및 판단

가과는 가평군 '24년 개별공시지가 대상필지 ●●●,●●●필지에 대해 토지특성 조사기간(2×. ××. ××.~2×. ×. ××.) 동안 필지당 용도지역 변경 토지조사, 토지이용상황 변경에 따른 현장확인 등 23가지의 조사를 직원 1명이 수행하여 업무가 과도하였고, 이번 감사에 지적된 ●●필지에 대하여 조속히 정정 처리할 계획이며, 앞으로는 개별공시지가 업무 시 관련법령 및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 등을 충분히 숙지하여 토지특성을 정확하게 조사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가평균수는

- 부적정하게 결정·고시된 개별공시지가 ●●건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과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결정·고시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 | | | | | |
|------------------|-------------------|-------------|--------|----------|------------------|
| 일련번호 | 43 | 감사자 | ☆급 ○○○ | | 공 개(○) 비공개() |
| 신분상 조치인원 | - | 재정상 조치방법 | - | 재정상 조치금액 | - |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 가평군 가과 (나관) | 처분요구일자 | | 회신기일 | |

경 기 도

시정요구

제 목 인·허가 시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실 여부 확인 소홀
 소관기관(부서) 가평군 (가과)
 조치기관(부서) 가평군 (나관)
 내 용

1. 업무 개요

가평군 가과(이하 “가과”라 한다)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개발업법”이라 한다) 제4조와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실 확인 업무처리 기준」(이하 “부동산개발업처리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개발허가 등 부동산개발 관련 허가업무를 처리하였다.

2. 판단 기준(관계 법령 등)

부동산개발업법 제4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축물의 연면적이 3천㎡ 또는 연간 5천㎡ 이상이거나 토지의 면적이 5천㎡ 또는 연간 1만㎡ 규모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부동산개발업처리기준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개발행위의 (변경)허가·인가·지정·결정 등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부동산개발업법에 따라 등록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실 확인 신고서”와 개발업 등록증 사본 등을 제출받아 등록사실을 확인하고, 등록대상에 해당되나 개발업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허가 등의 신청자로 하여금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등록대상에 해당됨에도 신청자가 “공급외 목적(직접사용)”을 이유로 등록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 “부동산개발업 비등록 대상 확인서”를 제출받아 이후 인허가 명의변경 등 일체의 공급행위가 제한됨을 반드시 확인시켜 주어야하고, 인허가와 동시에 부동산개발업 비등록 대상확인서 및 인허가 관련 서류 사본을 인허가 등을 받은 토지 및 인허가 신청자의 영업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공급 외 목적(직접사용)”으로 신고하여 인·허가 등을 받고 인·허가 변경(인허가 명의 양도 등 사업주체 변경) 또는 타인에게 공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을 경우 관할 시·도지사가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도록 관련 증거자료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가과는 관련법을 검토하여 부동산개발의 실체가 나타나는 최초의 인허가 단계부터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인지, 직접사용 목적인지를 구분하여 서류의 제출을 받음으로써 분양 또는 직접사용 과정에서 개발업자의 위법행위가 사전에 방지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가과는 부동산개발 관련 인·허가 시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하는 경우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실 확인 신고서”와 개발업 등록증 사본 등을 제출받아 확인했어야 하고, 미등록자나 공급외 목적(직접사용)의 경우 등록하도록 안내하거나 “부동산개발업 비등록 대상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했지만 [붙임 1]과 같이 ●●건은 확인하지 못하였다.

그 결과 전문성이 부족한 개발업자의 난립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과 부동산 개발업의 체계적 관리·육성을 위해 도입된 제도를 훼손하고, 성실하게 법령을 준수하는 건축주 등과 비교하여 공정성·객관성·형평성이 저해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4. 관련자 주장 및 판단

가과는 인·허가 시 부동산개발업 관련 법령 연찬 등이 부족하여 ●●●건을 확인하지 못하였고, 앞으로는 인·허가 업무처리 시 충분한 검토와 관계 법령 및 기준, 매뉴얼 등의 업무연찬을 철저히 이행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주장하였다.

조치할 사항 가평균수는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실 확인 업무처리 기준」 등 관련법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실 확인 신고서”, “부동산개발업 비등록 대상 확인서” 등의 서류를 제출받고, 관련 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 | | | | | |
|------------------|----------------|-------------|--------|----------|------------------|
| 일련번호 | 44 | 감사자 | ☆급 ○○○ | | 공 개(○) 비공개() |
| 신분상 조치인원 | - | 재정상 조치방법 | - | 재정상 조치금액 | - |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 가평군 가과 (나관) | 처분요구일자 | | 회신기일 | |

경 기 도

주의요구

제 목 지적공부 관리 부적정
소관기관(부서) 가평군 (가과)
조치기관(부서) 가평군 (나관)
내 용

1. 업무 개요

가평군 가과(이하 “가과”라 한다)에서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관리법”이라 한다) 제78조에 따라 등록전환 또는 지목변경 신청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였다.

2. 판단 기준(관계 법령 등)

공간정보관리법 제78조에 따르면 토지소유자는 등록전환할 토지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등록전환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에 따르면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을 할 토지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공간정보관리법 제64조 제2항은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이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신청이 없으면 지적 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공간정보관리법 제84조 제2항에 따르면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가과는 형질변경 등으로 토지의 주된 용도가 변경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등록전환 업무 등을 수행할 때 지적공부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조사·측량을 통한 정정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공적장부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가과는 20××. ×. ×.부터 20××. ×. ××.까지 등록전환 신청을 받아 처리하였는데, 처리사항중 [붙임 1]과 같이 총 ●●필지의 용도가 변경되어 토지이용현황과 지목이 잘못 입력되어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감사일 현재까지 정정하지 아니하였다.

그 결과 지적공부의 관리 등을 규정하여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공간정보관리법의 취지를 훼손되었다.

4. 관련자 주장 및 판단

가과는 토지이용현황과 지목이 잘못 입력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변경하지 않은 것을 인정하며, 지목변경을 이행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는 현장조사 등을 통해 신속히 지목변경할 계획이며, 앞으로는 토지이동업무 처리 시 관계 법령 및 규정 등 업무연찬을 이행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라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가평군수는

- 지적공부 관련 업무 처리 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 | | | | | |
|------------------|----------------|-------------|--------|----------|------------------|
| 일련번호 | 45 | 감사자 | ☆급 ○○○ | | 공 개(○) 비공개() |
| 신분상 조치인원 | ○명 | 재정상 조치방법 | - | 재정상 조치금액 | - |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 가평군 가소 (나관) | 처분요구일자 | | 회신기일 | |

경 기 도

훈계 · 주의요구

제 목 계약기간 연장 부적정

소관기관(부서) 가평군 (가소)

조치기관(부서) 가평군 (나관)

내 용

1. 업무 개요

가평군 가소(이하 “가소” 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이라 한다)과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상수도 관련 공사 업무를 처리하였다.

2. 판단 기준(관계 법령 등)

지방계약법 제6조에 따르면 계약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이하 “지방계약기준” 이라 한다) 제9장 제8절 2.와 6.은 계약상대자가 불가항력의 사유,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 발주기관 책임의 착수 지연 등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사감독관은 공사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공사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재해방지를 위한 응급조치의 경우, 그 밖에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지시한 경우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지방계약기준 제9장 제8절 1.에 따르면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 기한 안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연배상금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가소는 계약당사자가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는지 관리·감독하며 관련법령과 기준에 따라 계약기간 연장 또는 공사 정지를 검토하고 준공기한 안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연배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가소는 계약기간 연장을 청구받은 경우 지방계약법과 지방계약기준에 따라 검토해야하나, [표 1]과 같이 “ㄱ 급수구역 확장공사” 등 ●건의 공사는 지방계약기준 연장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계약기간 연장일수 산출근거가 없음에도 공사 준공일자에 임박하여 공사기간 연장을 승인해주었다.

[표 1] 공사기간 연장 처리현황 “생략”

결과적으로 공사감독관이 계약상대자가 공사기간 종료 시점에 임박하여 공사를 완료하지 못할 상황에 이르게 되자 계약기간을 연장해 주었고, 그 결과 지방계약기준에서 정한 지연배상금 87,973,677원을 납부하지 않도록 특혜를 주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4. 관련자 주장 및 판단

“ㄱ 급수구역 확장공사”는 공사 구간에 대한 토지사용 승낙이 미비된 채로 가평군에서 발주 및 계약하여 토지사용 승낙에 필요한 일수만큼 계약기간 연장이 필요했다고 주장한다.

또한, 현장 여건에 따른 공사의 어려움, 행락철 민원 등으로 공사기간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이었고, 이는 관련법령과 기준에 따라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사유에 해당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하였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공사 구간에 대한 토지사용 승낙이 미비된 채로 발주 및 계약한 것을 감안 하더라도 현장 여건에 따른 공사의 어려움과 행락철 민원 등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 했다는 주장은 가소 내부 결재문서인 계약기간 연장(90일) 현장보고서(이하 “내부결재 문서”라 한다)를 보면 공사의 어려움과 민원이 아닌 사유지 토지사용 승낙을 위한 필요한 일수를 연장한다고 되어있으므로 현장 여건에 따른 공사의 어려움과 민원 등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내부결재문서에 토지사용 승낙에 필요한 연장일수의 산출근거가 없어 관련 법령과 기준에 따라 검토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공사의 어려움과 민원, 토지사용 승낙 등의 사유로 계약기간 연장이 불가피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ㄴ 급수구역 확장공사”는 현장 여건에 따른 공정 변경으로 인해 공사 소요일을 감안하여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였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계약기간 연장(122일) 현장보고서를 보면 연장일수(122일)에 대한 산출근거가 없어 소요일을 감안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공정변경에 따른 소요일을 감안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마지막으로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시공사에게 특혜가 아닌 장비·노무의 중복된 투자를 유발시키는 사항으로 시공사의 공정추진에 불리하게 작용된 사정으로 판단된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가평균수는

- 공사감독 관련 계약기간 연장일수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한 아래 관련자를 「가평균 적극행정 면책과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 앞으로, 상수도 관련 공사업무 처리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 준수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